

국토종합개발계획

1972 - 1981

1971

대한민국정부

국 민 교 육 헌 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 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확정과 공고

계획의 확정

- 1971. 8. 30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
- 1971. 9. 7 국무회의 의결
- 1971. 10. 7 대통령 각하 재가

국토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각급 국토개발계획의 지침이 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별지와 같이 심의 의결함.

계획의 공고

- 1971. 10. 27 대통령 공고 제26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한다.

국토종합계획에 붙이는 말

우리의 선조가 수많은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고 지켜온 아름다운 국토를 통일의 앞날을 내다보며 바람직하고 소망스럽고 가꾸고 다듬어 당대의 우리는 물론 먼 후손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복된 생활을 이룩하게 하기 위한 국토계획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국토개발의 기본이 되는 이 웅대한 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약 10년에 걸쳐 조사연구한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10년 간(1972 - 1981)에 전개될 청사진이 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여 국민 여러분 앞에 펼쳐 놓게 되었음을 충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확정에 앞서 정부는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의 건설을 비롯하여 울산, 포항 등 대규모공업단지의 개발과 4대강유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이는 모두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좁은 국토에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로서 국토이용의 능률화와 균형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도모하는 것은 모든 국가정책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본 계획에서는 국토의 기능별 이용질서의 확립과 철도, 도로, 항만, 통신, 공업단지, 물 자원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적정한 배치를 도모하였으며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도시의 인구집중 특히 수도서울의 과대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공업의 지방분산을 통한 부진지역 개발과 농어촌발전의 기반이 되는 경지정리, 농로건설 등 농·수산업 생산기반의 혁신책과 공해방지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계획을 실시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하다한 난관과 애로가 예상됩니다. 우리는 이 민족적인 시련을 국민총력으로 극복하여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함으로써 푸른 산,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 계획된 도시, 정리된 농토, 구분된 공업지, 그 사이를 누비는 넓은 도로, 홍수와 한해를 모르고 생산과 수출이 늘어나는 복스러운 국토를 건설하여 1980년대에는 세계의

상위중진국으로서 보람찬 생활을 영위하도록 줄기찬 전진이 있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1971년 10월

대 통 령 박 정 희

국토종합계획에 붙이는 말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 보전하며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살기 좋은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모든 국가정책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국토개발은 국민경제규모의 확대와 국민생활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차원에서 국토이용 구조를 재편성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먼 장래의 국민생활 수요에 적응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국토조성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과 이에 따른 인구 및 공업의 과도집중이 용수, 교통, 주택, 학교 및 시장 등 공공시설의 부족에서 오는 이른바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또 지역적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방지한다고 하면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 과정에 따라 날이 갈수록 문제는 심각해 질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10년 앞을 전망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도시의 인구분산과 아울러 공업단지, 교통, 통신, 「에너지」 및 용수 공급망등을 짜임새 있게 체계화하는 한편 중소도시의 육성과 공해대책, 생활환경등 종합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바람직한 국토개발을 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 제시된 실천목표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간에 보였던 일치 단결된 민족의 저력을 다시 한번 되살려 살기 좋은 국토건설에 총 진군할 것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1971년 10월

국무총리 김 중 필

머 리 말

국토를 종합적으로 이용개발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196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제정과 더불어 국무총리를 회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한 10개 관계부처의 장과 민간인 전문가 22인으로 구성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가 조직되고 이어 1967년에는 고속도로와 4대강 유역개발 및 10대항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토 건설계획안이 작성되었습니다.

1968년에 20년 앞을 내다본 국토계획기본구상이 확정됨에 따라 1969년부터 국토건설종합계획은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계획안은 그동안 17개 관계부처간의 협조를 비롯하여 국토계획 심의회에서 5회, 소위원회에서 9회에 걸친 심의를 거쳤고 이 밖에도 세미나와 10회에 걸친 공청회를 가졌을 뿐 아니라 UNDP/SF작업단에 의한 2년 간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국토란 공간을 어떻게 하면 값있게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높은 인구 밀도와 급격한 공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필요성은 절박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역발전 양태는 구 질서에 의한 일부 한정된 지역편차를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차제, 개발사업은 방방곡곡에서 괄목할만한 규모와 템포로 진행되고 있음에 비추어 국토공간질서 확립을 위한 기본설계로서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 계획은 1972년부터 1981년까지 10년 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기본목표로서는 국토이용과 관리의 효율화, 개발기반의 확충, 국토가 포장하고 있는 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자연의 보로 보전 및 국민생활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실현할 정책으로서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공업기지의 구축정비와 교통, 통신, 물 자원 및 「에너지」 등 공급망의 정비 및 낙후지역 진흥을 위한 지역기능강화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계획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대도시의 인구 및 공업분산과 지방 중소 도시의 육성 및 기간적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체계 있는 정비를 통한 국민경제능력의 극대화과 지역적 자립의 조성을 유도하프로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이 계획은 국토이용질서에 주안점을 두프로서 우리가 국토에 대하여 얼마만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데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획의 사업들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책정된 것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 계획이 결코 완벽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건의 변동에 따른 탄력성이 스스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계획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허다한 난관과 애로는 물론 많은 시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국민이 일치 단결된 힘과 중단없는 전진으로 1980년대의 영광된 낙토건설을 위하여 총진군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1971년 10월

건설부장관 태 완 선

국토종합개발계획

차례

총 설

1. 국토의 자연환경	1
2.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연혁	4
3. 계획에 임한 기본자세	5
4. 계획의 성격 및 구성	5

제1부 기본계획

1. 기본목표	8
2. 개발정책	9
3. 국토이용	10
4. 국민경제	16

제2부 부문별계획

1. 산업기반의 구축	24
가. 공업개발기반의 확충	24
나. 농수산업생산기반의 혁신	34
2. 교통통신망의 정비확충	43
가. 교통시설의 정비확충	43

(1) 수송수요의 전망	43
(2)교통계획의 기본방향	45
(3) 도로계획	45
(4) 철도계획	53
(5) 항만계획	57
(6) 공항계획	60
(7) 「파이프라인」 계획	61
나. 통신시설의 정비 확충	62
3. 도시개발	67
가. 도시화추세	67
나. 도시개발의 기본방향	68
다. 권역별 도시배치와 인구배분	69
라. 광역도시계획과 용도지역제의 강화	74
마. 도시규모별 공공시설기준	74
4. 생활환경의 개선	75
가. 주택계획	75
나. 도시생활환경의 개선	76
다. 농어촌생활환경개선	80
라. 도서개발	81
마. 공해방지대책	81
5. 수자원개발	83
가. 용수수요의 전망	83
나. 기본방향	83
다. 용수공급계획	85
라. 4대강유역 종합개발	89
6. 국토보전	104
가. 조림 및 사방	105
나. 치수방재	106
다. 자연 및 문화재 보존	107

제3부 권역별 계획

1. 권역의 기본계획	112
-------------------	-----

2. 수도권정비개발의 기본구상	116
3. 태백권개발의 기본구상	124
4. 충청권개발의 기본구상	125
5. 전주권개발의 기본구상	126
6. 대구권개발의 기본구상	127
7. 부산권개발의 기본구상	128
8. 광주권개발의 기본구상	129
9. 제주권개발의 기본구상	130

제4부 계획의 관리와 집행

1. 집행수단의 설정방향	131
2. 종합적 토지이용	131
3. 개발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133
4. 도 및 군 계획 수립의 촉진	135
5. 법령정비	135
6. 국토계획의 관리	137

국토종합개발계획

< 도 표 색 인 >

도-1	국토종합개발계획도	7
도-2	기 개발지역	13
도-3	국토이용 구조전망	15
도-4	공업입지도	27
도-5	송전계통도	33
도-6	고속도로계획도	49
도-7	고속도로 영향권	50
도-8	교통시간대 형성도도	51
도-9	국도 포장계획도	52
도-10	철도, 항만, 공항계획도	56
도-11	통신망계획도	66
도-12	하천유역도	92
도-13	한강유역 물 수급도	95
도-14	낙동강유역 물 수급도	98
도-15	금강유역 물 수급도	100
도-16	영산강유역 물 수급도	103
도-17	관광「루트」	111
도-18	권역도	115
도-19	수도권 정비구상도	123
도-20	주요개발사업 상관도	138

표-1	권역구분	12
표-2	국토의 용도별 이용구분	14
표-3	경제규모	16
표-4	산업별 성장과 구조	17
표-5	주요국민경제지표	18
표-6	총투자배분	19
표-7	노동력과 산업별 고용	20
표-8	연령계층별 인구	21
표-9	민간소비지출구조예측	23
표-10	산업별국민총생산추이	24
표-11	공업화의 전망	25
표-12	공업용지 및 용수수요전망	26
표-13	동남해안 중화학공업「벨트」의 비중	28
표-14	경기만 임해 공업지의 비중	29
표-15	3대도시의 공업비중	30
표-16	대도시의 공업비중	30
표-17	지하자원개발전망	32
표-18	「에너지」수급전망	34
표-19	식량수급전망	36
표-20	농경지면적 확장지표	37
표-21	농경지증감지표	38
표-22	경지정리	38
표-23	곡물별 단위 생산추이	39
표-24	농업용수개발	39
표-25	농로 건설계획지표	40
표-26	산지 이용계획지표	41
표-27	임목축적 및 목재수급계획지표	42
표-28	수산 개발계획지표	42
표-29	경제성장과 교통신장	44
표-30	교통수요와 분담율 추이	44
표-31	도로개발지표	47
표-32	고속도로 건설계획	48
표-33	철도개발지표	54
표-34	철도건설계획	55

표-35	「컨테이너」부두건설계획	58
표-36	항만계획지표	58
표-37	주요항만하역능력추이	59
표-38	공항계획지표	61
표-39	「파이프 라인」계획	62
표-40	통신계획지표	65
표-41	도시 및 시, 읍, 면인구의 변화	67
표-42	도시화추세	68
표-43	도시인구구성	70
표-44	인구규모별 도시구성(시급도시)	71
표-45	팔중권 중심도시 인구전망	71
표-46	도시규모별 공공시설기준	72
표-47	주택수급계획지표	76
표-48	상수도계획	78
표-49	하수도계획지표	79
표-50	전국용수수요	84
표-51	전국용수(지표수)수급계획	87
표-52	다목적댐 건설계획	88
표-53	4대강유역개황	90
표-54	4대강유역개발계획 및 효과	91
표-55	한강유역개발계획	94
표-56	낙동강유역개발계획	97
표-57	금강유역개발계획	99
표-58	영산강유역개발계획	102
표-59	조립 및 사방계획	106
표-60	하천개수계획	107
표-61	국립공원계획	108
표-62	관광유치계획	109
표-63	권역별 인구계획	114

총 설

우리나라는 1961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누적된 침체상태를 벗어나 새로운 기풍아래 정부와 국민을 일체로 하는 개발의욕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경제개발을 이룩하여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두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구조에 있어 공업국의 모습을 갖추게 됨에 따라서 세계전역에 대하여 수출국의 입장에 서게 되었고 선진공업국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희망을 눈앞에 내다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업화는 급격한 도시화현상을 초래하므로서 대도시에 대한 과대한 인구집중은 소득의 지역적 격차를 가져왔다. 따라서 급격한 공업화 및 도시화에서 오는 여러 가지 폐해를 제거하고 장기에 걸친 고도성장의 합리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전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을 위한 계획이 절실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의 국토이용에 관한 문제의 소재를 밝히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살기 좋은 국민생활의 환경과 능률이 높은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획기적인 시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1. 국토의 자연환경

가. 위치

우리나라는 아세아대륙의 동북부에서 남으로 돌출한 한반도를 주체로 그 부근에 산재하는 수많은 부속도서로써 구성되어 있다.

국토의 위치를 경위도상으로 보면 남단은 제주도의 마라도남단의 $N33^{\circ}6'$ 이고 북단은 함북 은성군 북단의 $N43^{\circ}$ 이다. 또한 서단은 평북 마안도 서단의 $E124^{\circ}11'$ 이며 동단은 독도 동단의 $E131^{\circ}52'$ 이다. 이로서 위도상 약 10° , 경도상 약 8° 의 범위를 점하는 반도국이다.

나. 영역

한국의 영역은 길이 약 1,000km에 달하는 반도부를 주축으로 근해에 산재하는 대소 3,000여 개의 부속도서 주변 간석지 및 대륙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에서 간석지와 대륙붕을 제외한 육지부 면적은 약 22만km²이고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남한의 면적은 전체의 약 45%에 상당하는 98천km²를 좀 넘는다.

다. 지형

(1) 산지

한국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산악국으로 산지는 전 국토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산지는 대체로 북쪽과 동쪽이 높고, 서쪽과 남쪽이 낮으며, 척량산맥이 몹시 동쪽에 치우쳐 있어 동해 쪽이 급사면을 이루고 서해 쪽이 완사면을 이룬다.

산지는 오랫동안 침식에 의하여 삭탈된 결과 북부의 개마고원 및 그의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중산성 혹은 저산성의 산지를 이루었으나 남북성 및 동서성의 산맥배열과 이를 개척하는 하천망의 분포에 의하여 산지는 현저한 난산상태를 이루고 있다.

(2) 하천

한국의 하천은 지리관계로 동해로 유입하는 것은 대체로 그 길이가 짧고 또 급류인데 대하여 우리나라 큰 하천의 대부분은 서해 및 남해로 유입하고 극단적인 완류를 형성한다.

또 우리나라 하천의 대부분은 난산상태의 산간을 흘러 심한 곡류를 형성하고 서쪽 및 남쪽의 완사면을 흐르는 하천의 대부분은 천정천을 이루었고 또 천정천의 대부분은 평상시에는 건천을 이루고 우기에는 범람하여 홍수를 조장하고 있다. 계절에 따른 수량변화가 큰 것은 수력발전과 각종 용수수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3) 평야

우리나라 평야의 대부분은 서해 및 남해사면에 분포하고 또 서해안과 남해안은 침

수해안을 이루어 평야는 해안보다 다소 내륙에 분포한다.

홍수에 의하여 하천유역에 발달된 퇴적평야는 매우 적고 오랜동안의 침식에 의한 침식평야가 탁월하며 또 하천중류지역에 발달된 하곡평야와 내륙지방에 발달한 수많은 분지 등이 주요생산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4) 해안

한국의 동, 서, 남 3면의 해안은 각각 그 특색을 달리하고 있다. 동해안은 함경산맥과 태백산맥의 급사면이 그대로 해저로 연속되어 수심이 몹시 깊고 해안선이 매우 단조로워 곳곳에 단안을 이루고 있는 한편 해안에 따라 발달된 사주와 석호 및 사구의 배열 등은 동해안을 특징짓는 경관이다. 이에 대하여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매우 복잡하고 근해에는 수천을 헤아리는 대소의 섬이 산재하는 다도해를 이루고 있다. 수심이 얕아 간석지와 대륙붕의 발달이 현저하고 경기만의 조차는 8m에 달하므로 금후 간석지 및 대륙붕 개발이 크게 주목된다.

근해에는 한류, 난류의 교합이 있어 어장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5) 대륙붕

서남해에는 전부가 간석지를 포함한 대륙붕이나 동해면에도 상당한 대륙붕이 발달되어 수산자원의 번식 요람지임은 물론 지하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처녀지로 이의 조속한 개발이 기대된다.

라. 기후

(1) 기온

한국의 년평균기온은 남부지방이 12°~15℃이고 중부 지방은 10°~12℃, 북부 지방은 5°~10℃이며 가장 온난한 제주도가 14.7℃이고 가장 냉한한 중강진에서는 3.8℃로서 남북의 차는 약 11℃에 달한다.

또한 최한월인 1월의 평균기온은 남해안지방이 0℃ 이상을 보이고 있으나 중부지방은 -5℃이라 개마고원지방은 -10°~-20℃이며 최난월인 8월의 평균기온은 22℃ 이상의 고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후는 온대권 남부의 가장 좋은 지대에 속하는 준하추동 사계절의 기후변화가 뚜렷할 뿐 아니라 과히 춥지도 덥지도 않아 사람들은 능률적인 활

동을 할 수 있으므로 각종 산업의 발달 문화향상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기후라 하겠다.

(2) 강수

한국의 년강수량은 500~1,500mm로서 북부로 갈수록 적어지며 멸악산맥 북쪽의 북부지방은 1,000mm이하의 빈우지역을 이루고 있다. 반면 중부지방은 대체로 1,000mm이상의 강수가 있는데 특히 태백산맥 양사면과 남해안지방, 호남지방, 제주도 및 울릉도지방 등은 1,200mm이상의 다우지역을 이루고 있다.

년 강우량의 계절적 배분을 보면 하다우형으로서 여름 3개월 동안에 년강수량의 약 2/3가 집중하여 미작에 호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여름을 제외한 계절에는 대륙지방의 건조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강수량은 적다.

2.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연혁

- 1961. 10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지시
- 1962. 12 내각수반지시각서 제53호로 국토건설종합계획수립 지시
- 1963. 10 국토건설종합계획법(법률제1415호) 제정
- 1968. 12 국토계획기본구상 확정
- 1970. 1 UNDP/SF 지역계획사업단 내한
- 1971. 8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의결
- 1971. 9 국무회의 심의
- 1971. 10 대통령각하 재가
- 1971. 10 대통령공고(대통령공고 제26호)

3. 계획에 임한 기본자세

이 계획은 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전망한 전국토의 균형적 개발과 농공업의 병행발전을 이룩하고 국민경제 능률의 극대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보다 바람직한 국민생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변동과 다양화하는 국제분업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자본의 향상 및 상품의 광범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간의 교통 통신망을 정비 확충한다.

한편 이 계획은 10년에 걸친 장기적인 기본계획으로서 장래에 전개될 새로운 산업사회에 적절히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계획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정세변화에 순응하도록 한다.

4. 계획의 성격 및 구성

가. 성격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968년에 확정된 바 있는 우리 국토의 미래상을 전망한 국토계획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국토자원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계획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 계획은 1972~1981년까지 10년 간 계획기간으로 하고 앞으로 작성될 도, 군 건설종합계획 및 도시계획 등 각급 지역계획의 기본으로서 사회간접자본의 선도적 효과적인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민간자본의 투자활동을 유도 촉진한다.

나. 타부문계획과의 관계

국토가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고 산업의 기초란 점에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다른 부문의 모든 계획을 선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토와 관련된 광범한 제문제는 각기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있어 그 분야별 계획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개발 즉 제반시설의 구체적인 입지문제를 골자로 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데는 경제개발계획이나 사회개발계획과 다를 점이 없다.

그러므로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다른 부문의 정부계획과 병립하여 국가목표의 달성을 촉진하고 복지사회건설에 이바지한다.

다.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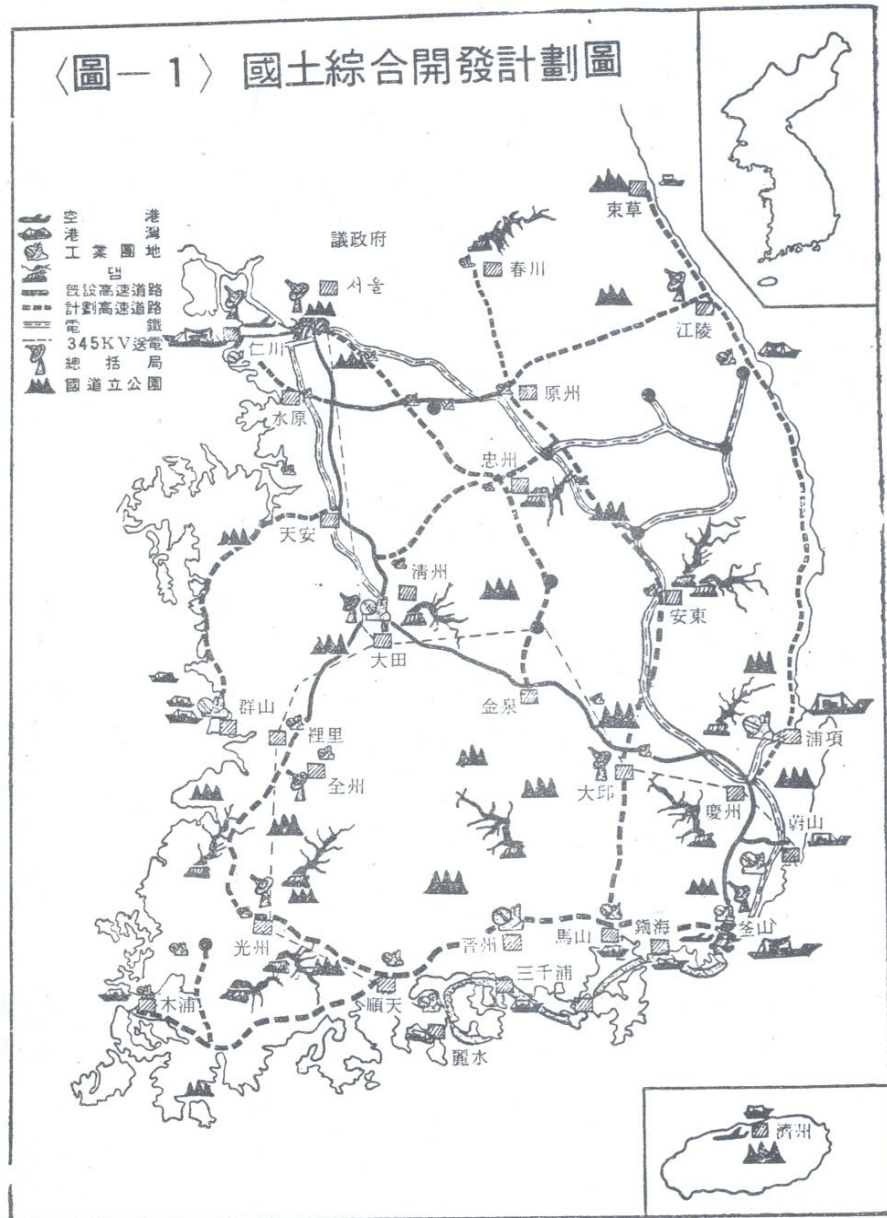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계획작성의 기본이념을 밝힌 총설과 제1부 기본계획, 제2부 부문별계획, 제3부 권역별계획, 제4부 계획의 관리와 집행으로 구성된다.

제1부 기본계획에는 1080년대의 바람직한 국토의 이용, 인구,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지표를 설정하였고,

제2부 부문별계획에서는 전국적인 관점에서 산업기반, 교통시설, 도시, 생활환경, 수자원 및 국토보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록하였다.

제3부 권역별 계획에 있어서는 전국을 8개 중권별로 각 지역의 특수성과 자립성을 감안한 권역개발의 기본구상을 제시하였고,

제4부에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등을 수록하였다.



제1부 기 본 계 획

1. 기본목표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본목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균형있게 발전하고 농업과 공업이 병행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을 조화 있게 배치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풍요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구조와 환경을 개선하는데 있다.

가. 국토이용관리의 효율화

전국의 각 지역이 능률적이고 자주적인 입장에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공간질서를 확립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다 할 수 있게 한다.

나. 개발기반의 구축

국민경제규모의 확대와 고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개발의 기초조건인 교통통신, 수자원, 동력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 정비한다.

다. 국토포장자원개발과 자연의 보호보전

국토가 포장하고 있는 모든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국내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국민소득의 증대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더욱 늘어날 국민의 자연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연경관을 항구적으로 보호 보전한다.

라.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에 수반한 공해를 비롯한 도시문제를 규제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 하에 산업시설의 적정배치와 도시와 농촌에 알맞은 공공시설을

확충 정비함으로써 문화적 생활을 영위토록 한다.

2. 개발정책

우리나라의 국토 총면적은 220,890km²이며 그중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한 국토의 면적은 98,477km²이다.

이러한 국가의 특수사정과 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에 대비하며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거점개발방식을 그 주된 수단으로 한다.

따라서 경제성이 높은 대규모사업을 우선하여 실시함으로써 그 사업의 효과가 전국토에 상호 연쇄적으로 파급하도록 한다.

가. 대규모 공업기지의 구축정비

공업화의 기간이 되고 국민경제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대규모 공업기지를 우선 배치하여 국민총생산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나. 교통통신, 수자원 및 「에너지」 공급망 정비

대도시와 각 지역 간 및 산업중심지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교통통신, 수자원 및 「에너지」 공급망을 확충 정비하여 생산의 능률화를 기한다.

다. 부진지역개발을 위한 지역기능강화

산업구조의 변화와 지역경제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부진지역과 사회적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농어촌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공공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적 자립기능을 강화한다.

3. 국토이용

가. 국토이용방향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면적 98,477km²(북한 제외)는 산림지 66,826km²(67.9%), 농경지 23,304km²(23.6%), 하천 및 기타 잡종지 8,262km²(8.4%)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지역(타지역에 중복)은 6,801km²인 6.9%에 불과하다.

이러한 국토이용은 교통수단이 발달한 서울~부산축과 대전~목포간을 연결하는 중앙지대 지향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지대의 면적은 전국의 21.7%인데 비교하여 인구는 51.5%, 공업생산액은 80.6%, 농경지면적은 28.5%로 다른 지대보다 월등한 국토이용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도-2 참조)

따라서 이 지대를 중심으로 한 인구와 산업의 과도집중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정체를 초래하게 되어 전국토의 균형적 이용의 측면에서 산업과 사회공공시설의 배치 등 체계화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이와 같은 국토이용의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전 국토를 8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의 주축을 상호 연결시켜 개발 정비토록 한다. 각기 권역은 전 국토에 있어서의 지리적 위치, 대소 중추관리기능의 집적지와 관련관계 등 각 권역이 지니는 특성을 살려 각권역에 적합한 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능률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표-1 참조>

국토이용의 기본방향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토관리를 능률화하기 위하여 국토를 다음 5개의 기능지역으로 구분하여 산업의 적지집단화를 도모함으로써 국토공간의 이용질서를 확립한다.

(1) 농업지역

농업지역은 식량 및 공업원료의 공급을 담당하는 지역으로서 인구의 증가 국민경제규모의 확대 등에 따라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생산성이 높은 우량농토의 확보를 위하여 택지, 공장용지 또는 묘지 등에 의한 농지의 타목적전용을 최대한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방법을 제도화한다.

(2) 산림지역

산림지역은 국토보전, 수원함양, 용재공급, 국민오락, 동식물의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보전한다.

그러나 제한된 국토면적에서 많은 부분을 점하는 산림지역은 산지이용구분조사를 토대로 절대림지구와 상대림지구로 구분하여 상대림지구는 개간을 적극 촉진한다.

(3)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의 시가지지역으로서 사회자본의 투하량에 있어서나 인구밀도 등 토지의 이용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제에 따라 그 이용을 규제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평면적 확산에 의한 근교우량농지의 잠식을 적극 억제토록 한다.

(4) 자연 및 문화재 보전지역

자연 및 문화재보전지역은 천연적인 자연의 경관과 역사적 문화재 등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국민정서의 계발과 함양을 위하여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 줄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보호와 보전책을 강구한다.

(5) 대륙붕지역

대륙붕지역은 해저에 발달한 약 300천km²에 달하는 육속부로서 해저광물자원 개발 가능지역이므로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적극 개발 이용토록 한다

<표-1>

권역구분

단위 : km²

4대강	8중권	주 기 능	범 위	면 적 (1970)
			32시 140군	98,477 (100)
한 강 유역권	수도권	중추관리	서울, 경기 강원도(철원)	12,395 (12.6)
	태백권	자원·산업	강원도 충북(충주, 증원, 단양, 제천)	18,540 (18.8)
금 강 유역권	충청권	농업·공업	충북(태백권포함지역 제외) 충남(서천군 제외)	13,134 (13.3)
	전주권	농업·공업	전북(남원, 순창 제외) 충남 서천군	7,134 (7.2)
낙동강 유역권	대구권	공업·농업	경북	19,798 (20.1)
	부산권	상업·공업	부산, 경남	12,321 (12.5)
영산강 유역권	광주권	농업·공업	전남 전북(남원, 순창)	13,326 (13.6)
제주권		관광·상업	제주	1,829 (1.9)

자료 : 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

나. 국토이용의 지표

국토의 총면적은 간척사업등으로 확대되어 현재의 98,477km²에서 1981년에는 98,748km²로 증대하게 될 것이다. 이 가운데 일부 농업지역은 주택지, 도로, 공장용지 등으로 잠식될 것이나 국민의 식량공급을 위한 경지면적 확보를 위하여 상대임지의 개간, 간척사업 등으로 835km²가 증대될 것이다.

한편 산림지역은 농경지역 및 목야지, 도시지역, 공장용지 등으로 전용됨에 따라 상대임지가 2,375km² 감소될 것이며 절대임지는 자연보호 및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또한 도시지역 면적은 도시화의 진전으로 현재의 6,801km²에서 1981년에는 7,234km²로 증대될 것이다.

<표-2> 국토의 용도별 이용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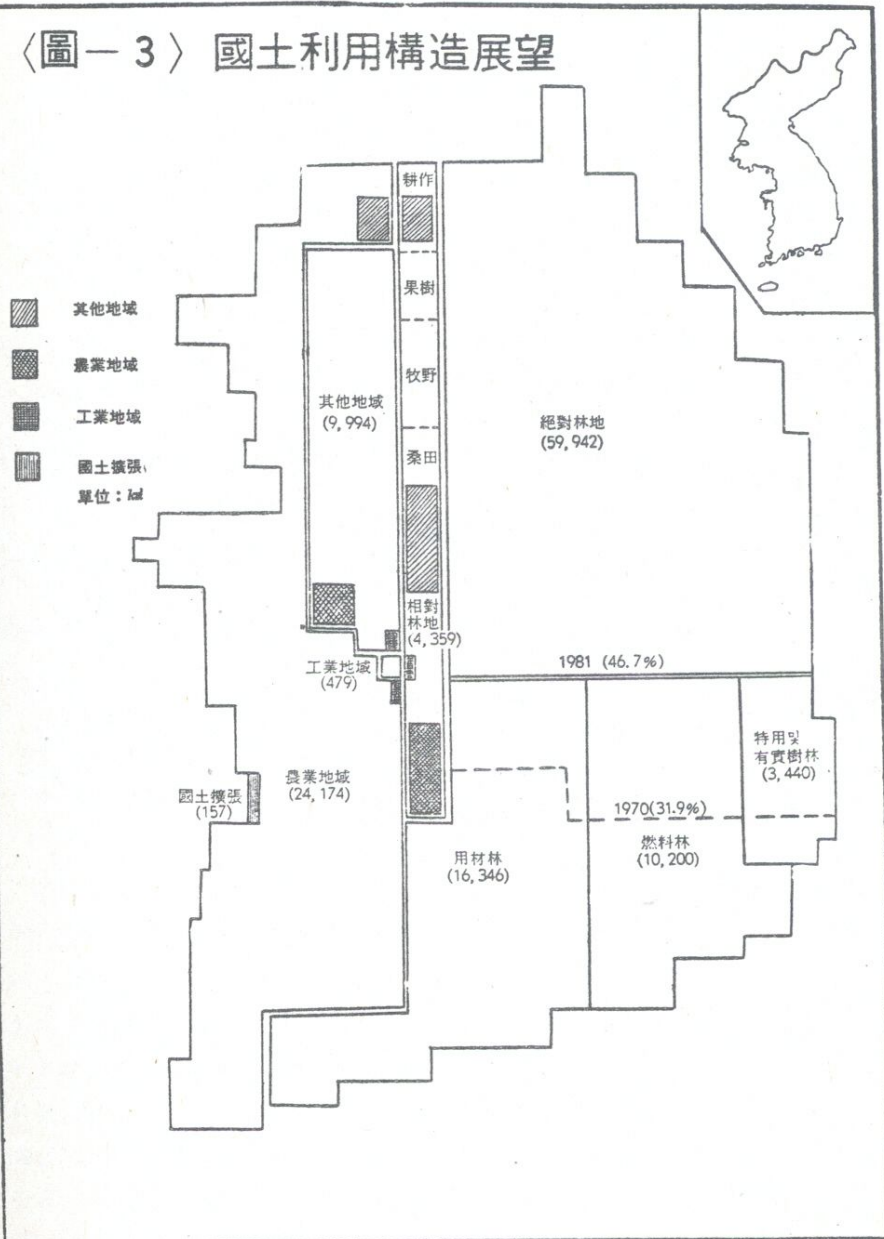
단위 : km²

	1970	1976	1981	계획기간중 증가 (‘72~’81)	배율 (’81/’71)
총 면 적	98,477 (100.0)	98,644 (100.0)	98,748 (100.0)	157	1.0
1. 농업지역	23,304 (23.6)	23,734 (24.1)	24,174 (24.4)	835	1.0
2. 산림지역	66,826 (67.9)	65,587 (66.4)	64,301 (65.1)	Δ2,375	1.0
3. 도시지역	<6,801> (6.9)	<6,958> (7.0)	<7,234> (7.3)	<433>	<1.1>
4. 공업지역	85 (0.1)	172 (3.2)	279 (0.3)	177	2.7
5. 자연문화재 보전지역	<2,718> (2.8)	<3,129> (3.2)	<3,129> (3.2)	<172>	<1.1>
6. 기타지역	8,262 (8.4)	9,151 (9.3)	9,994 (10.2)	1,520	1.1

주 : < > : 타지역에 중복됨

자료 : 농림부, 건설부, 산림청

〈圖一 3〉 國土利用構造展望



4. 국민경제

가. 경제규모

1981년의 국민총생산은 1970년가격으로 약 6조4,012억원이 될 것이고 이는 1970년의 2조5,620억원에 비하면 약 2.5배로 증대될 것이 예상된다. 한편 1인당 국민총생산은 약 173,000원(약544미불)으로 추계되고 있다.

<표-3> 경 제 규 모
(1970년가격)

	단위	1970	1976	1981	증가율 (%)	계획기간중 년평균증가율		
						'72~'76	'77~'81	'72~'81
국민총생산	10억원 (백만불)	2,562.0 (6,994)	4,257.1 (13,353)	6,401.2 (20,078)	149 -	- -	- -	- -
성장률	%	9.7	8.5	8.5		8.6	8.5	8.5
1인당국민총생산	원 (불)	81,809 (223)	123,951 (389)	173,005 (544)	111.5 -	7.0 -	6.9 -	6.9 -

자료 : 경제기획원('70~'76), 건설부('77~'91)

목표연도의 국민총생산을 1970년을 기준하여 산업별로 보면 농림수산업은 약 1.7배인 1조1,904억원으로, 광공업은 약 3.7배인 2조541억원으로,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어비스 부문은 약 2.4배에 해당하는 3조1,567억원으로 늘어 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목표연도의 산업구조는 농림수산업이 18.6%, 광공업이 32.1%,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어비스부문이 49.3%로 변화될 것이다.<표-4 참조>

<표-4>

산업별성장과 구조

(1970년 가격)

단위 : 10억원

	1970		1976		1981		년평균증가율(%)		
	부가 가치	구성비	부가 가치	구성비	부가 가치	구성비	'72 ~'76	'77 ~'81	'77 ~'81
국민총생산	2,562.0	100.0	4,257.1	100.0	6,401.2	100.0	8.6	8.5	8.7
농림수산업	727.8	28.4	955.2	22.4	1,190.4	18.6	4.5	4.5	4.6
공공업	555.3	21.7	1,186.6	27.9	2,054.1	32.1	13.0	11.6	12.6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	1,278.9	49.9	2,115.3	49.7	3,156.7	49.3	8.5	8.3	8.6
사회간접자본	340.7	13.3	686.2	16.1	1,163.6	18.2	12.3	11.1	10.9
기타서비스	938.2	36.6	1,429.1	33.6	1,993.1	31.1	6.9	6.9	6.9

자료 : 경제기획원('70~'76), 건설부('77~'81)

국제수지에 있어서는 1970년에 약 2,361억원의 경상계정상의 적자는 목표연도에는 약 3억원의 흑자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는 계속적인 상품수출의 급속한 증대로 인하여 목표연도에는 무역면에서 크게 수출초과를 이룩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용역에 있어서는 수지차의 폭이 273억원의 흑자에서 1,602억원의 적자로 크게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바 이것은 앞으로 외국차관에 대한 원리금상환이 계속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표연도에는 외국재원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립경제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며 총가용자원은 6조4,009억원에 달하게 될 것이다. 가용자원중 약75%에 해당하는 4조7,875억원이 소비를 위한 지출이 될 것이고, 약 25%인 1조6,134억원은 투자재원이 될 것이다.><표-5참조>

<표-5>

주요국민경제지표
(1970년 가격)

단위 : 10억원

	1970	1976	1981	1972~1981 (계획기간중)
1. 국민총생산	2,562.0	4,257.1	6,401.2	45,570.6
2. 무역수출	287.0	1,090.2	1,785.1	11,566.4
3. 무역수입	550.4	1,134.9	1,624.6	11,769.3
4. 용역수지(순)	27.3	△102.5	△160.2	△1,053.9
5. 해외저축	236.1	147.2	△0.3	1,256.4
6. 총가용자원	2,798.1	4,404.3	6,400.9	46,827.0
가. 소비지출	2,130.5	3,343.6	4,787.5	35,448.3
나. 총 투 자	667.6	1,060.7	1,613.4	11,378.7
(1) 사회간접자본	256.5	391.5	649.0	4,343.1
(2) 기타부문	411.1	669.2	964.4	7,035.6

자료 : 경제기획원('70~'76), 건설부('77~'81)

나. 투자규모

1972~1981년까지 10년간의 계획기간중 총투자액은 약 11조3,787억으로 추계되는바 이는 동 기간의 국민총생산액의 약 25%에 해당한다.

총투자의 산업별 투자비율은 농림수산 10.6%, 광공업 29.8%, 사회간접자본부문 38.2%, 기타 서어비스부문 21.4%가 될 것이며 사회간접자본부문의 투자액은 약 4조3,431억원 될 것이다.<표-6 참조>

<표-6>

총 투 자 배 분
(1970년 가격)

단위 : 10억원

	1967~1971	1972~1976	1977~1981	계 획 기 간 중 합 계 (‘72~ ’81)	증가율(%)	
					‘72~’76 ‘67~’71	‘77~’81 ‘72~’76
총투자액	2,999.6	4,524.5	6,854.2	11,378.7	50.8	43.3
농림수산업	189.0	536.1	668.6	1,204.7	183.6	24.7
광공업	883.0	1,301.9	2,085.3	3,387.2	47.4	60.2
광업	28.9	66.6	96.4	163.4	130.4	44.7
제조업	854.1	1,235.3	1,988.9	3,224.2	44.6	61.0
사회간접자본및기 타서비스	1,927.6	2,686.5	4,100.3	6,786.8	39.4	52.6

자료 : 경제기획원(‘70~’76), 건설부(‘77~’81)

다. 노동력 및 취업구조

목표연도의 14세이상의 노동가능인구는 1970년의 약 1.4배인 27,196천인으로 추계되며 이것은 1970년에 비하여 7,753천인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동력인구는 1970년의 10,420천인보다 3,992천인이 증가한 14,412천인이 될 것이다.

노동력인구 가운데 취업인구는 1970년의 9,941천인보다 4,039천인이 많은 13,980천인이 될 것인 바 이것은 취업률이 1970년의 95.4%에서 97%로 상승할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완전실업율은 4.6%에서 3.0%로 저하되어 완전실업인구는 47천인이 감소한 432천인이 될 것이다.

산업별 고용에 있어서는 광공업과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서비스업에 각각 1,877천인과 2,879천인의 고용증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증가되는 4,039천인의 노동력과 농림수산업에서 감소되는 517천인으로 충당될 것이다.

따라서 농림수산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서비스업의 고용구조는 1970년의 47.8%, 16.1%, 36.1%에서 목표연도에는 30.3%, 23.4%, 46.3%로 크게 개선될 것이다.<표-7 참조>

취업인구 1인당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5.6%의 높은 성장률로 증가하여 1970년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259천원에서 458천원으로 대폭 증대될 것이며 이를 산업별로 보면 농림수산업이 153천원에서 281천원으로, 광공업이 348천원에서 628천원으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서비스업이 356천원에서 483천원으로 증대될 것이다.

<표-7>

노동력과 산업별고용

단위 : 천인(연앙기준)

	1970		1976		1981		연평균증가율 (%)		
	인수	구성비	인수	구성비	인수	구성비	'71~'76	'77~'81	'70~'81
총인구	31,317	100.0	34,345	100.0	37,000	100.0	1.5	1.5	1.5
노동력인구	10,420	33.3	12,290	35.8	14,412	39.0	2.8	3.2	3.0
고용	9,941	100.0	11,792	100.0	13,980	100.0	2.9	3.2	3.0
농림수산업	4,753	47.8	4,442	37.7	4,236	30.3	△1.1	△0.9	△1.1
광공업	1,596	16.1	2,413	20.5	3,273	23.4	7.0	6.3	6.8
사회간접자본및 기타	3,592	36.1	4,937	41.8	6,471	46.3	5.3	5.6	5.5
완전실업률 (%)	4.6	-	4.0	-	3.0	-	-	-	-

자료 : 경제기획원('70~'76), 건설부('77~'81)

라. 인구와 연령구조

1960년대에 들어서 가족계획, 도시적 생활방식의 보급, 소득수준의 향상 등 요인에 의하여 출산력의 저하를 가져와 점차적으로 인구증가율이 둔화되어 지고 있으며 1960년대 후반에 와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되어 왔다. 이러한 출산력의 저하 현상은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가족계획 정책과 국민소득증대에 따라서 인구증가율은 계속 둔화되어 1973년 이후의 년평균 증가율은 1.5%선에 머무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경향으로 보아 1981년의 인구는 약 37,000천인으로 추계된다.

1981년의 인구를 연령구조별로 보면 13세이하 26.5%, 14~64세 69%, 65세이상 4.5%로서 14세이상의 인구는 전체의 73.5%에 이르러 1970년에 비교한다면 14세이상 인구의 비율이 11.4%나 높아질 것으로 추계된다.<표-8참조>

<표-8>

연령계층별인구

단위 : 천인

	1970		1976		1981	
	인구	(%)	인구	(%)	인구	(%)
총인구	31,317	100.0	34,345	100.0	37,000	100.0
13세이하	11,874	37.9	10,586	30.8	9,804	26.5
14세이상	19,443	62.1	23,759	69.2	27,196	73.5
14세~64세	18,353	58.6	22,366	65.1	25,524	69.0
65세이상	1,090	3.5	1,393	4.1	1,672	4.5

자료 : 경제기획원('70~'76), 건설부('77~'81)

마. 가구구조

1960년대의 가족계획과 도시인구의 팽창 및 생활양식의 변화에 의한 핵가족화의 진행등에 따라 가구구조는 다세대로부터 소가족제도의 단세대로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본계획기간인 1970년대에 들어서 더욱 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

1970년의 1가구당 평균가구원 5.4인은 점차적으로 감소되어 목표연도인 1981년에는 약 5인정도가 될 것이며 가족의 구성도 노인 부부의 단세대 가구와 젊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자녀들로 구성되는 2세대가구가 점차적으로 증가되리라고 예측된다.

바. 노동시간과 여가이용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자 1인당 주 평균 노동시간은 약 49시간으로 이것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1주중 1일 평균 8.2시간의 노동을 뜻한다.

앞으로 교육 및 기술수준의 향상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과 소득의 증대 등은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이며 또한 생활조건을 개선으로 가정에서의 가사 노동시간과 농업의 기계화에 의한 농민의 노동시간 등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1981년에는 주당 40~44시간 가량의 노동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1주일 중 전체의 일요일과 반휴의 토요일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하여 여가의 이용에 대한 소망이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여가의 이용은 건전한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져올 것이며 현재에 비하여 더욱 주말여행등이 생활화할 것이다.

사. 민간소비지출구조

민간소비지출 중 식료품의 구성비는 1970년에 48.8%였으나 목표연도에는 42.8%로 저하되는 반면 기호품인 음료 및 연초에 있어서는 9.4%에서 10.8%로 증대될 것이다. 의류 및 장신구에 대한 지출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낼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현재보다 훨씬 좋은 의류와 장신구를 갖게 되더라도 질기고 모양 좋은 값이 싼 화학섬유의 발달로 인해서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 광열비 보건미용비는 현수준을 유지하는 반면에 가구시설 및 가게 운영비는 3.7%에서 6.1%로 교통통신비는 5.9%에서 8.8%로 유흥오락비는 8.3%에서 9.7%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1981년대 이후에는 우리도 소비를 미덕으로 하는 풍요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턱에 이르게 된 것을 뜻한다.<표-9 참조>

<표-9>

민간소비지출구조예측

단위 : %

	1970 (a)	1976	1981	(b)-(a)
계	100.0	100.0	100.0	-
음 료 품	48.8	44.2	42.8	△6.0
음 료 · 연 초	9.4	10.1	10.8	1.4
의류 · 장신구	10.9	9.4	9.0	△1.9
임료 · 수도료	3.8	3.7	3.3	△0.5
광 열 비	4.5	4.7	4.7	0.2
가구시설및가계운영	3.7	5.7	6.1	2.4
보 건 미 용 비	4.7	4.7	4.7	0
교 통 통 신 비	5.9	8.2	8.9	3.0
유 흥 오락 비	8.3	9.3	9.7	1.4

자료 : 건설부('76~'81), 한국은행('70)

제2부 부문별계획

1. 산업기반의 구축

가. 공업개발기반의 확충

(1) 공업화의 전망

우리나라 공업은 1962년 이래 급속히 성장 발전하여 왔다. 1962~1970년까지 8년간에 있어서 GNP성장률은 연평균 9.5%였는데 대해 공업의 기여율은 35.4%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62년과 1970년의 GNP에 대한 산업별 구성의 추세에서 더욱 뚜렷한바 농림수산업은 36.6%에서 28.4%로 낮아진 반면에 공업은 14.6%에서 20.5%로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어비스업은 46.8%에서 49.9%로 각각 상승하였다.

<표-10>

산업별국민총생산추이

단위 : %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농림수산업	36.6	42.1	46.0	38.7	36.1	31.8	28.8	28.8	28.4
광공업	16.6	16.6	17.4	19.5	19.6	20.0	21.1	21.4	21.7
(제조업)	(14.6)	(14.9)	(15.6)	(17.7)	(18.0)	(18.3)	(19.8)	(20.3)	(20.5)
사회간접자본및기타 서어비스업	46.8	41.3	36.6	41.8	44.3	48.2	50.1	49.8	49.9

자료 : 경제기획원

이와 같은 고도경제성장을 촉진한 것은 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중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기간산업의 건설 그리고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수입대체 및 수출산

업의 육성등이 성공리에 수행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과업은 금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금후에 있어서는 그 성장의 「템포」가 다소 둔화할 것이나 고도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하여 공업부문 부가가치는 1970년에 5,255억원으로서 국민총생산의 20.5%였으나 1976년에는 2배인 1조1,405억원으로 확대되어 GNP의 26.8%를 점하게 되고 목표년도에 약 4배가 증가한 1조9,879억원으로서 GNP의 31%선에 달하게 될 것이다.

한편 공업구조면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공업의 40% 이상을 차지하여 우리나라 공업을 주도해 온 섬유와 음료품공업의 비중은 1980년대에 이르러 30%선으로 떨어지는 반면, 금속, 기계, 정유 및 화학 등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현재의 35%에서 1981년에는 49%로 상승되어 선진국형 공업구조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표-11>

공업화의 전망

단위 : 10억원

	1970	1976	1981	계획기간중 증가 (‘72~’81)	배율 (’81/’71)
공업생산액	1,668.4	3,809.9	6,765.7	4,675.6	3.2
(중화학공업비중)	(35.9)	(40.5)	(49.0)	(12.6)	-
제조업부가가치	525.5	1,140.5	1,987.9	1,375.9	3.2
(국민총생산에 대한비중)	(20.5)	(26.8)	(31.1)	(9.4)	-

주 : ()내는 %임

자료 : 경제기획원, 건설부

(2) 공업입지계획의 기본방향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공업입국의 국가목표를 조속히 달성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공업입지계획의 기본방향은 다음 같이 설정한다.

첫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업의 적정배치로서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총생산의 극대를 도모한다.

둘째,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의 계열화를 촉진하여 산업의 능률화와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투자효율과 타산업에 대한 유발효과와 파급효과를 높

인다.

셋째,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공업분산을 촉진하는 한편 중소도시의 공업을 개발하고 대도시의 인구의 과도한 집중 억제 및 공해를 방지한다.

넷째, 공업규모의 국제단위화에 따른 공업원자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비축기지(Central Terminal Station) 개발을 검토한다.

(3) 공업입지계획

(가) 공업용지 및 공업용수 수요 1981년에 있어서 국민총생산의 31.1%를 차지하게 될 6조7,657억원의 공업생산을 위한 공장용지는 현재의 85km²에서 279km²로 확대되고 공업용수는 3,030천톤/일에서 8,250천톤/일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후의 공업입지는 기업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유입지와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서 조성한 단지 내의 계획입지로 양분되고 다시 공업의 성격에 따라 임해와 내륙으로 입지하는 「패턴」이 형성될 것이다.

<표-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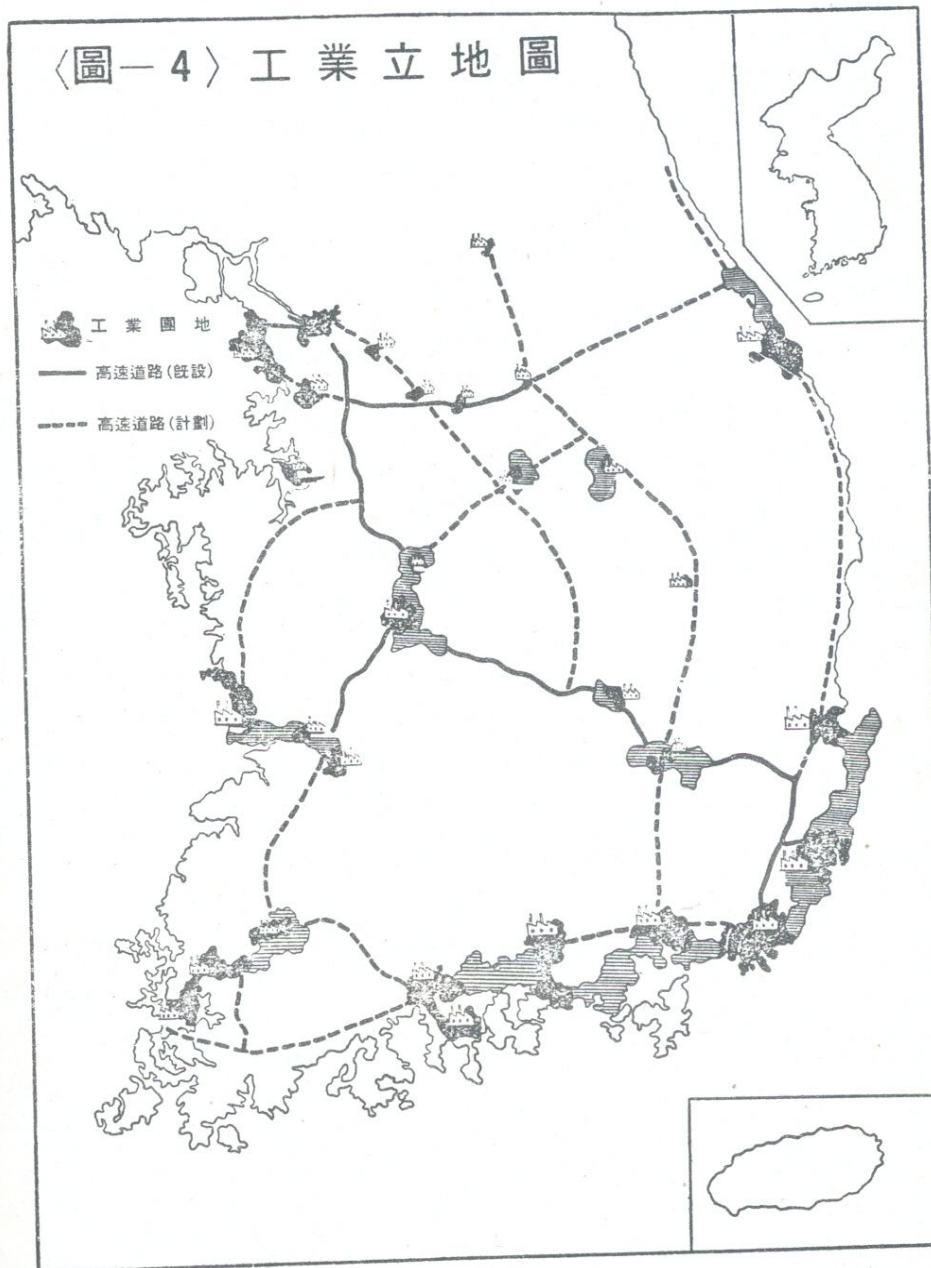
공업용지 및 용수수요전망

단위 : 공업용수 천톤/일, 공업용지 km²

	1970	1976	1981	계획기간중 증가 (‘82~’81)	배 율 (‘81/’71)
공업용지	85.4	171.5	278.8	177.1	2.7
공업단지	23.1 (27.0)	95.1 (55.4)	178.0 (63.8)	147.5	5.8
임해	16.4	73.9	125.4	106.6	
내륙	6.7	21.2	52.6	40.9	
자유입지	62.3 (73.0)	76.4 (44.6)	100.8 (36.2)	29.6	1.4
공업용수	3,030	6,110	8,250	4,327	2.7
공업단지	398 (13.1)	1,741 (28.4)	3,375 (40.9)	2,792	5.7
임해	262	1,275	2,255	1,893	
내륙	136	466	1,120	89.9	
자유입지	2,632 (86.9)	4,369 (71.6)	4,875 (59.1)	1,535	1.5

주 : ()내는 %임

자료 : 건설부



자유입지 또는 대도시근교에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각 지방의 적지 적소에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갖춘 매력적인 공업단지가 조성될 것이므로 현재의 단지 대 자유입지의 비중 27:73은 1981년에 이르러 64:36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해내륙에 있어서는 임해공업지 개발의 중요성에 따라 현재의 70:30의 비중이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이다.

(나) 대규모 공업단지 건설 및 임해공업개발

① 동남해안 중화학공업「벨트」조성 ; 포항, 울산, 마산, 삼천포, 여수 등 동남해안에 위치한 도시들은 항만, 철도, 도로, 용수, 노동력 및 에너지공급 등의 입지조건이 매우 유리한 곳으로 이 「벨트」지역에는 우리나라 산업발달을 촉진하는 에너지 및 원료 등의 중간재 공급을 담당하는 제철, 정유, 석유화학, 비료 및 기계 등 기간산업의 입지가 소망스럽다.

포항은 종합제철공장은 주축으로 종합기계, 화학 등의 「콤비나트」를 형성하고 그 제품은 영남지방을 1차권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공급될 것이다. 울산은 정유, 비료, 석유화학과 계열화된 화학공업 「콤비나트」를, 부산은 기존공업의 분산대책으로 인접지에 대규모의 중·경혼합공업지를 조성하고 마산은 수출자유지역, 요업, 섬유, 종합기계 등을 삼천포는 사천, 진주를 잇는 대상공업지로 조성한다. 여수는 제2의 수출자유지역으로 개발하여 순천, 광양과 더불어 호남의 핵심적 화학공업 「콤비나트」를 형성토록 한다.

이 동남해안 공업「벨트」지역에서의 공업생산비중은 대체로 전국의 3분의 1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높은 생산비중으로 동남해안의 주요도시는 인구증가 현상이 촉진되고 수출자유지역 등 국제진출의 기지로서 기능상 거대한 상공업도시가 출현하여 국제무역의 기지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표-13> 동남해안 중화학공업벨트의 비중

단위 : 10억원

	1970	1976	1981
공 업 생 산 액	493.8	1,245.0	2,232.7
전국에 대한 비중(%)	29.0	32.0	33.0

② 경기만임해공업지 개발 ; 인천에서 아산만에 이르는 경기만 임해공업지역은 서울의 공업분산책으로 말미암아 수도의 새로운 임해공업지역으로 유망시되고 있다.

경기만임해공업지역에는 수도 서울의 시장수요와 숙련노동력을 이용하여야 할 고도의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공업이 주축을 이루게 되고, 발전의 중심지는 인천, 수원, 평택 등이며 목표연도의 전국에 대한 공업생산의 비중은 약 15.6%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인천은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서 항만조건과 한강의 공업용수를 배경으로 하여 금속, 기계, 화학, 토석, 제재, 섬유, 음료품 등 중·경공업혼합지역으로, 수원은 염가로 넓은 공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바탕으로 대규모의 도시형 공업지를 개발하여 서울의 공장분산을 촉진하며 평택은 안성천의 공업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공업지역으로 개발될 것이다.

<표-14>

경기만 임해공업지의 비중

단위 : 10억원

	1970	1976	1981
공 업 생 산 액	178.5	252.3	1,014.9
전국에 대한 비중(%)	10.7	13.5	15.6

③ 기타의 임해공업지 개발 ; 군산은 인접한 장항, 비인과 더불어 서해안 중부의 거점적 임해공업지로서의 잠재력이 풍부하므로 정유, 화학, 「펄프」, 고무, 제재 등 중화학공업지로 개발하고 목표는 영산강유역개발로 자연적 여건의 개선으로 호남의 문호로서 거점개발의 가능성이 밝으므로 화학, 토석, 기계, 섬유, 제재 등의 공업을 개발하며 삼척지구는 풍부한 석회석, 무연탄 등을 기반으로 하는 화학, 시멘트공업을 적극 개발토록 한다.

④ 대도시의 공업분산과 지방공업개발 ; 1970년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등 3대도시의 공업생산규모는 9,576억원으로서 전국의 57.4%이고, 종업원은 744천명으로서 전국의 60.4%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대도시에서는 도시화현상이 가속되고 공장용지 및 공업용수의 확보난, 공해로 인한 도시환경의 악화, 수출조건의 악화 등 이른바 과밀의 폐해가 야기되고 있는 반면, 기타의 중소도시에 있어서는 인구감소 또는 정체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15>

3대도시의 공업비중

단위 : 생산액 10억원, 종업원 천인

	생산액	%	종업원	%
전 국	1,668.4	100.0	1,231	100.0
3대도시	957.6	57.4	744	60.4

이와 같은 대도시에 있어서의 과밀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업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하여 지방공업개발법의 활용에 의한 조장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인구분산과 공해요인을 감소하는 동시에 공업의 지방분산은 원칙적으로 입지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업종(Foot loose Industry)으로서 입지의 용도지역 위배, 공해발생업종 등의 모공장을 대상으로 하고 입지의 제약을 받는 시장 지향형 공업인 인쇄출판, 화류, 의류 등의 업종은 계속 육성하되, 공해등을 고려하여 일정지역에의 집단화를 도모하여 대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공업분산과 병행해서 이들 대도시에는 공장의 신설과 증설을 억제함으로서 목표년도에는 3대도시의 전국에 대한 공업생산 비중은 20.3%로 대폭 완화되어 전국이 균형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표-16>

대도시의 공업비중

단위 : 10억원

	1970	1976	1981
전국 공업생산액	1,668.4	3,890.9	6,765.7
3대도시공업생산액 (서울, 부산, 대구)	957.6	1,236.9	1,376.1
전국에 대한 비중(%)	57.4	31.8	20.3

(다) 도시형공업 및 내륙공업 개발 ; 국민경제생활과 직결되고 수출산업으로 비중이 높은 금속, 기계 및 잡화업 등 이른바 도시형 공업의 생산규모는 그 비중이 점차로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혁신의 진전에 따라 더욱 고도화한 구조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도시형공업은 도시의 수요와 시장구조, 기술과 정보 등의 접촉관계가 중요하므로 대도시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며 따라서 도시계획상의 공업지역에 입지

토록 유도하는 한편 도시계획상의 공업지역이 주택지와 혼재 또는 용수난, 교통난으로 인하여 생산의 저해가 예상되는 도시에 있어서는 통근이 가능한 적정거리의 근교지역에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공장을 유치한다.

이와 같은 도시형공업개발이 유망시되는 지역은 대전~청주지역, 대구~구미지역, 광주~나주지역, 전주~이리지역 등이다.

(라) 지방자원형공업의개발 ; 광물, 토석재, 농산물 등의 공업원료가 풍부한 지방에는 원료자원 지향공업을 개발하여 지방주민의 소득과 고용의 증대를 도모할 것이다. 단양, 영월 등 태백산 내륙지방과 삼척지구에는 시멘트 화학공업을 진주지구에는 도자기, 유리제조공업을 개발한다.

한편 농축산원료가공업은 단일공장으로서 원료산지에 입지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적정입지를 선정 유치토록 한다.

(4) 지하자원 및 대륙붕광물자원의 개발

우리나라의 지하자원은 종류는 다양하지만 석회석과 고령토를 제외하면 매장량이 풍부하지 못하고 더욱이 가공처리시설이 미비하여 생산의 대부분은 원광으로 수출되므로써 공업개발보다는 외화획득에 기여했고 수출의 전망 여하는 생산에 민감하게 반영되었었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발전에 수반하여 기초원재료는 물론 보조원재료의 국내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국내 광물자원의 우선적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기초 원자재의 비축, 과학기술을 통한 새로운 대체자원의 발견 및 다양한 활용방법의 개발 등을 적극 도모한다.

1970년에 있어서 공업생산(부가가치)은 298억원으로 국민총생산의 1.1%에 불과하며 그 중 석회생산이 44%이었다.

계획기간중 광업은 년평균 7.5%씩 성장하여 1976년에는 461억원, 1981년에는 662억원으로 증대될 것이 예상되나 국민총생산액에 대한 비중은 역시 현수준과 같은 1%내외가 될 것이다.

광물의 산지는 주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하는 강원도와 충북 및 경북의 북부 그리고 충남과 전남의 내륙지방 등이며 이들의 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업도로의 건설 등 교통시설 및 채광의 근대화를 기한다.

한편 서해 및 남해에는 광대한 대륙붕이 전개되어 그 해저에는 각종 광물 특히 석유 천연가스 등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개발이용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석유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석유산출이 가능할 대륙

붕의 개발문제야 말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이것이 실현될 때 우리나라의 「에너지」 구조와 그 관련공업은 일대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표-17>

지하자원 개발전망

단위 : 10억원

	1970	1976	1981
지하자원총생산액	59.6 (100.0)	92.9 (100.0)	119.0 (100.0)
석 탄	31.4 (52.6)	46.1 (49.6)	49.6 (41.7)
기타 지하자원	28.2 (47.4)	46.8 (50.4)	69.4 (58.3)

자료 : 경제기획원, 상공부, 건설부

(5) 대규모 「에너지」 기지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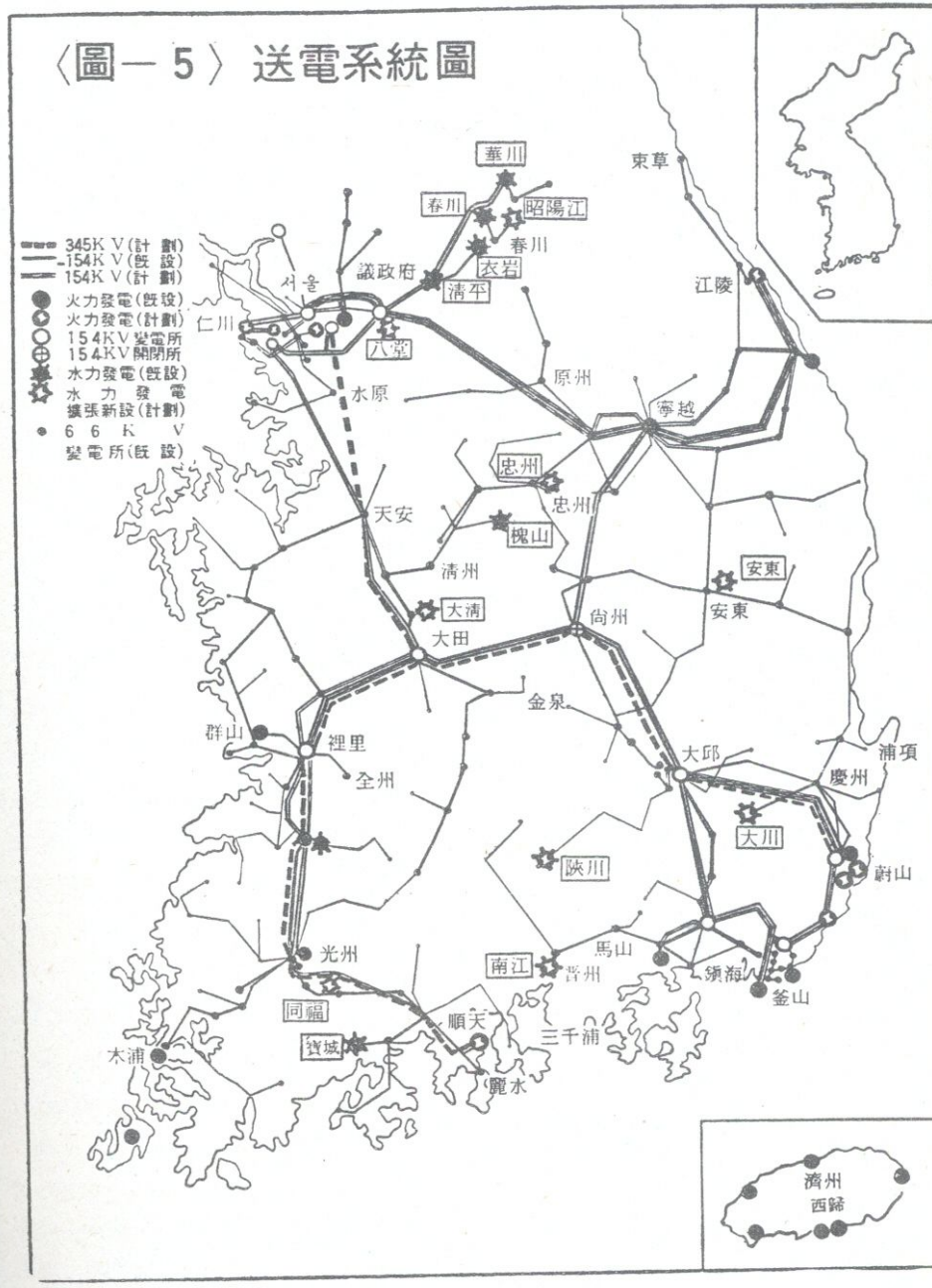
1962년의 총 「에너지」 수급은 석탄환산으로 19,639천톤이었으며, 년평균 9.5%씩 성장하여 1970년에는 40,503천톤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높은 증가경향은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앞으로도 년평균 8.9%씩 성장할 것이 예상되며 따라서 1976년에는 67,638천톤 1981년에는 103,600천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에너지」 수요의 급증과 더불어 그 수급구조도 급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1970년에 44%를 차지한 석유는 1981년에 70%로 그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반면, 석탄은 30.6%에서 19.3%로 낮아지게 됨으로서 현재의 석탄 주도적 구조로부터 석유 주도적 구조로 전환하게 될 것이나 석탄생산량에 있어서는 현재의 약 1.6배에 이르게 될 것이며 그 수요는 현재의 동력용에서 완전히 연료용으로 전환되고 수요지도 대도시의 연료구조전환으로 중소도시와 농어촌으로의 공급이 증대하게 될 것이다.

동력에 있어서는 대규모 수력지점의 부족과 수력발전이 가지는 「핸드캡」으로 ‘화주수중’의 경향이 더욱 현저하게 될 것이며 또한 원자력 발전이 급히 진전할 것이다.

화력발전소는 유류의 공급이 용이하고 공업단지 건설등으로 인하여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포항, 울산, 삼천포, 여수, 군산, 인천 등 주로 임해지역에 대규모 화력발

〈圖-5〉 送電系統圖



전소를 건설 확충하고 수력발전은 4대강 유역개발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안동, 소양강, 팔당 및 대청 댐 등 9개 댐에서 총 767천kW의 전력을 확보하는 한편 대도시와 대규모 공업단지간은 345kV의 기간송전선을 건설 연결하여 「에너지」공급망을 정비 확충하고 서해안에는 유리한 조력발전지점이 많으므로 대륙붕 및 해양자원 개발과 함께 그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공업규모의 확대에 따른 원자재의 대량수용에 대처하고 기간산업의 능률적인 생산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유 등 공업원자재의 대규모 저장기지를 제주도와 남해안에 입지하도록 그 개발을 검토한다.

<표-18> 「에너지」 수급전망

단위 : 석탄환산천톤

	1970		1976		1981		계획기간 증 증가 (‘72~’81)	배율 (’81/’71)
	수량	구성비	수량	구성비	수량	구성비		
총 에 너 지	40,503	100.0	67,638	100.0	103,600	100.0	59,972	2.4
석 탄	12,394	30.6	17,810	26.3	20,000	19.3	6,663	1.5
석 유	17,822	44.0	40,022	59.1	72,026	69.6	51,691	3.6
신 탄	8,720	24.0	8,598	12.8	7,732	7.4	△1,655	△1.2
수력 및 원자력	567	1.4	1,208	1.8	3,842	3.7	3,273	6.7

자료 : 경제기획원, 상공부, 건설부

나. 농수산업생산기반의 혁신

(1) 농수산업의 현황과 전망

우리나라 농업은 1960년에서 1969년에 이르기까지 4.5%의 년평균 성장율을 나타내고 있어 외국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으나 제조업부문의 급격한 성장으로 농업은 상대적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농업의 유기적 생산에서 오는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식량 자급을 위한 당면목표 달성과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 완화와 연간 2억불 상당의 외국도입에 의한 국제수지 압박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수산업 생산기반의 혁신은 시급을 요하는 일이라 하겠다.

더욱 장래의 인구증가와 소득증대는 식량수요의 양적 증대 및 질적 고도화가 예

견되며 이를 위한 식량 공급 기반의 확충책으로서 경지 확대 및 농지보전지대의 지정에 의한 필요 절대면적의 확보와 농업생산의 다각화를 위한 제반 시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식량의 수급은 1976년부터 주곡의 자급이 실현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위한 제반 시책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표-19참조>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추세를 나타내는 농업생산 구조를 보면 미맥류 중심의 경종 농업(耕種農業)에서 경제작물과 낙농등을 중심으로 하는 영농방식으로 점차 기업화해 감을 나타내고 있다. 즉 1965년의 곡물 생산 비중이 65.4%에서 1969년에는 52.9%로 그 구성비가 12.5% 감소되는 반면 경제 작물과 축산물의 비중이 34.6%에서 47.1%로 증대되어 농업생산 구조가 점차 다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일방 국토의 약 68%를 점하는 66,826km²의 산지중 임목지는 그 86.7%에 해당하는 57,930km²에 이르고 있으나 그 대부분이 유림상태로서 임목축적은 ha당 10m³에 불과한 미약한 임상을 보여 주고 있으나 기존림의 적극적인 보호와 속성우량수종의 대규모 조림등으로 점차 임목축적이 증대하고 있어 목재자급은 물론 수원 함양이나 국토보전면에서 밝은 전망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수산업에 있어서는 소형 무동력선에 의한 영세 연해어업에서 점차 기동력으로 장비된 원양어업으로 또한 자원 잠식적 채취어업에서 양식어업 등으로 구조적면에서 개선되고 있으며 수산업의 대 GNP 비중은 1.5~1.7%에 불과한데도 총수출액의 12~16%의 높은 수출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다.

(2) 개발의 기본방향

농·공업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공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농업의 상대적 낙후성을 탈피하여 농사산업 생산기반을 근대화 내지 고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첫째, 주곡자급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적지의 무원칙한 전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업투자의 중점화와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항구적 식량공급기지를 확보하는 한편 우량농지확보를 위하여 주택지, 공장용지, 도로건설 등 불가피한 농지의 타용도 전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다.

둘째,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용수개발과 경지정리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셋째, 농업기계화와 농업자재 및 농산물의 유통체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연부락 및 경지간을 연결하는 농로건설을 계속 추진한다.

넷째, 농가소득증대의 선도적 역할을 할 주산단지를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조성 개발한다.

<표-19> 식량 수급전망

단위 : 천톤

	1970	1976	1981	계 획기간중 증가 (‘72~’81)	배 율 (’81/’71)
쌀					
수요	4,400	4,825	4,998	523	1.2
생산	3,939	4,860	5,040	1,101	1.3
과부족	△461	35	42	-	-
보리					
수요	1,880	2,406	2,530	484	1.2
생산	1,974	2,406	2,536	490	1.2
과부족	94	0	6	-	-
밀					
수요	1,559	1,989	2,387	761	1.5
생산	357	488	635	278	1.8
과부족	△1,202	△1,501	△1,752	-	-
옥수수					
수요	335	805	1,225	903	3.8
생산	38	149	200	130	2.8
과부족	△247	△656	△1,025	-	-

자료 : 경제기획원, 농림부

다섯째, 주요 농업지역에 대한 보관 및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농산물의 저장 관리의 안전화를 도모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여섯째,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농산물 생산을 증대하기 위하여 산지개간 하천유역정비로 농지를 계속하여 조성 확대한다.

일곱째, 토지자원중 개발잠재력이 가장 큰 산지의 이용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산지이용 구분조사를 토대로 산지의 다목적 이용을 꾀한다.

여덟째, 농어민소득 증대와 수산물 수출 증대를 위하여 어항수축과 양식장의개발 및 보전책을 강구한다.

(3) 농수산업 개발계획

(가) 농지보전 및 확장 ; 도시화, 공업화 및 도로건설 등에 의한 농경지 유멸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경지규모, 경지율, 토양조건, 경사도, 수리시설 및 경지정리지구 등 농경지의 제반 적성요소를 감안하여 농지의 합리적 이용방법을 설정함으로써 농지 보전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계획기간중 경지확장은 산지개간 924km², 간척 87km², 하천유역개발 401km²로 총 1,412km²의 농경지가 조성될 것이나 주택지, 도로, 공장용지 등으로 577km²의 농경지가 잠식될 것이 예측되므로 실질적인 농경지 면적은 835km²가 확대될 것이다.<표-20 참조>

<표-20>

농경지 면적 확장지표

단위 : km²

	1970	1976	1981	계획기간중 증가 (‘72~’81)
농지면적	23,304	23,734	24,174	835
답	12,937	12,487	12,490	△437
전	10,367	11,247	11,684	1,272

자료 : 농림부, 건설부

<표-21>

농경지 증감지표

단위 : km²

	1972~1976	1977~1981	계획기간증 합계 (‘72~’81)
증 가	395	440	835
농지조성	623	789	1,412
간척(농지조성)	65	22	87
산지개간	454	470	924
4대강유역개발및기타	104	297	401
농지잠식	228	349	577
주택용지	190	260	450
도로용지	29	50	79
공업용지	9	39	48

자료 : 건설부, 산림청

(나) 경지정리 및 농업용수개발 ; 농업생산 기반의 혁신을 도모하는 기초는 경지정리와 농업용수개발이 주축이 된다.

경지정리대상면적 6,000km²중 현재 1,580km²의 경지가 정리되었으며 나머지 4,420km²는 계획기간 중에 완료한다.(표-22참조)

<표-22>

경 지 정 리

단위 : km²

정리가능면적	1970	1976	1981
6,000	1,580 (26.3)	4,500 (75.0)	6,000 (100.0)

자료 : 경제기획원

이로써 농업노동을 능률화할 농업기계화를 이룩하는 토대가 조성되고 토양의 개량 「IR667」 등 신품종의 개발 보급과 시비의 개선으로 단당 생산량을 1970년의 325kg에서 선진국 수준인 420kg으로 제고시켜 주곡자급을 이룩한다. <표-23참조>

<표-23> 곡물별 단당 생산추이

단위 : kg

	1970	1976	1981
쌀	325	400	420
보리	216	273	300
밀	224	300	315
옥수수	140	235	300

자료 : 농림부

또한 농업용수개발은 총가능 면적 11,760km²중 1970년 현재 87.6%에 해당하는 10,302km²가 개발되었으며 1976년까지는 개발가능 면적을 전부 수리안접담화하는 동시에 밭에 대하여도 관개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를 계속 개발한다.<표-24 참조>

<표-24> 농업용수 개발

단위 : km²

총가능면적	1970	1976
11,760	10,302 (87.6)	11,760 (100.0)

자료 : 경제기획원, 농림부

(다) 주산단지 조성 ; 농어민 소득 증대 사업의 전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산단지조성은 잡업을 비롯하여 양송이 감귤 등 경제작물과 축산, 백합양식, 특용수종 등 90개 사업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는 농공업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수산업의 기업화를 촉진하는 수단이며 농수산물 증산은 물론 토지이용의 능률화를 위한 바람직한 사업이므로 단지의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적성에 부합한 단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한다.

(라) 농로건설 ; 농로는 농산물 운반과 농촌 간의 교통을 원활히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촌근대화를 촉진하는 수단이 된다.

부락과 부락간, 부락과 경지간을 연결하는 간선농로는 폭을 적어도 5M이상으로 건설할 것이다. 1970년 현재의 농로연장은 20,270km로서 계획기간중에 20,835km가 건설되어 1981년의 농로 총연장은 48,544km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표-25 참조>

<표-25>

농로건설계획지표

단위 : km

	1970	1976	1981	계획기간중 증가 (‘72~;81)	배율 (‘81/’71)
계	20,270	37,630	48,544	20,835	1.8
부락-공로-농장	19,674	35,913	46,192	19,091	1.7
경지정리지구내 간선	596	1,717	2,352	1,744	3.9

자료 : 내무부, 농림부

(마) 산지개발 및 보전 ; 산지는 산지이용 구분조사를 토대로 절대임지와 상대임지로 구분한다.

1970년 현재 산림지면적은 66,826km²로서 이 가운데 절대임지 59,942km²는 항구적으로 보전하며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1981년까지 용재림, 연료림, 특용 및 유실수종림 등으로 29,986km²를 조성하여 농가소득 배증의 일익을 담당케 한다.

상대임지 6,884km²중 2,375km²를 개간하여 농지, 목야지, 상전, 과수원 등으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다목적 이용을 도모한다.<표-26참조>

경사 5°미만, 토심 40cm이상 경작가능 적지

경사 5°~9°, 토심 70cm이상 과수원 적지

경사 9°~20°, 토심 40cm이상 목야지 적지

경사 20°~24°, 토심 100cm이상 상전, 초지 적지

임목 축적에 있어서는 기존 임지의 적극적 보호와 적지별 지대구분에 따라, 용재림, 특용수종 등 수익성이 높고 생장력이 좋은 속성우량수종의 대규모 조림으로 1970년의 66,800천m³에서 1981년에는 약 2배에 해당하는 109,300천m³로 제고시켜

1981년 이후에는 외재에 의존했던 목재를 자급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구축한다.<표-27참조>

<표-26>

산지이용계획지표

단위 : km²

	1970	1976	1981	계획기간중 증가 (‘72~’81)
산림면적	66,826 (100.0)	65,587 (100.0)	64,301 (100.0)	Δ2,375
절대면적	59,942 (89.7)	59,942 (91.5)	59,942 (93.3)	
상대면적	6,884 (10.3)	5,645 (8.5)	4,359 (6.7)	Δ2,375
절대임지이용	21,304	26,422	29,986	7,760
용재림	6,961	12,362	16,346	8,617
연료림	12,216	11,100	10,200	Δ2,027
특용및유실수종림	2,127	2,860	3,440	1,170
(절대임지이용률)	(31.9)	(40.3)	(46.7)	
상대임지개발		1,129	2,375	2,375
농지조성		454	924	924
목야지 및 기타		675	1,451	1,451

자료 : 산림청

<표-27> 임목축적 및 목재 수급계획 지표

단위 : 백만m³

	1970	1976	1981
임목축적	66.8	87.2	109.3
목재수요	4.8	6.8	8.7
목재공급	4.8	6.8	8.7
내재	0.9	1.5	2.9
외재	3.9	5.3	5.8

자료 : 산림청

(바) 수산업개발 수산업의 생산구조를 연근해 어로에서 원양어업으로 채취어업에서 양식어업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어업장비 현대화를 꾀하는 동시에 어선톤수를 1970년의 376천톤에서 1981년에는 약 2.1배가 되는 799천톤으로 증대시키고 양식 면적을 1970년의 355km²에서 602km²로 확대시켜 양식량을 1970년의 119천톤에서 약 3.5배가 되는 412천톤으로 증대시킨다.<표-28 참조>

<표-28> 수산업 개발계획 지표

	단위	1970	1976	1981	계획기간중 증가 (‘72~‘81)	배율 (‘81/‘71)
어획량	천톤	935	1,457	1,690	755	1.7
양식량	”	119	230	412	293	3.5
양식면적	km²	355	477	602	247	1.7
어선톤수	천톤	376	572	799	412	2.1

자료 : 경제기획원, 수산청」

2. 교통통신망의 정비확충

가. 교통시설의 정비확충

(1) 수송수요의 전망

우리나라의 수송실적은 1962~1970년 사이에 있어서 화물 14.4%, 여객 13.0%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는 이 기간 중의 국민총생산의 연평균성장률 9.5%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29 참조>

1970년 현재 화물수송실적은 13,382백만톤-km, 여객수송실적은 30,362백만인-km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지속될 경제발전과 사회적 변천에 따라 더욱 활발하여질 경제활동의 확대에 의하여 교통수요는 보다 다양화하고 증대될 것이다.

1970~1981년 간의 교통수요추세는 여객수송에 있어서는 여객수송에 있어서는 연평균 15.8% 증가하여 153,046백만인-km로 되며 화물수송에 있어서는 연평균 12.4% 증가로 48,044백만톤-km로 증대될 것이 예측된다.

이러한 수송수요의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산업구조의 변천, 생산과 소비양태 및 생활방식의 변화, 수송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의하여 질적으로도 다양화하고 고급화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송구조는 지금까지 철도에 높은 의존도를 보였으나 급속히 증대되어 가고 다양화하는 수송수요를 철도부문에만 의존할 수 없는 한계점을 노정시킴으로써 현대적이고 능률적인 교통체계확립을 통한 각종 교통수단간의 균형적 발전이 절실히 요청되어 왔다.

이러한 경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1968년부터 서울~인천, 서울~부산 간등 주요노선에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공로부문에 새로운 전환점을 거쳐왔다. 고속도로는 도로교통에 “통로”를 개선시키므로써 도로교통이 지닌 고유장점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여 다양화되고 고급 양질화하는 수송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문전에서 문전으로”의 시민생활 수요에 대처하도록 이제까지의 수송구조를 크게 개선하고 변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한 수송수단간의 분담 구조를 전망하면 여객에 있어서는 1970

<표-29> 경제성장과 교통신장

	1962	1970	연평균증가율 (‘62~‘70)
GNP(억원 : ‘65불변가격)	6,349.7	14,334.7	9.5 %
사회간접자본투자(억원)	415.8	3,011.0	28.3
1인당 GNP	96.1	223.0	11.1
수출(백만불)	54.8	1,129.0	46.0
화물①톤수(백만톤)	63.9	103.8	6.3
②연톤수(백만톤-km)	4,561.0	13,382.0	14.4
여객			
①인원(백만인)	991.6	3,111.9	15.3
②연인원(백만인)	11,498.0	30,362.0	13.0

자료 : 건설부, 교통부

<표-30> 교통수요와 분담율추이

단위 : 여객 백만인-km, 화물 백만톤-km

	1970		1976		1981		계획기간 증 증가 (‘72~‘81)	연평균 성장률 (‘70~‘81)	배율
	수송량	분담률	수송량	분담률	수송량	분담률			
여객총수요	30,362	100.0	67,173	100.0	153,046	100.0	15.8	15.8	4.0
철도	9,819	32.3	15,768	23.5	24,871	16.3	8.7	8.7	2.1
공로	20,045	66.0	49,537	73.7	121,071	79.1	17.7	17.7	4.7
해운	241	0.8	410	0.6	567	0.4	7.9	7.9	2.0
항공	257	0.9	1,458	2.2	6,537	4.2	34.2	34.2	20.1
화물총수요	13,382	100.0	26,636	100.0	48,044	100.0	12.4	12.4	3.3
철도	7,709	57.6	13,423	50.4	20,531	42.7	9.1	9.1	2.4
공로	1,441	10.8	3,985	15.0	9,658	20.2	18.6	18.6	5.7
해운	4,232	31.6	9,228	34.6	17,855	37.1	14.2	14.2	3.9

자료 : 경제기획원, 건설부, 교통부

년에 철도, 공로, 해운, 항공의 분담률은 각각 32.3%, 66.0%, 0.8%, 0.9%였으나 1981년에는 16.3%, 79.1%, 0.4%, 4.2%로 될 것이 예측되어 여객 수송 분담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화물에 있어서도 1970년에 철도, 공로, 해운의 분담률이 각각 57.6%, 10.8%, 31.6%로서 철도에 치우쳤으나 공로 및 해운부분의 수송력 증대로 1981년에는 각각 42.7%, 20.2%, 37.1%로 평준화되어 화물수송구조가 개선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30 참조>

(2) 교통수요의 기본방향

국민경제규모의 확대와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급증하는 수송수요에 대응하고 교통수단간의 분담구조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통시설과 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 확충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첫째,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지역별 수송수요에 대응한 교통시설을 정비확충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산업기지, 생산지와 소비지간을 합리적으로 연결하여 물자의 수급과 사회활동을 원활히 수행케 하므로써 전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둘째, 도로, 항만, 철도 등 각 교통수단이 가지는 고유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 그 시설배치의 적정화를 기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셋째, 교통수단의 다양화와 수송의 물적 증대 및 질적 향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의 입체화 고속화 및 대량화를 도모한다.

넷째, 생활권의 광역화와 지방산업의 발전에 따른 농업과 도시간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교통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도로망의 개량과 정비확충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한다.

(3) 도로계획

(가) 개발방향 도로는 국민생활향상과 산업발전 및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국가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는 전략적 수단으로서 뿐 아니라 유통구조의 합리화와 국민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하도록 중점 개발하여야 한다.

공로부분의 화물은 1970년에 14.4억톤-km로서 연간 18.6%의 성장률을 가져와 1981년에는 96.6억톤-km로 증대될 것이고 여객은 200억인-km에서 연평균 17.7%로 증가한 1,211억인-km로 급증할 것이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1970년 현재 40,244km의 도로를 가지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963~1970년에 5.8%를 나타내고 있다.

도로망의 구성은 100년 후에까지 예상되는 경제 및 사회 구조에 적합한 수요를

전망하여 바람직한 도로망체계를 확립하고 「모타리제이션」에 적응되도록 형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도로개발방향을 설정한다.

첫째,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토의 최적 골격망 형성에 일차적인 중요성을 두고 대도시와 대규모 공업지간을 기간고속도로로 연결한다. 그 일단계로 1981년까지 최적노선을 선정하여 약 2,600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며 전국의 대도시와 지방중심도시 및 대규모 공업지역이 상호 연결되도록 하므로써 전국을 1일생활권으로 형성한다.

고속도로망이 확대됨에 따라 각 지역의 유리한 산업의 생산가능성과 시장권이 확대되어 기존도시에 대한 입지조건이 상대적으로 개선되어 지역경제발전에 공헌하게 될 것이므로 유통기능은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둘째, 중소도시와 기간고속도로 간은 일반국도로 연결하여 유통중심지, 화물, 「터미널」, 공항, 항만 등과 연결되도록 하고 수송수단간에 협동과 혼합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폭의 확장 곡선부의 직선화 및 완전포장으로 그 기능을 향상시킨다.

셋째, 읍급 지구 중심도시와 일반국도 간은 지방도로로 연결 개발하며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반도로의 양적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물동량의 신속한 수송체계를 확립하도록 정비 확충한다.

넷째, 수송능력향상과 교통의 쾌속화 안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개수를 계속 실시하고 포장율을 현재의 9.6%에서 38.8%로 향상시키도록 도로정비사업을 강력히 추진한다.

(나) 도로개발사업 공로부문 수송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획기간중 고속도로 1,944km와 일반도로 12,360km를 건설하며 산업도로 357km를 건설한다. 특히, 고속도로는 1976년까지 전주~순천, 원주~강릉, 부산~순천, 속초~포항, 대구~마산, 원주~대구간 등 6개노선 1,000km를 건설하고 1977~1981년 간에는 원주~춘천간을 비롯하여 천안~군산, 인천~수원, 목포~강릉, 제천~청주, 서울~김천, 나주~강진 및 포항~경주간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944km를 건설한다.

한편,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국도는 포장을 완료하며 일반 도로망과 유기적인 결합이 되도록 한다. 일반도로는 계획기간중 12,360km의 증가를 보게 되며, 이 중 특별시도 4,624km 지방도 1,768km, 시군도 5,968km를 각각 건설한다.

포장계획에 있어서는 국도와 미포장구간 5,568km와 일반국도 중 특별시도 4,563km, 지방도 1,665km, 시군도 2,725km 및 고속도로 포장 등 16,465km의 도로포장을 실시한다.

<포-31> 도로개발지표

	단위	1970	1976	1981	계획기간중 증가 (‘72~’81)	배율 (’81/’71)
도로연장	km	40,244	49,730	55,892	14,304	1.3
고속도로	km	155	1,656	2,600	1,944	3.9
일반국도	km	8,122	8,122	8,122	-	-
일반도로	km	31,571	39,952	45,170	12,360	1.4
<산업도로>	km	<127>	<312>	<495>	<357>	<3.6>
도로포장연장	km	3,864	14,769	21,665	16,465	4.2
포장율	%	9.6	29.7	38.8	26.3	3.1
(국토포장율)	%	(23.7)	(100.0)	(100.0)	(68.6)	(3.2)
도로밀도	m/km ²	409	504	566	145	1.3
1인당도로연장	m	1.27	1.44	1.51	0.21	1.2
균량보유대수	천대	140	363	1,500	1,348	9.9
1대당인구	인	225	95	25	△183	△11.9

주 : < > 숫자는 다른 항목에 중복됨

자료 : 건설부

<표-32>

고속도로 건설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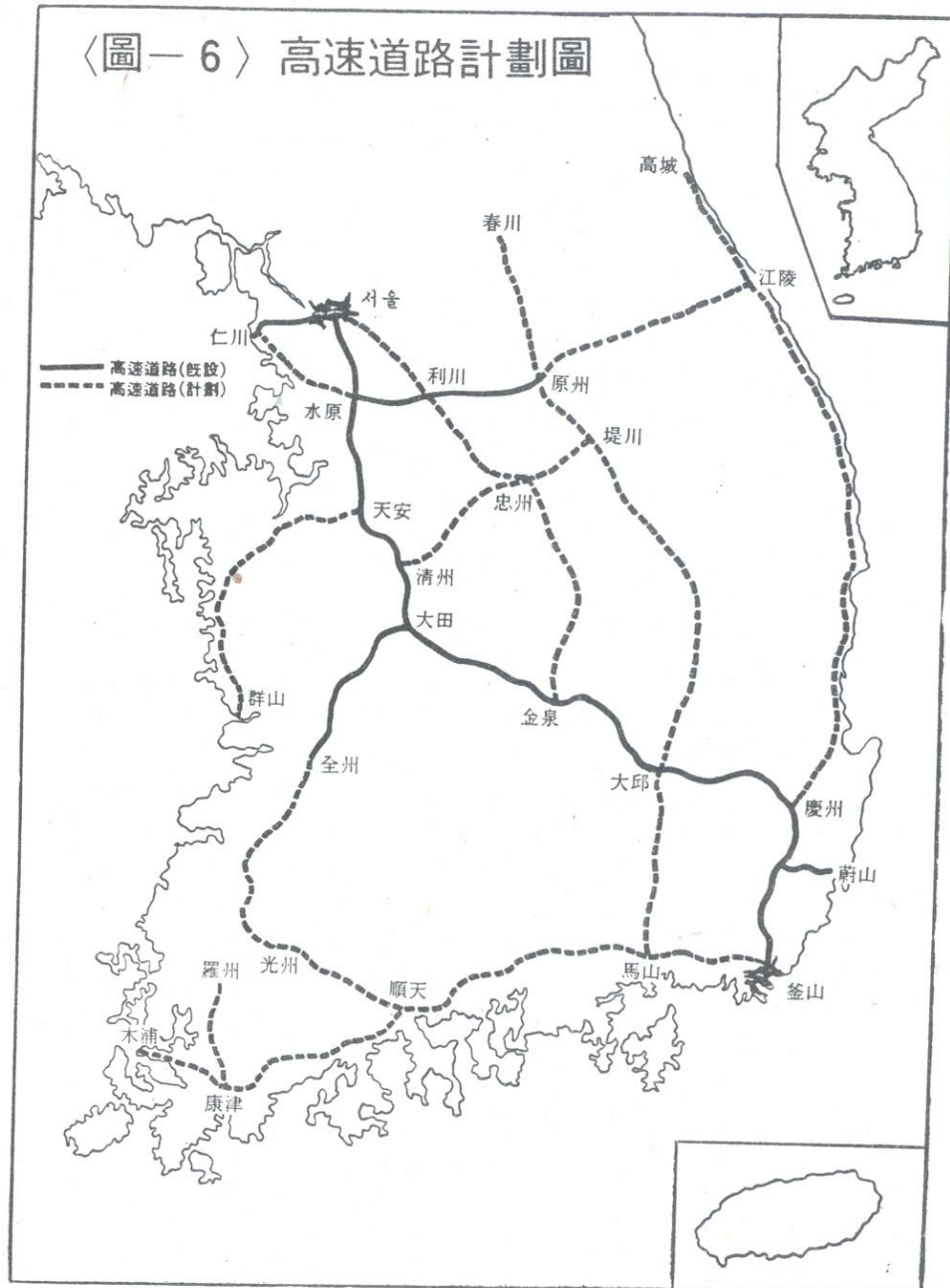
단위 : k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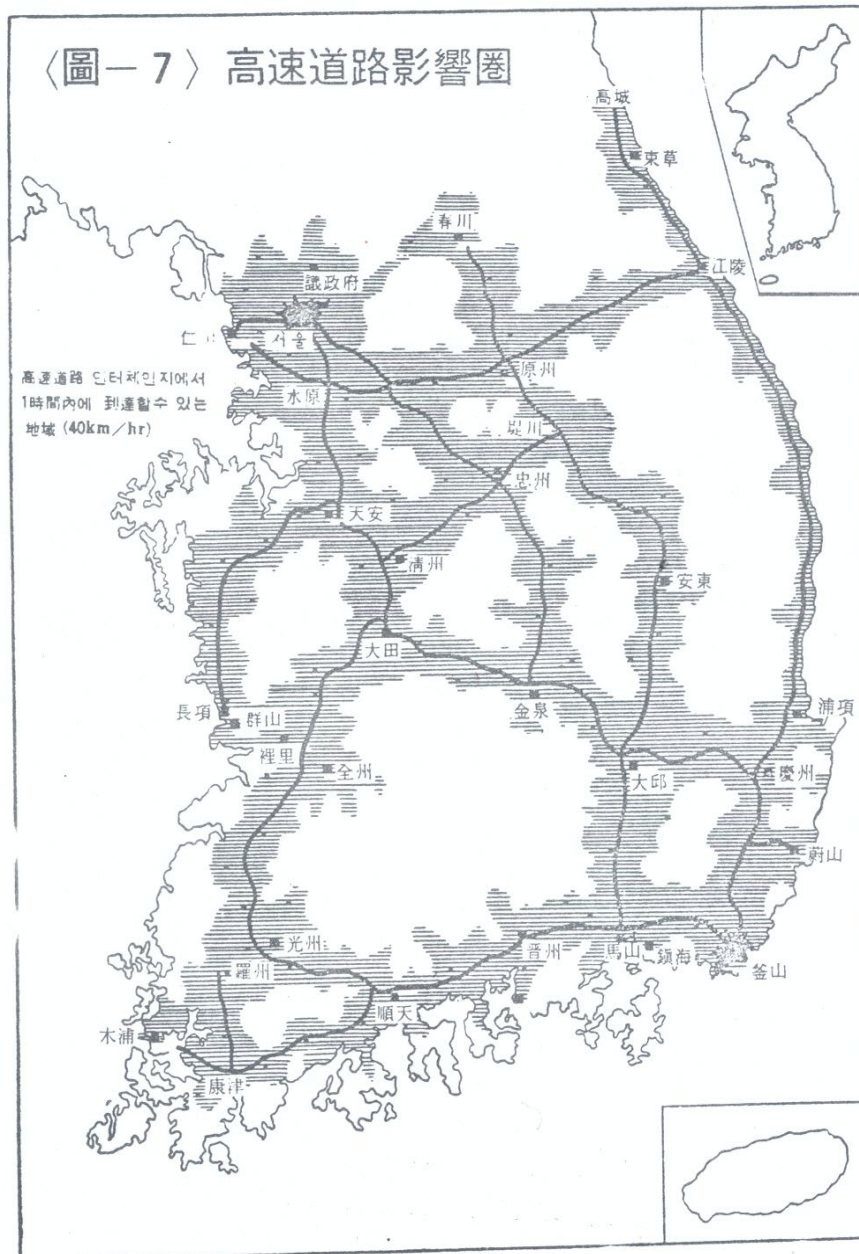
	1972~1976	1977~1981	계획기간중 합계 (‘72~’81)
계	1,000	944	1,944
(1) 전주~순천	189	-	189
(2) 원주~강릉	100	-	100
(3) 부산~순천	177	-	177
(4) 속초~포항	280	-	280
(5) 대구~마산	92	-	92
(6) 원주~대구	162	-	162
(7) 인천~수원	-	51	51
(8) 원주~춘천	-	193	193
(9) 천안~군산	-	146	146
(10) 목포~순천	-	141	141
(11) 제천~청주	-	110	110
(12) 서울~김천	-	220	220
(13) 나주~강진	-	43	43
(14) 포항~경주	-	40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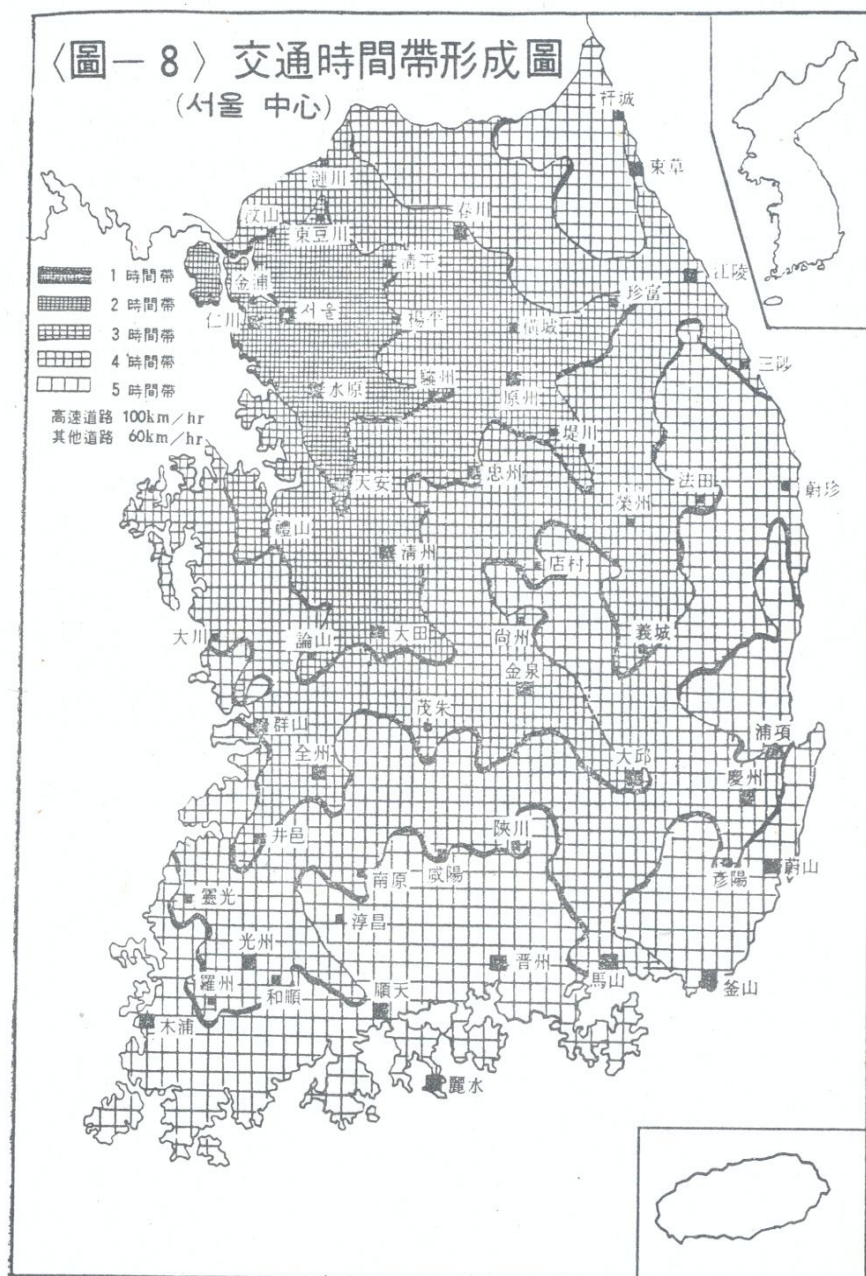
주 : (1) 1971년 기존 고속도로 656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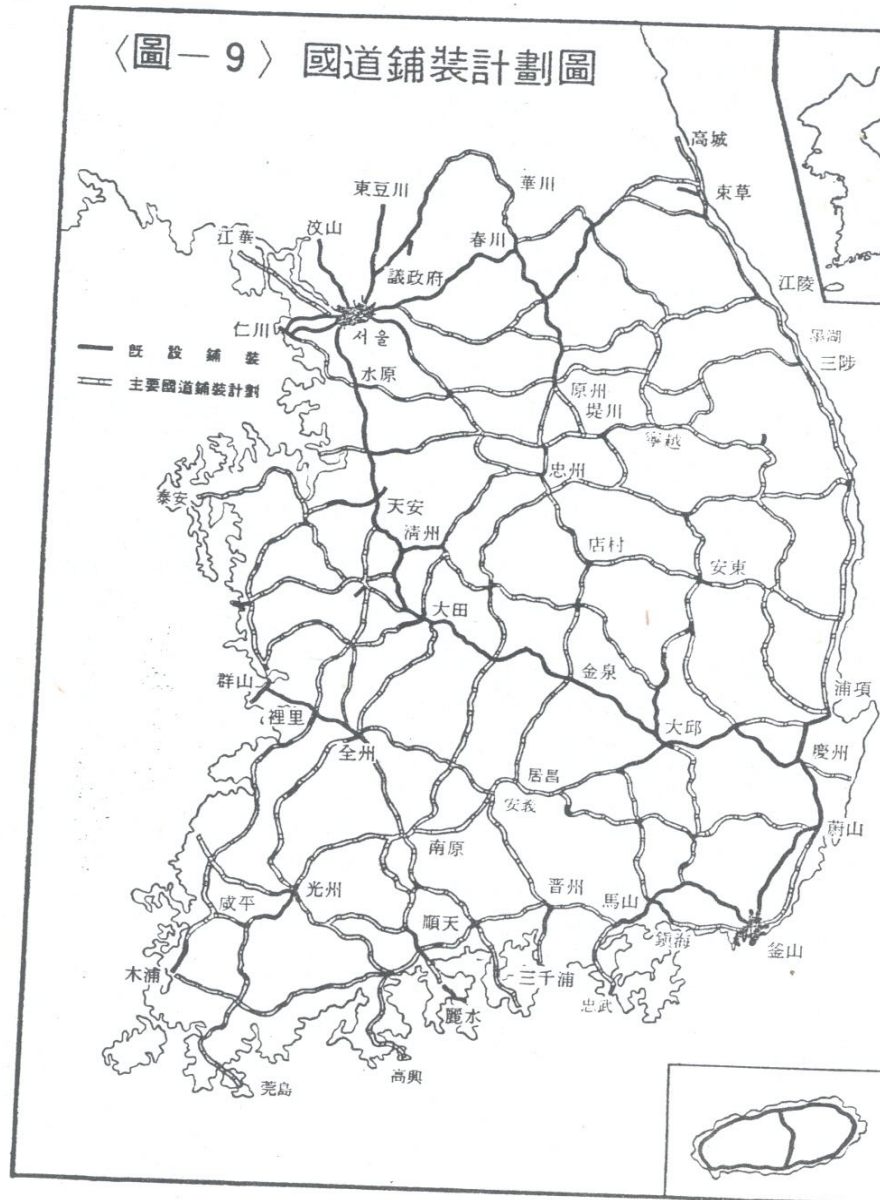
(2) 1981고속도로 총연장 2,600km

자료 : 경제기획원, 건설부









(4) 철도계획

(가) 개발방향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철도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왔다.

1970년 현재 우리나라 철도시설은 단선 2,671km, 복선 523km로서 철도 총연장은 3,194km이고, 연간 77.1억톤-km의 화물과 98.2억인-km의 여객을 수송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규모의 확대와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목표연도인 1981년의 철도 수송수요는 화물의 경우 1970년의 약 2.4배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자동차에 의하여 기동성의 새로운 면이 전개되는 「모타리제이션」 시대에 당도한 지금 특히 도로가 지나는 고유 장점 때문에 도로 교통으로 전환하는 수송량이 날로 증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철도는 과거와 같이 모든 종류와 등급의 수송용역을 제공하려는 운영방식을 지양하고 수송구조의 변천과 타 교통수단의 발달을 감안하여 장거리 대량수송 등 고유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함에 비추어 개발방향으로는

첫째, 철도수송수요의 증가에 따른 수송능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한편 노선의 개량과 중량화 등으로 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한다. 또한 하역시설 및 보안시설을 개선하므로써 수송능률을 제고한다.

둘째, 산업전철 및 여객 전용 고속전철을 건설하여 철도의 고속화와 안전화 및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하철 및 수도권외곽전철을 건설하여 대도시의 교통난을 완화한다.

셋째, 철도시설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량 「벌커」 화물 등의 수송에 대한 문자별 수송체제를 확립하고 정기적 대량 수송화물에 대하여는 「컨테이너」 시설과 화물「터미널」을 건설하여 교통수단 간의 협동 혼합 수송을 도모한다.

(나) 철도개발계획 계획기간 중 산탄지역의 수송증강 및 서울~인천 지역의 수송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고한~황지간 15km, 인천~부평간 18.5km의 단선철도를 건설하고 수송량이 폭주하는 호남선 중 대전~이리간 88.6km와 청량리~성북간 5.6km의 복선철도를 신설한다.

또한 산업철도의 수송력 증대와 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선, 태백선, 영동선 및 동해남부선 등 총 774.8km와 수도권의 서울~인천간, 서울~수원간 및 교외선에 107.9km의 일반전철을 건설하여 도합 882.7km를 전철화한다.

한편 수도권의 고밀화지역의 광역화와 그 기능을 원활히 하고 경제적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대전간 160km의 여객전용 고속전철을 건설하고 도시교통수요에 적합한 대량 교통수단인 지하철을 건설하여 버스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서울의 교통량을 완화하기 위하여 101km의 지하철을 건설한다.

<표-33>

철도개발지표

단위 : km

	1970	1976	1981	계획기간중 증가 (‘72~’81)	배율 (‘71~’81)
총연장	3,194	3,254.0	3,488.5	294.5	1.1
단선	2,671	2,610.3	2,610.3	△60.7	△1.0
복선	523	617.2	617.2	94.2	1.2
전철					
고속전철	-	-	160.0	160	-
지하철	-	26.5	101.0	101.0	-
(산업철도)	-	(348.6)	(774.8)	-	-
(일반전철)	-	(107.9)	(107.9)	-	-
전철화율(%)	-	14.8	32.2	-	-
(전철총연장)	-	(483.0)	(1,143.7)	-	-

주 : () : 기존연장에 포함됨

자료 : 건설부, 철도청

<표-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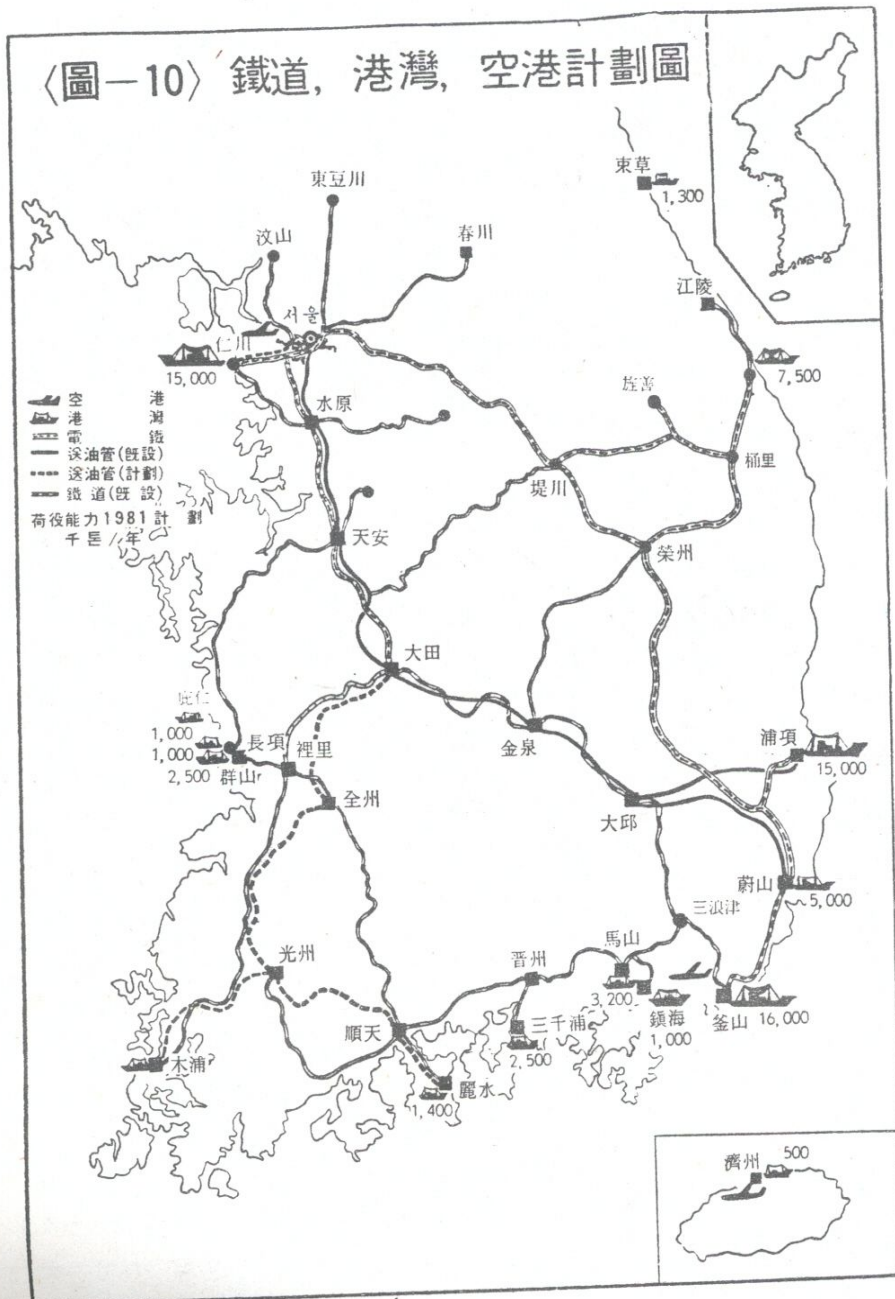
철도건설지표

단위 : km

	1972~1976	1977~1981	계획기간중 합계 (‘72~’81)
계	154.2	234.5	388.7
단선			
고한~황지	15.0	-	15.0
인천~부평	18.5	-	18.5
복선			
대전~이리	88.6	-	88.6
청량리~성북	5.6	-	5.6
고속전철			
서울~대전	-	160.0	160.0
서울시 지하철	26.5	74.5	101.0
전철	456.5	126.2	882.7
중앙선	155.2	227.5	382.7
태백선	107.9	-	107.9
영동선	85.5	86.4	171.9
경주~부산	-	112.3	112.3
수도권	107.9	-	107.9

주 : 전철 882.7km는 기설연장에 포함됨

자료 : 철도청



(5) 항만계획

(가) 개발방향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에 둘러 싸여 있어 비교적 해안의 만곡이 발달되어 있고, 수심이 깊어 항만 발달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으나 오랫동안 항만개발이 부진하였고 또한 외항선박의 출입이 가능한 16개의 개항장이 있으나 기존 항만은 부산항과 인천항 등 몇 개 항을 제외하고는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로 및 하역시설이 미비한 실정에 있다.

1970년 현재 우리나라의 해운 수송 부담률은 총화물량의 31.6%로서 그 양은 43,305천톤에 이르고 있으며 1981년에는 현재의 약 3.8배인 176,000천톤으로 증가하여 부담률은 37.1%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해운 수송수요에 대응하고 해양진출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만의 적극적 개발과 정비 확장이 요청됨에 비추어 개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육상화물과 해상화물의 신속한 결합 운송체제를 확립하고 항만 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 도로 등 육상 교통망 및 배후 도시와 연관하여 항만을 개발한다.

둘째, 임해지역에 입지한 해외원료 의존도가 높은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의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항만시설을 확충하여 공업 생산 활동과 물적 유통의 원활을 도모한다.

셋째, 국민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해외 협력 및 수출 시장의 다변화에 의한 수출 규모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자유항 건설 촉진 등으로 국제 개항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 하역능력을 향상시킨다.

넷째, 하역시설 현대화를 위한 「컨테이너」 전용부두건설을 촉진한다.

(나) 항만개발계획 계획기간중 증대하는 시설 소요 화물량 85,400천톤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벽 29,062m, 물양장 20,354m 및 방파제 19,189m를 건설하여 목표연도의 하역능력을 98,942천톤으로 향상시킨다.

계획기간중 항만별 수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계획으로서 주요 17개 항만 가운데 국가의 기간 항만인 부산항, 인천항, 군산항, 목포항 등을 중점 개발하여 하역능력을 각각 16,000천톤, 15,000천톤, 2,500천톤, 7,500천톤으로 증대시키고 주요 임해공업지를 지원하는 울산항과 포항신항을 각각 5,000천톤과 15,000천톤으로 하역능력을 증강하는 한편 그 밖의 10개 중요항 및 기타 28개 항에 대하여도 각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송 수요에 대응할 하역능력 향상을 강화한다.

이로서 1970년 현재 1천톤급 이상 선박의 동시 접안능력 83척은 1981년에는 300척으로 증대될 것이다.

<표-35> 「컨테이너」 부두 건설계획

	「컨테이너 화물」 (1981)	「바스」 연장
합계	10,000천톤	2,750m
인천항	4,200천톤	1,160m
부산항	4,800천톤	1,290m
목포항	1,000천톤	300m

주 : 1981년 5.8%의 컨테이너 화

<표-36> 항만계획지표

		단위	1970	1976	1981	계획기간중 증가('72~'81)	배율 (‘81/’71)
해상 화물량		천톤	43,305	93,600	176,000	129,100	3.8
시설소요화물량		"	19,642	40,727	109,400	85,400	4.5
하역능력		"	18,213	39,050	98,942	77,115	4.5
시설	안벽	m	10,820	20,580	41,387	29,062	3.3
	물양장	"	23,514	29,613	44,258	20,354	1.8
	방파제	"	24,774	31,824	45,162	19,189	1.7
화물 구조	국제	%	50.9	49.1	49.0	△2.6	△1.5
	연안	"	49.1	50.9	51.0	2.6	1.5
	입하	%	67.3	63.3	69.8	0.3	1.0
	출하	"	32.7	36.7	30.2	△0.3	△1.0
유류목재화물비율		%	54.6	56.4	39.0	△13.8	△1.4
동시 접안능력 (일천톤급 이상)		cjr	82	160	300	210	3.3

자료 : 건설부

또한 인천, 부산, 목호 등 3대항에 특수 화물 및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따른 「컨테이너」 화물을 다룰 수 있는 전용 부두 시설을 건설하여 1981년에는 연간 10,000천톤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한다.

한편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약 1,300여 개의 군소 어항 중 청산도, 모금포, 욱지도, 어청도, 서거차, 덕적도 등 52개 어항을 점진적으로 개발하여 지방 어로 활동의 중심지로 개발한다.

<표-37>

주요항만 하역능력 추세

단위 : 천톤

	1970	1976	1981	계획기간중 증가 (‘72~’81)	배율 (’81/’71)
계	18,213	39,050	98,942	77,115	4.5
인천항	1,420	7,953	15,000	12,400	5.8
부산항	5,740	11,000	16,000	10,140	2.7
군산항	540	1,245	2,500	1,960	4.6
울산항	1,000	1,938	5,000	3,690	3.8
진해항	500	500	1,000	500	2.0
삼천포항	182	500	2,500	2,318	13.7
마산항	703	1,333	3,200	2,320	3.6
여수항	698	880	1,400	702	2.0
목호항	4,420	4,910	7,500	3,080	1.7
제주항	152	428	800	477	2.5
포항신항	-	3,600	15,000	15,000	-
목포항	443	841	1,800	1,357	4.1
장항항	272	388	1,000	728	3.7
비인항	-	333	1,000	1,000	-
속초항	211	800	1,300	969	3.9
기타(29개)	1,932	2,401	23,942	20,474	9.5

자료 : 건설부

(6) 공항계획

(가) 개발방향 항공 교통은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수송비가 높아 보편화되지 못한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항공 수송의 고속성과 지리적 장벽을 초월한 고유 장점 때문에 최근에는 그 수요가 격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항공수송은 도시간과 주요 공업지간 또는 관광 유원지간을 연결하고 국제항공은 대륙간 장거리 수송과 인접국가간의 중거리 수송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국제 항공은 현재 주로 중거리 수송이며 최근에는 비로소 미국의 항로를 개설하였다.

장차 항공 수요는 국민소득의 향상, 여행관습의 변화, 국제여행의 자유화, 시간가치관의 변화 및 국제교류의 확대 등 수송수요 조건의 변화와 항공기의 고속화 대형화에 기인한 운임의 저하 및 안전성 쾌적성의 증대 등 많은 여건의 호전에 따라 항공수송의 수요가 가속적으로 증가되리라고 전망된다.

1970년의 국내 항공 여객수는 1,093천인이었으며 화물수송은 3,502톤에 불과한 실정이나 1981년에는 여객 수송수는 9,677천인에 이르게 될 것이며 화물수송량은 현재보다 7.1배가 증가한 30,12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항공에 있어서는 1970년 현재 여객 393천인 화물 25,000통이었으나 1981년에는 국제여객은 7,477천인으로 16배가 증가하고 국제화물에 있어서는 19배인 649,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산업경제 활동의 광역화는 국내 기업의 국제 기업화를 촉진시킬 것이며 문화 사회활동의 확대는 국제적 문화교류도 활발해 질 것이며 소득수준의 향상은 관광수요도 국제화 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제항공 수송수요는 급격히 증가될 것이 예측됨에 따라 개발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김포, 김해 및 제주 등 3개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개발 확장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공로 관문이 되는 김포 국제공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화물터미널, 평행 활주로의 신설, 국제선 종합청사의 연간 500만인 규모의 국제여객이 출입가능하도록 개발하며 제주 공항은 국제항공 터미널로서 개발 확충한다.

둘째, 국내공항 14개소를 점진적으로 정비 확충하며 국내 민간항공을 발전토록 한다.

(나) 공항개발계획 김포공항, 김해공항 및 제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김포 및 김해공항에 평행활주로 3,200m를 각각 신설하고 제주국제공항은 3,500m의 활주로를 신설하여 국제공항 터미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또한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른 민간 항공수요에 대응할 국내공항 시설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14개 국내공항을 정비 확충한다.

<표-38>

공항계획지표

단위 : 여객 천인, 화물 천톤

	1970	1976	1981	계획기간중 증가 (‘72~’81)	배율 (’81/’71)
국내					
여객	1,093	5,028	9,677	8,556	8.6
화물	4	14	30	26	7.1
국제					
여객	393	1,867	7,447	7,011	16.0
화물	25	144	649	615	19.0
국제공항(개)	3	3	3	-	-
활주로(m)					
김포	2,468	(1)2,500	3,200	-	-
		(2)3,000	3,200	-	-
김해	2,143	2,100	3,200	-	-
제주	1,575	2,000	3,500	-	-
국내공항(개)	14	14	14	-	-

자료 : 교통부, 건설부

(7) 「파이프라인」 계획

현재 우리나라에는 1971년에 완공을 본 포항~서울간 407km의 송유관과 1971년말까지 완공될 울산~대구간 100km를 합하여 총연장 507km의 장거리 유류전용 송유관을 보유하고 있다.

「파이프라인」은 유류뿐 아니라 석탄, 곡물류에 이르기까지 활용 가능한 수송수단으로서 선진국에서는 널리 개발 연구되고 있으며 금후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기술혁

신과 더불어 가속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남해안 임해 공업지대의 지역내와 임해 지역의 중요 유류 공급지, 대도시 간 및 공업지역간의 「파이프라인」 수송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경공업의 완전 국산화가 이루어지며 자본재 비가 50% 수준에 까지 이르게 되어 공업화 제3단계에 돌입하리라 전망됨에 따라 원재료 또는 동력원으로서 유류의 상대적 고수요가 요청되는 석유화학, 자동차공업, 합성화학공업 등은 대량 신속한 유류 수요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므로 유류 수송에 있어 가장 경제적이며 신속 정확한 「파이프라인」의 건설은 더욱 필요하리라고 추정된다.

「파이프라인」 건설은 기술혁신에 대비하여 유류이외의 다량 액체수송은 물론 전말류, 분말류의 수송도 가능하도록 병행 개발하여 육로 교통의 번잡을 감소시키고 관 수송의 부담효과를 증진시키도록 한다.

계획기간중 관수송이 요망되는 3개 노선에 대해 432km의 유류 전용 송유관을 시설하브로서 기존 송유관과의 결합을 완비하도록 하고 내륙도시간의 유기적인 관 수송망체계를 경제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개발 확대하도록 한다.

<표-39> 「파이프라인」 계획

	1971	1976	1981	비고
계	507	547	939	
포항~서울	407	407	407	기설('71)
울산~대구	100	100	100	'71완공
인천~서울	-	40	40	신설
목포~대전	-	-	260	신설
여수~광주	-	-	132	신설

나. 통신 시설의 정비확충

(1) 통신개요

경제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경제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생활의 현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보 매체로서의 통신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에

부응한 통신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새로운 통신기술의 도입 발전이 요구된다.

더욱 미래 산업의 새로운 부문으로 등장하게 될 정보 산업은 장래 기업경영을 정보관리 체제로 발전시켜 각종 통계자료 및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과학적인 검증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정보를 개개의 기업이 개별적으로 수집, 분류, 분석하여 이용한다는 것은 정보의 다양성 신속성과 막대한 경비 등을 고려한다면 비능률적이므로 정보센터에 의한 일괄조사와 수요자에 대한 정보 공동이용의 「풀」방식의 발전이 예측된다.

통신수요는 정보에 비례하여 정보량은 경제, 사회 등 모든 인간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우편, 전신, 전화 등의 통신수요가 인간활동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격증하고 있다. 따라서 우편물은 물론 정보의 매개체로 주역할을 담당하는 전화 수요가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기업의 증대 및 생활권의 광역화에 따라 국민생활의 필수적 편익수단으로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1970년 현재 시내 전화수요는 668천 회선이며 1981년에는 4.3배가 증대된 3,729천 회선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시내전화에 있어서는 1970년의 7,261회선에서 1981년에는 63,800회선으로 늘어나며 국제전화와 국제통신도 국제간의 교역증대와 해외협력 관계의 긴밀화로 인하여 그 수요가 대폭 증대될 것이다.

(2) 기본방향

통신수단은 기술혁신에 따라 시간과 공간 거리를 극복하며 「메스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동시성, 교화성, 균질성 등이 사회환경과 상호작용으로 국민생활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정보체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신개발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유통업무의 확대 및 그 기능의 신속화에 따른 통신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의 혁신을 도모하고 시설을 확충 정비한다.

둘째, 대도시와 지방중심도시 상호간의 시외전화는 자동즉시화(D.D.D)가 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전국을 1시간 정보권화 하도록 한다.

셋째,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국제 통신망 시설을 확충하여 세계 전역에 대한 교역 증대와 해외 협력의 긴밀화를 도모한다.

넷째, 도시와 농촌 및 도서간을 직결하는 유·무선 통신망을 전국적으로 정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다섯째, 통신시설의 지하매설을 촉진하며 도시환경의 개선과 통신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능률화를 기한다.

(3) 통신개발계획

계획기간중 시내전화 2,495천회선의 공급을 증가하여 현재의 559천회선에서 1981년에는 2,997천회선으로 증대시켜 수요의81%를 공급함과 동시에 자동화율은 현재의 74.9%에서 목표연도에는 95.0%로 제고시킬 것이며 전화 보급률은 현재의 100인당 1.78대에서 8.1대로 대폭 향상시킨다.

시외전화는 계획기간중 55,615회선의 공급을 증가하여 총수요의 90%를 공급하며 대도시와 지방 중심도시간은 완전 자동화한다.

또한 국내전신의 공급을 5,100회선 증가하고 국제전신 158회선과 국제전화 422회선을 각각 증대시킨다.

국제전화에 있어서는 미국과 일본간을 완전 자동화하고 기타 지역은 반자동화하여 제2 위성통신국을 건설하여 인도양상의 위성통신을 이용 인도,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과의 전화 및 TV 중계망을 구축한다. 이로써 세계단위의 정보체계를 확립하여 세계통신 정보를 비롯하여 신문해설 뉴스 광고망을 통한 소비생활의 정보와 기업간의 빠른 교역정보를 교환하여 세계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토록 한다.

한편 농어촌 통신수단을 크게 개선 확충하기 위하여 계획기간 중 리 동간 15,221회선, 군소도서예 109회선을 증설하여 전국의 농어촌과 주요 도서간의 통신망을 완전 정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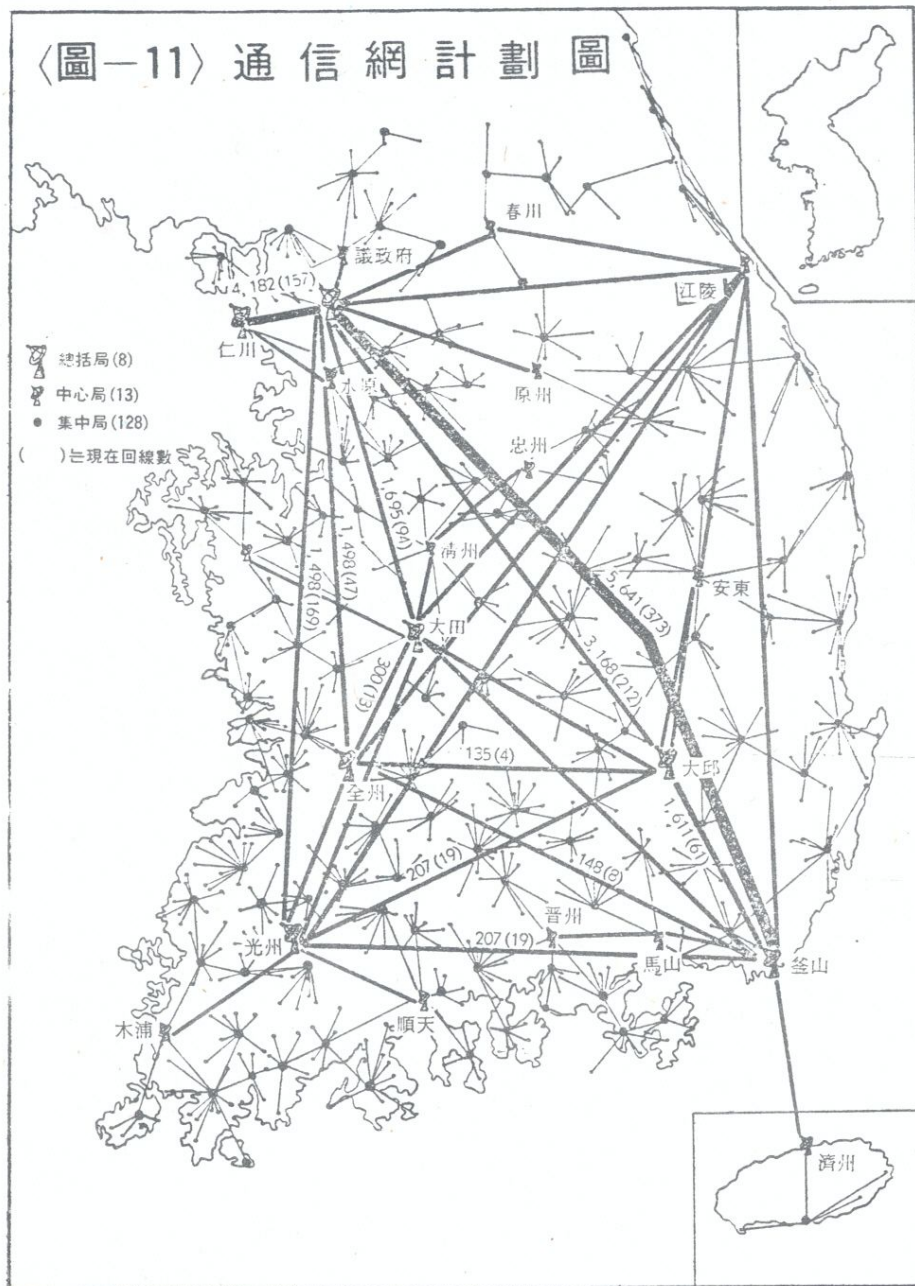
<표-40>

통신계획지표

단위 : 회선

		1970	1976	1981	기간중 증가 (‘72~’81)	배율 (‘81/’71)
시 내 전 화	수요	668,000	1,168,000	3,279,000	2,862,730	4.3
	공급	559,376	1,120,766	2,997,000	2,494,500	4.7
	자동화율	74.9	82.6	95.0	18.9	1.2
	100인당보급 (대/100인)	1.78	3.30	8.10	6.32	4.1
시 외 전 화	수요	9,147	32,349	70,030	58,779	6.3
	공급	7,261	28,306	63,800	55,615	7.8
국 내 전 신	수요	1,700	4,051	7,033	4,699	3.0
	공급	800	4,000	6,300	5,100	3.0
국 제 전 화	수요	87	275	581	454	5.2
	공급	159	331	581	422	5.4
국 제 전 신	수요	46	107	178	120	3.7
	공급	105	140	178	158	1.7
농 어 촌 전 화	계	3,669	9,191	19,681	15,330	4.5
	리동(유선)	3,613	9,057	19,478	15,221	4.6
	도서(무선)	86	134	203	109	2.1

자료 : 체신부



2. 도시개발

가. 도시화 추세

1970년 현재(10.1센서스) 전국 인구는 31,469천인으로서 1960~1970년의 10년간
 년평균 2.5%를 넘는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그 중 읍급이상의 도시에 있어서는 년평
 균 5.2%의 높은 증가율로 인하여 도시인구는 전국인구의 약 50%에 해당하는
 15,800천인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1949년의 도시화율이 28%에 불과했던 것을 상기하면 우리나라의 도시화
 추세가 급 템포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도시수에 있어서도 1949년에 15개
 시가 32개시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가 8개에서 15개로 늘어났을뿐 아니라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1개에서 3개로 증가하였으며 읍급도시도 74개에서 91개로 늘어났
 다.

<표-41>

도시 및 시, 읍, 면 인구의 변화

단위 : 천인

	인구			지수(1960=100)	
	1960	1966	1970	1966	1970
총인구	24,989	29,208	31,469	116.9	125.9
도시인구(시+읍)	9,784	12,440	15,800	127.1	161.5
시인구	7,471	9,810	12,955	131.3	173.4
읍인구	2,313	2,630	2,845	113.7	123.0
면인구	15,205	16,768	15,669	110.3	103.0

주 : 센서스 인구임

도시화과정에 있어서 인구의 분포상태를 보면 읍급 또는 10만이하의 소도시들은
 인구증가가 미미하여 자연증가율에도 이르지 못하는 도시도 있는 반면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인구증가가 괄목할 정도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1949년에 1,446천인에 불과했던 것이 1970년에는 약 4배로
 팽창하여 연평균 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도시로의 인구증가는 농촌경제의 상대적인 부진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제1차 및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따라 도시에 있어서의 공업이 개발되므로 농촌인구를 흡수한데 있어서도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앞으로 있을 계속적인 경제개발계획은 공업화를 촉진하므로써 한층 더 도시화 과정을 가속시킬 것이 예상되므로 1981년의 도시인구는 총인구의 약 6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42>

도시화추세

단위 : 천인

	총인구	도시인구	농촌인구	비율(%)	
				도시	농촌
1960	24,989	9,784	15,205	39.2	60.8
1966	29,208	12,440	16,768	42.6	57.4
1970	31,469	15,800	15,669	50.2	49.8
1976	34,345	19,750	14,595	57.5	42.5
1981	37,000	24,050	12,950	65.0	35.0

주 : 1970이전은 센세스 인구임

자료 : 경제기획원, 건설부

나. 도시개발의 기본방향

도시는 연혁적으로 단위 도시 스스로의 후생문제 추구하고 도시가 위치한 배후지와 의 상관 관계에서 오는 유대 및 편익의 제공이란 두 면을 지니고 있다. 도시개발 문제가 국토계획에서 중요시되는 이유는 국가 제기능의 집적지로서 사회간접자본에 의한 편익시설의 이점도 있으나 이 밖에도 지역개발의 거점으로서의 기능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 도시개발이 지역격차의 시정, 고용의 안정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할 뿐 아니라 지방산업의 진흥과 자원개발적 성격을 띠게 되므로 전국적인 입장에서 도시의 지역적 적정배치와 개발은 국토계획의 중요한 측면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입지와 그 구조는 한 국가단위의 경제체제를 영위하는데 있어 큰 능력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도시체계의 합리적 조정과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방향을 설정한다.

첫째, 이미 설정된 경제개발권역을 토대로 지역간 유통질서를 능률화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시의 적정배치를 기함과 동시에 고속도로를 비롯한 교통시설망의 합리적 체계화로 도시입지 구조의 개선을 기한다.

둘째, 도시규모의 계층화를 촉진하고 지역간 자립과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의 성장속도와 특성을 감안한 도시기능의 특화를 촉진하는 한편, 공업단지 등의 적정배치를 통하여 소비성향적 도시를 생산적 도시로 그 기능을 강화하고 기능이 미분화 상태에 있는 중소도시를 지역기능에 적합한 특수기능 도시로 육성시키므로써 전국도시의 조화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셋째, 서울, 부산, 대구 등 과대화하는 대도시의 인구 및 공업을 분산하여 국토방위와 전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 대도시에 있어서는 현행 토지용도지역제를 한층 강화하여 공장, 학교, 도매시장 등 인구집중의 요인이 되는 특정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개발예정지역의 지정과 도시의 무질서한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는 차단녹지 등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을 지정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축조 및 기존 주택용 건축물과 비주택용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을 불허하여 시가지화를 강력히 억제하고 이와 병행하여 서울에의 인구집중의 요인이 되는 대소 중추관리기능 등 수도에 위치할 필요가 없는 관아나 국영기업체 본사의 지방분산을 기한다.

넷째,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대량생산고 기동성이 보장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기능에의 적응을 위해 도시의 기성시가지내 특히 도심부 재개발을 촉진한다.

다섯째, 전국도시의 적정규모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으로서 권역별 중심도시에 대한 합리적 인구분산으로 지방 중소도시를 육성한다.

여섯째, 도시인구규모별 공공시설기준을 정하여 건전한 도시발전과 쾌적한 시민생활을 도모한다.

다. 권역별 도시배치와 인구배분

(1) 도시배치

경제발전에 따른 생산권 및 소비권의 확대는 도시세력권의 광역화를 초래하여 도시성장과 상호간의 독자적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도시성장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개발권역에 따른 자원의 부존상태, 역사적 발전 연혁과 인문지리적 환경, 바람직한 도시의 기능 및 공업을 비롯한 제산업의 입지인자와 교통 및 인구의 분포 등을 고려한 세력권을 감안하여 권역별 중

심도시를 적정배치하여 육성하는 동시에 도시의 계서화(階序化)에 따라 대권중심도시, 소권중심도시 및 지구중심도시로 구분하프로서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2) 도시인구구성

1970년 현재 도시인구는 총인구의 50.2%를 점하는 15,800천인이나 이 중 82.3%에 해당하는 12,955천인이 시급 도시인구이고 나머지 17.7%인 2,845천인이 읍급 도시인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도시인구는 목표연도인 1981년에는 총인구 37,000천인의 65%에 해당하는 24,050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도시수도 134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인구 50,000인 이상의 시급도시는 40개가 될 것이 예상되며, 이 40개 도시의 인구는 20,400천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들 40개 도시의 인구 규모별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1,000,000인 이상 도시가 5개, 500,000~1,000,000인 도시 4개, 250,000~500,000인 도시 6개, 100,000~250,000인 도시 20개, 50,000~100,000인 도시는 5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43>

도시인구구성

단위 : 천인

	1970		1976		1981	
	도시수	인구	도시수	인구	도시수	인구
도시인구	121	15,800	125	19,750	134	24,050
시	32	12,955	35	16,490	40	20,400
읍	89	2,845	90	326	94	3,650

자료 : 건설부

<표-44>

인구규모별 도시구성(시급도시)

단위 : 천인

	1970		1976		1981	
	도시수	인구	도시수	인구	도시수	인구
계	32	12,955 (100.0)	35	16,490 (100.0)	40	20,400 (100.0)
1,000이상	3	8,500 (65.6)	3	9,600 (58.2)	5	12,500 (61.2)
500~1,000	2	1,149 (8.9)	3	2,200 (13.3)	4	2,400 (11.8)
250~500	2	678 (5.2)	5	1,580 (9.6)	6	1,950 (9.6)
100~250	11	1,532 (11.9)	20	2,810 (17.1)	20	3,250 (15.9)
50~100	14	1,096 (8.4)	4	300 (1.8)	5	300 (1.5)

자료 : 건설부

(3) 대도시 인구분산과 권역별 중심도시의 육성

우리나라의 도시발전형태는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어 수도 서울과 부산의 양대 도시에 인구와 산업이 과대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불균형한 인구집중상태를 개선하기

<표-45>

8중권 중심도시 인구전망

단위 : 천인

	1970	1976	1981	1970~1981간 년평균증가율
서울	5,536	6,100	6,300	1.2%
부산	1,881	2,200	2,500	2.6%
대구	1,083	1,300	1,500	3.1%
광주	503	770	1,100	7.6%
대전	415	570	750	5.7%
진주	263	410	600	8.7%
강릉	74	130	200	9.6%
제주	106	150	200	6.0%

<표-46> 도시규모별 공공시설 기준

단위 : 천인

	단위	1970			
		50이상	100이상	200이상	1,000이상
가로율	%	4.6	5.5	5.5	6.3
포장율	%	27.1	28.1	29.5	33.0
공원시설율	m ² /인	-	-	-	2.6
상수도보급율	%	52.8	63.9	67.1	76.8
1인1인당급수율	ℓ	83.0	94.5	88.2	175.0
하수도보급율	%	14.5	28.2	23.9	32.9
하수종말처리장	개소	-	-	-	-
진개처리공장	"	-	-	-	-
종합경기장	"	-	-	-	-
실내체육관	"	-	-	-	1
도서관시설율	장서수/만인	459	446	503	1.160
의료병상율	병상수/만인	13.3	21.6	10.4	10.7
전화보급율	대수/백인	2.2	2.2	2.4	3.0
교실부족율	%	74	11.9	14.5	14.5
도매시장	개소	-	-	-	3
동식물원	"	-	-	-	1

자료 : 내무부, 건설부

<표-46> 도시규모별 공공시설 기준

단위 : 천인

1976				1981			
200이하	200이상	500이상	1,000이상	200이하	200이상	500이상	1,000이상
8.0	9.0	9.1	10.8	11.0	13.0	15.0	20.0
30.0	30.0	35.0	44.0	34.3	40.5	45.0	55.0
6.0	6.0	6.0	6.0	10.0	10.0	10.0	10.0
85.0	85.0	90.0	90.0	85~90	90.0	90.0	90.0
100~150	150~200	200~250	300이상	150~200	200~250	250~300	300이상
20.0	35.0	35.0	40.0	30.0	40.0	45.0	50.0
-	-	-	1	-	-	1이상	1이상
-	-	-	1	-	1	"	"
-	-	-	1	-	1	"	"
-	-	-	1	-	1	"	"
1000	1,500	2,000	2,500	1,500	2,500	3,000	3,000
10.0	20.0	35.0	40.0	10.0	25.0	40.0	50.0
4.0	5.0	7.0	9.0	6.0	7.0	10.0	15.0
0.0	0.0	7.0	10.0	0.0	0.0	0.0	0.0
-	-	-	3	1	1	3	3
-	-	-	1	1	1	1	1

자료 : 내무부, 건설부

위하여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인구집중을 합리적으로 규제 억제하고 권역별 지방중심도시의 기능 강화로 적정규모의 인구를 배분하는 것이 소망스럽다.

8개 중권 중심도시중 서울, 부산, 대구를 제외한 강릉, 대전, 전주, 광주, 제주 등 5개 도시에 대하여는 교통시설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 정비하는 한편 고용증대를 위한 공업의 적정 배치로 그 권역의 경제적 문화적 기능을 강화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소권 중심도시 및 그 밖의 시급 도시와 읍급 지구중심도시는 각 도시의 산업, 관광, 문화, 교통 등 그 배후지가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소권 및 그 지구의 중심도시로서 중권 중심도시와 유기적으로 연결개발함과 동시에 특히 인구 20만~30만 규모 도시의 육성강화책을 강구한다.

라. 광역도시계획과 용도지역제의 강화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의 위성도시 개발 육성으로 인구분산을 도모하고 부도심을 정비하여 단핵도시를 다핵도시로 재편성한다.

또한 각급 도시의 토지이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시설제한구역, 개발예정구역 및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등을 지정함으로서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과 고밀화를 방지하고 도시미관 및 도시기능 향상을 도모한다.

마. 도시규모별 공공시설 기준

도시시설의 정도는 그 나라의 국민경제규모와 공공투자성향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동안 급격한 도시화과정에 따라 막대한 공공투자를 했었으나 원체 기반이 약했던 탓으로 도시공공시설은 상수도과 가로면에 약간의 진전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소득과 문화수준의 향상에 따라 도시민이 즐거운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기초적인 도시시설의 정비가 시급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시설의 정비지표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시설을 정비한다.<표-46 참조>

4. 생활환경의 개선

국토 개발의 궁극적 목적은 생산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발과 더불어 국민 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고 일상사회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개발도상 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 경제성장에 주력한 결과 그 부작용으로 주택난, 도시교통난, 공해 등을 비롯하여 상하수도, 분뇨처리 등의 미비로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소년범죄, 빈민굴 등 사회병리에 시달리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과밀한 인구와 6. 25사변 등에 의해 주택을 포함한 상하수도 및 생활환경의 개선에 주력할 여유가 없었으나 제 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통한 국민 경제규모의 확대와 소득수준의 향상은 생활환경의 정비개선에 막중한 투자 수요가 상정되고 있다.

가. 주택계획

(1) 건설방향

주택은 인간정주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인구의 증가와 세대의 분화에 따른 핵가족화의 진행은 주택난을 한층 더 가속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 현재 22.2%의 주택부족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도시는 44%, 농촌은 10%로 도시지역의 주택건설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주택의 대량건설과 저렴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조립식 주택 등을 적극 개발하여 그 수요에 대처하도록 다음과 같이 건설방향을 설정한다.

첫째, 주택부족율을 목표연도까지는 15%로 줄이기 위해 건축자재 부품의 양산화와 조립식 건축방식을 촉진한다.

둘째, 저렴주택의 대량공급과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자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우량자재의 개발로서 도시 농촌별 표준주택을 보급한다.

셋째, 도시계획에 의한 주택단지 조성 촉진으로 민간투자 여건을 증대토록 한다.

넷째, 공영 및 민영주택건설을 위한 정부의 자금지원과 주택건설을 위한 민간투

자의 적극적인 권장으로 주택건설업자를 육성한다.

다섯째, 농촌지역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농촌 표준주택의 설정과 더불어 지방
개량 등으로 주택의 질적향상을 도모한다.

(2) 주택 건설 계획

계획 기간중 2,030천호의 주택을 건설하브로서 1970년 현재 4,338천호에서 목표연
도인 1981년에는 주택보유수를 6,023천호로 증가시킨다.

따라서 동 계획기간중 1,394천호의 가구수의 증가와 425천호의 멸실주택을 감안
하면 목표연도에는 1,063천호의 주택이 부족될 것이 예상되나 주택의 구조나 질적
면에 있어서는 호당 평균면적이 현재의 약 20㎡에서 50㎡로 향상된다.

<표-47> 주택수급계획 지표

	단위	1970	1976	1981	계획기간중 증가 (‘72~’81)	비교 (‘81/’71)
인구수	천인	31,317	34,345	37,000	5,151	1.2
가구수	천호	5,574	6,349	7,086	1,394	1.2
주택수	천호	4,338	5,008	6,023	1,605	1.4
부족수	"	1,236	1,341	1,063	△211	△1.2
(부족율)	(%)	(22.2)	(21.1)	(15.0)	(△7.3)	(△15)
건설호수	천호	120	800 (‘72~’76)	1,230 (‘77~’81)	2,030	-
멸실호수	"	40	210	215	425	-

주 : 가구수는 1인가구 및 준가구 제외

자료 : 경제기획원, 건설부

나. 주택계획

(1) 개선방향

급격한 도시화 과정의 진전은 인구, 산업시설, 정보 및 중추관리기능의 집적으로 과밀의 폐해를 파생시켜 주택 및 교실의 부족, 교통시설의 미비, 시장 병원 상하수도 등 도시 공급시설의 미흡, 도심지내의 불량 주택지구의 발생과 진개 및 분노 처리시설의 불비 등으로 생활환경의 악화를 초래했다. 과밀한 불량주택 지구는 대부분이 실업자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저소득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해한 환경의 조성 등으로 부정적 의식이 조성되기 쉽다.

불량주택지구의 과밀현상은 군거생활로 인하여 가족이나 이웃간의 긴장이나 갈등이 생기므로써 청소년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뿐 만 아니라 정서생활의 결여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도시미관상의 불결, 화재연소의 우려, 전염병의 만연 등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첫째, 건강한 도시생활의 영위를 위해 공급처리시설을 확충하여 도시환경의 점진적 개선을 꾀하도록 한다.

둘째, 기존 시가지내의 도심지의 재개발을 촉진하고, 주변지역과 신시가지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단위지역 중심으로 정비하고 도시적 서어비스 기능을 균등히 향유하도록 한다.

셋째, 도시의 메카니즘화에 따른 가로망의 재정비와 대중 고속 대량교통시설인 지하철을 건설하고 도시교통을 종합적으로 개발정비하여 기성시가지와 부도심 및 주변지역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시민생활의 능률화를 기한다.

넷째, 도시환경의 위생적 측면에서 상수도 하수도의 보급확충을 비롯하여 인구의 증가와 비례하는 진개와 분노는 종래의 매립용이나 농촌 환원식의 처리방법을 지양하고 화학적 처리시설을 갖추게 한다.

다섯째, 오염된 도시 대기의 정화와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공개녹지를 확보하는 동시 주거지 단위별 어린이 놀이터를 확보하여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2) 상수도

1970년 현재 우리나라의 급수인구는 11,130천인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35.5%에 이르고 있고 1일 1인당 평균급수량은 175ℓ이며 32개 시부의 상수도 평균보급율은 73%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계획기간중 도시에의 인구집중은 급수수요의 현저한 증대가 예상되며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변소의 수세화, 냉난방 및 세탁기의 보급 등 생활양식의 근대화에 따라 생활용수 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이 예측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목표연도의 급수인구를 22,200천인으로 계획하고 보급률은 현재

의 35.5%에서 60%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1일 1인당 평균급수량은 250ℓ로 끌어 올린다. 이와 같은 물 수요에 대응키 위하여는 상수도시설의 확충정비와 광역상수도 개발의 촉진과 지하수의 적극적 개발로 저렴한 물을 공급토록 한다.

상수도계획

	단위	1970	1976	1981	계획기간중 증가 (‘72~’81)	비고 (‘81/’71)
총인구	천인	31,317	34,345	37,000	5,151	1.2
급수인구	”	11,130	17,653	22,200	10,600	1.9
(보급률)	(%)	(35.5)	(51.4)	(60.0)	(23.6)	(1.6)
시설용량	천톤/일	2,369	3,500	5,800	3,047	2.1
1일1인급수량	ℓ	175	200	250	70	1.4

자료 : 경제기획원, 건설부

(3) 하수도

우리나라의 하수도 시설보급은 1970년 현재 전국 121개 도시의 시설소요량 16,800km에 대해 11%에 불과한 1,850km를 확보하고 있으나, 도시 인구에 대한 배수 인구의 비율은 24.3%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하수도 시설의 부족은 배수의 곤란, 지하수의 오염, 시가지의 침수, 악취 등으로 전염병의 발생원이 되는 비위생적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요인이 되므로서 맑고 깨끗한 시민생활 영위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및 하수시설의 현대화를 기하고 하천수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동일 하천유역내의 하수도를 동시에 개발정비하는 광역적인 견지에서의 하수도정비를 도모하는 한편 대도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필수조건으로 하수도개발을 촉진한다.

이로서 목표연도까지는 전국 하수도시설 소요량의 약 20%선의 하수도가 시설될 것이나 오수와 폐수에 대한 위생 하수도시설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대도시에서 2,290백만㎡의 시설용량을 갖추게 되므로써 도시 인구에 대한 배수인구의 비율은 40.8%로 향상된다.

<표-49>

하수도 계획지표

	단위	1970	1976	1981	계획기간중 증가 (‘72~’81)	비고 (‘81/’71)
1. 하수도시설						
소요량(A)	km	16,800	18,100	18,900	1,600	1.1
시설누계(B)	"	1,850	2,610	3,770	1,740	1.9
(B)/(A)	%	11.0	14.4	19.9	8.7	-
2. 위생하수도	천톤/일	-	750	2,290	2,040	-
서울	"	-	500	1,180	930	-
부산	"	-	-	610	610	-
대구	"	-	150	300	300	-
대전	"	-	100	200	200	-
3. 보급률						
도시인구(A)	천인	15,800	19,750	24,050	7,870	1.5
배수인구(B)	"	3,852	6,420	9,850	5,310	2.2
(B)/(A)	%	24.3	32.5	40.8	13.8	-

자료 : 경제기획원, 건설부

(4) 공원녹지

도시의 메카니즘화에 따라 공원녹지의 필요성은 더욱 요청되고 있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공원녹지는 도시민의 노동 재생산을 위한 휴양, 산책, 관광과 화재 또는 지진 등 천재지변에 있어서의 오픈 스페이스의 확보가 주기능이다.

우리나라는 지형상 대부분의 자연적인 공원과 녹지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시설

의 불비로 충분한 기능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서 추진되고 있는 공원녹지는 대부분의 도시가 정적인 필요면적 확보에 급급하고 있으므로 동적인 어린이 놀이터나 소년공원 또는 운동공원용지의 확보와 이의 시설은 부족한 상태에 있다.

도시공원과 녹지는 단위 도시내에서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이 체계는 지역계획상의 공원체계와의 계통이 형성되어야 한다.

한편 공원녹지는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분리하는 차단녹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있어서는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녹지대(Green Belt)를 지정한다.

이와 병행하여 8중권 중심도시 주변에는 묘지공원 개발을 촉진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기하는 한편 묘지의 입체화를 도모한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내의 공원시설은 32개시에 있어서 평균 6.8m²/인의 공원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대도시에 있어서는 2.6m²/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공원시설의 미비로 우리나라 도시개발사업이 사회생활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의 공원율 13~14m²/인, 일본 10m²/인) 따라서 목표연도에는 도시공원율을 10m²/인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공원내의 제 시설을 확충정비하고 최대한의 녹지를 확보하여 도시민의 정서생활과 보건위생에 기여토록 한다.

다. 농어촌 생활환경의 개선

우리나라의 농촌사회는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농업생산구조의 개선을 통한 농어촌의 근대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농촌사회는 도시와는 달리 일생생활 활동권에 있어 일차적인 접촉에 의해 영위되고 있으므로 상호부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농촌사회의 생활관습과 의식구조의 개선과 생활방식을 능률화하는 측면에서 요구되는 시설은 주택개량, 공회당, 탁아소, 진료소 및 잡화점 등의 사회시설이다.

농촌 생활환경은 농정의 차원과 사회복지적 양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경지정리, 농로건설, 기계화 등에 의한 생산구조와 문화시설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첫째, 농촌의 문화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연부락을 일정단위로 집단화를 촉진한다.

둘째, 농어촌의 보건위생을 향상시켜 문화생활을 향유케하기 위하여 위생적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간이급수시설을 확충한다.

셋째, 농어촌 전화율 향상과 통신시설 확충으로 농어촌 생활구조를 능률화하고 현대화한다.

라. 도서개발

우리나라 근해에는 대소 2,400여 개의 도서가 있으며 이 중 무인도 1,700여 개를 제외한 유인도가 약 702개이며 이에 정착하고 있는 인구는 약 120만에 달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주로 농업과 어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육지와와의 교통시설이 미비하여 발전된 사회시설에 접할 기회가 적다. 육지와 연결하는 교량이 가설된 남해, 강화도, 거제도, 완도 등 몇 개의 도서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소도서민은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군소도서는 수산자원과 관광자원적 측면에서 중요시 될 뿐만 아니라 협소한 국토면적을 가진 우리나라는 해양개발의 전진기지적 역할을 부여하여 이들 도서의 발전을 꾀하도록 한다. 개발방향으로서는

첫째, 육지와 근접한 대도서와 육지간은 교량을 건설하여 육속화시키므로써 물자유통과 정보교환에 있어 시간과 거리를 단축하고 중소도서에는 정기선박의 운행 등 교통편의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이들 대소도서와 육지와와의 사이에 유선통신망과 무선통신망을 정비 확충하여 수산자원 및 관광자원개발을 도모하는 동시에 해양개발의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담당토록 한다.

둘째, 도서민의 생활환경의 개선책으로 주택개량 간이상수도 시설 등에 역점을 두어 문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마. 공해 방지 시설

공해의 발생은 경제성장과 함수관계에 있으며 쾌적환경과는 역기능 관계를 가진다. 즉 일반적으로 산업발전과 도시화 및 메카니즘 문명의 진행에 따라 더욱 가속성을 띠고 발생하는 공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공해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및 방사능 화학공해로 대별되나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공업화의 촉진, 차량의 증가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현시점에 있어서

는 선진국의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강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도시에 있어서 날로 심해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주변지역의 수질오염은 공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더욱 확대되어 갈 것이 예상된다.

또한 공장의 폐수 및 도시의 하수 등으로 인한 하천 및 해수의 오염은 연안의 양식업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도시기능 및 생산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그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첫째, 산업공해의 감소를 위하여 합리적인 공업입지의 선정과 규제를 강화한다.

둘째,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장연료의 대체, 대도시의 도시가스화를 촉진하고 필요한 지역에 공원녹지를 확보한다.

셋째,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수도를 정비하고 하수종말처리 시설과 공장폐수처리 시설을 현대화한다.

넷째, 도심 및 공업지대에 대한 소음진동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기관을 규제하고 도시 용도지역에 위배된 부적격 공장을 분산시킨다.

다섯째, 농약 등 방충제 사용으로 인한 작물 및 인체에 미치는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여섯째, 공해발생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제도를 확대한다.

5. 수자원 개발

가. 용수수요의 전망

1970년대 현재 우리나라 물 수요총량은 134.30억 m^3 으로 이중 지표수 이용은 부존수자원 630억 m^3 의 15.9%이며 수요총량의 용도별 이용량은 생활용수가 7.23억 m^3 이고, 공업용수가 11.05억 m^3 , 농업용수가 105.61억 m^3 이며 기타 염해방지용수 10.41억 m^3 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래의 용수수요는 1976년에 178.27억 m^3 , 1981년에 207.92억 m^3 으로 수요의 급증이 예측된다.

이를 용도별로 보면, 생활용수는 도시 위생 음료수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산업의 발전과 인구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에 의한 생활용수 수요량이 증대하고 있으며, 수세식 변소의 보급과 기타 자동차 세척용수 빌딩용수 등 각종 수요가 증대되어 목표연도의 생활용수 수요는 24.78억 m^3 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공업용수는 제 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산업기반이 구축되고 공업생산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용수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연도인 1981년에는 현재의 약 2.4배에 해당하는 26.42억 m^3 으로 증가할 것이 예측되고 있다.

이용총량의 약 85%를 차지하는 농업용수에 있어서는 총 답면적 12,937 km^2 의 약 80%에 해당하는 10,302 km^2 가 수리 안전답이다.

1976년까지 약 11,760 km^2 를 수리 안전답화하고 수리 불안전답은 전작으로 전환하여 특용작물 등을 재배함과 동시에 수리 간척으로 국토를 확장하여 새로이 조성될 농지 및 야산개발을 고려할 때 목표연도에는 약 1.4배인 146.31억 m^3 의 농업용수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나. 기본방향

물은 국민경제와 사회생활에 있어 기초자원이다.

이때까지 천부의 자유재란 전통적 관념 때문에 물은 자원으로서 인식받지 못했으

며 경제재로 등장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표-50> 전국 용수수요

단위 : 백만m³

	1970			1971			1976			1981		
	지표수	지하수	계	지표수	지하수	계	지표수	지하수	계	지표수	지하수	계
수요총량	11,414	2,016	13,430	11,999	2,199	14,198	14,690	3,137	17,827	17,600	3,192	20,792
생활용수	681	42	723	825	51	876	1,455	90	1,545	2,334	144	2,478
공업용수	760	345	1,105	864	381	1,245	1,379	578	1,987	2,077	565	2,642
농업용수	8,932	1,629	10,561	9,269	1,767	11,036	10,815	2,469	13,284	12,148	2,483	14,631
기타용수	1,041	-	1,041	1,041	-	1,041	1,041	-	1,041	1,041	-	1,041

수자원이란 이름으로 경제개발계획의 정책과제가 된 것으로 첫째로는 막대한 한수해의 빈발과 둘째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한 전천후 영농기반 정비, 셋째로 공업화를 위한 공업기지조성에 연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물 문제는 한수해와 지역별 각 용수수급 원활과 이에 따른 적시적량의 공급시설 정비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거시적 안목에서 수자원개발은 다목적개발을 하므로써 이의 효율적 이용 관리가 절실히 요청되므로 수자원개발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4대강 유역의 종합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한해와 수해를 절감하고 용수공급원을 확보한다.

둘째, 수계단위로 일관성 있는 종합개발을 통한 광역용수개발과 대단위 용수 공급원을 확보하는 동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용수단가를 인하한다.

셋째, 공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각종 용수수요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목적댐 및 주요 하천의 하구언 건설을 촉진한다.

넷째, 수원고 용수수요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유역변경식 용수개발에 의한 수자원 부족지역의 소요용수의 공급책을 강구한다.

다섯째, 소지역 중심의 지하수개발을 촉진하여 용수공급 부족지역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한다.

다. 용수공급 계획

1960년대까지만 해도 물 수요량이 많지 않아 갈수기에도 하천의 자연유량만으로도 충족하였으며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취수 민 도수시설 등으로 이용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었다.

국민경제가 성장하고 고도화됨에 따라서 물 수요는 점차 증대하여 평상시의 자연 유량만으로는 증대되는 용수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부족분의 공급을 위해서 홍수시에 이용되지 못하고 바다로 유실되는 물의 일부를 저류해서 한발기의 수요에 맞추어 유출토록 하여 그 이용도를 증진시키는 다목적 댐 시설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물을 합리적으로 안정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홍수를 저류하여 하류평지의 홍수유량의 절감효과를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물은 자연으로부터의 이용은 한도가 있어 강수량 이상을 이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물 이용시설도 개발할 수 있는 경제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각종 용수의 사용에 있어 고도의 물 관리가 소망스럽다. 즉 하천유역의 고도이용개발에 따르는 효율적인 홍수처리와 각종 수리시설, 다목적 댐, 하구언 및 다목적 도수로 등의 건설 등 한 수계를 단위로 한 종합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텔레메타 전자계산기에 의한 수위조작, 홍수예보경보 시설 및 통보, 수방연결시설의 정비와 물 관리시설의 일원적 관리체제의 확립으로 목적별 물 이용량을 조정하는 한편 유기적인 조작으로 회수수 이용, 해수의 담수화 등의 용수공급대책과 병행하여 용수가격의 절감대책도 강구하도록 한다.

본 계획에서는 지하수 개발의 비중을 참작하여 수요의 일부를 이로써 충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표수 수요를 대상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지표수 수급총량은 현재 114.14억 m^3 에서 목표연도에는 176.00억 m^3 으로 늘어날 것이 예측된다. 이에 대한 공급대책으로 현재 공급량의 100,39억 m^3 와 기간중 다목적 댐 및 하구언 등 건설로 73.61억 m^3 를 공급토록 하여 총 175.00억 m^3 의 용수를 공급한다. 이로서 목표연도에는 전국 수요량을 거의 충당하게 된다.

그러나 전국 각지역의 지역별 물 수지에서는 용수 부족지역이 발생할 것인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저수시설 및 지하수 개발에 의해서 공급토록 한다.

또한 수계별 물 수지를 고려하여 한강유역에는 북한강 지류에 소양강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하류부 특히 서울 부근의 용수를 위해 연 12.13억 m^3 의 용수를 공급토록 하며 남한강에는 충주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연 25억 m^3 의 용수를 공급하고, 낙동강 유역에는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준공을 본 남강댐과 건설중인 안동댐 및 앞

으로 건설될 합천댐, 영산댐, 대천댐 등 6개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22.5억 m^3 의 용수를 개발하여 이 유역의 용수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울산, 부산지구에는 유역변경 혹은 양수식 등의 광역이수에 의한 용수공급을 도모한다.

금강유역에는 중류부에 대청다목적댐을 건설하여 대전, 청주지방에 8.65억 m^3 의 용수를 공급한다.

또한 금강 평택지구에 하구 저수지를 축조하여 금강 평택지구의 관개용수와 공업 및 생활용수를 공급한다.

영산강유역에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된 한발로 물 부족에 대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일뿐더러 한해빈도가 가장 큰 지역이다.

이러한 한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하수 및 지표수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하천유량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댐의 지점으로써 타당성있는 순으로 우선 유역 내에 있는 장성댐 담양댐 대초댐 등의 다목적댐과 영산강 하구 종합개발 등으로 4.37억 m^3 의 용수를 개발하는 동시 부족용수 공급책으로서 섬진강유역의 동복댐을 건설하여 영산강 유역으로 유역변경 방식에 의하여 광주 등지의 부족용수를 해결토록 하여 이후의 용수 증가분에 대하여는 풍부한 수자원을 가진 섬진강 유역에서 광역이수에 의해 공급토록 한다.

<표-51>

전국용수<지표수> 수급계획

단위 : 백만m³

	1970	1976	1981
수요량	11,414	14,690	17,600
생활용수	681	1,455	2,334
공업용수	760	1,379	2,077
농업용수	8,932	10,815	12,148
기타용수	1,041	1,041	1,041
공급량	10,039	12,440	17,500
자연이수 가능량	7,569	7,569	7,569
소규모 취수권	2,120	2,120	2,120
다목적댐군	350	2,751	7,811
섬진강댐('61~'65)	150	150	150
소양강댐('67~'72)	-	1,213	1,213
충주댐('77~'81)	-	-	2,500
안동댐('71~'75)	-	730	730
함천댐('74~'77)	-	-	450
임하댐('76~'79)	-	-	538
남강댐('62~'70)	200	300	300
영산댐('77~'79)	-	-	90
대천댐('78~'87)	-	-	150
장성댐('72~'74)	-	68	68
담양댐('76~'77)	-	-	25
대초댐('76~'78)	-	-	44
동북댐('77~'86)	-	-	98
영산강하구언('76~'81)	-	-	300
대청댐('74~'77)	-	-	865
섬강평택지구댐('71~'74)	-	290	290
과부족	(-)1,375	(-)2,250	(-)100

<표-52>

다목적댐 건설계획

	건설기간	규모		효과		
		높이 (m)	총저수량 (백만m³)	용수 (백만m³)	홍수 (백만m³)	발전 (천KW)
합계						
한강유역						
소양강댐	‘67~’72	123	2,900	1,213	350	200
충주댐	‘77~’81	91	3,000	2,500	300	255
낙동강유역						
안동댐	‘71~’75	72	1,240	730	110	80
합천댐	‘74~’77	111	1,070	450	80	80
임하댐	‘76~’79	68	620	538	30	-
영산댐	‘77~’79	42	690	90	10	-
대천댐	‘78~’81	42	150	150	20	5
금강유역						
대청댐	‘74~’77	61	1,550	865	200	51.3
영산강유역						
장성댐	‘72~’74	29	60	68	6	-
담양댐	‘76~’77	32	30	25	4	-
대초댐	‘76~’78	28	60	44	6	-
동북댐	‘77~’80	50	130	98	15	2.7
영산강하구언	‘76~’81	28	353	300	188	-
기타유역 (평택지구댐)	‘71~’74	①25 ①17	180	170	-	-

주 : 섬진강 150백만m³, 남강 300백만m³, 금강하구개발 120백만 ⇒ 총 570백만m³

평택지구댐 ①아산 저수댐 ②남양 저수댐

자료 : 농림부, 건설부

라. 4대강 유역종합개발

(1) 개발목표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 등 4대강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하천으로 유역면적은 62,755km²로서 국토면적 98,477km²의 약 64%를 차지하며 경지면적은 12,431km²로서 전국의 54%에 해당한다. 산림면적은 35,944km²로서 전국의 53.8%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 인구의 61%가 이 유역에 거주하고 있고, GNP의 67.2%가 4대강 유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또한 전국의 강수량의 62%가 이 유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홍수피해에 있어서도 전국 연평균 63억원의 77.5%인 48.8억원과 한해(旱害) 연평균 82억원의 60.5%인 49.6억원이 이들 유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여건에서 이 4대강은 한반도의 약 반을 넘는 막중한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타 하천과도 광역 이수적(利水的) 입장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본 계획은 한수해의 근원적인 제거와 토지의 고도이용, 식량증산 및 안정기반 구축 등을 목표로 하였다.

본 개발계획에는 총 2,695억원이 투입될 것이며 계획의 규모는 안동댐을 위시한 12개의 다목적 댐 건설, 2,493km의(859개지구) 하천개수와 1,230km²(57개지구)의 관개시설 개선, 1일 351만m³(96개 도시)의 상수도화 1일 144만m³(14개지구)의 공업용수 공급, 414km²의 산지사방, 4,300km의 야계(野溪) 사방 등의 치산사업 및 2,740km²의 조림사업, 207km²(138개 지구)의 내배수처리, 1개소의 하구언 개발로서 이 계획이 완료되는 1981년의 4대강은 수해상습지 및 내수피해지역이 일소되어 현재 연평균 49억원의 홍수피해를 50% 절감시키고 농토보호 1,260km², 식량증산 485천톤, 87km²의 신규농토가 조성될 것이다.

또한 관개시설의 개선으로 6,830km²의 총 답 면적중 88%에 달하는 5,980km²가 수리안접답화 되어 연평균 약 50억원의 한해를 완전방지함으로써 전천후 영농이 가능하며, 강유역에 건설되는 다목적 댐 건설에 의한 유량의 조절로서 하천의 갈수량을 현재의 약 3배 이상 증가시키므로써 도시 주변의 수질오염을 완화하고 하구의 염해를 절감시키게 된다.

<표-53>

4대강유역 개황

	단위	전국	4대강 유역
면적	km ²	22,899(남한 98,477)	62,755(63.7%)
경지면적	km ²	23,122	12,431(54%)
산림면적	km ²	66,826	35,944(53.8%)
총인구(698)	천인	30,469	18,786(61.1%)
GNP('68)	억 원	11,272('65불변가격)	7,574(67.2%)
1인당 소득('68)	원	36,995(경상가격)	40,317
수자원 부존량	억 m ³	1,140	709(62.2%)
유출량	억 m ³	630	425(67.5%)
이용량('69)	억 m ³	98.39	38.6(39.2%)
이용율	%	15.6	9.1
용수수요			
1976	억 m ³	146.90	100.2
1981	억 m ³	176.00	124.4
홍수피해			
년평균	억 원	63.0	48.8
기왕최대	억 원	368.8	358.2
한해(부해)			
년평균	억 원	82	49.6
기왕최대	억 원	525	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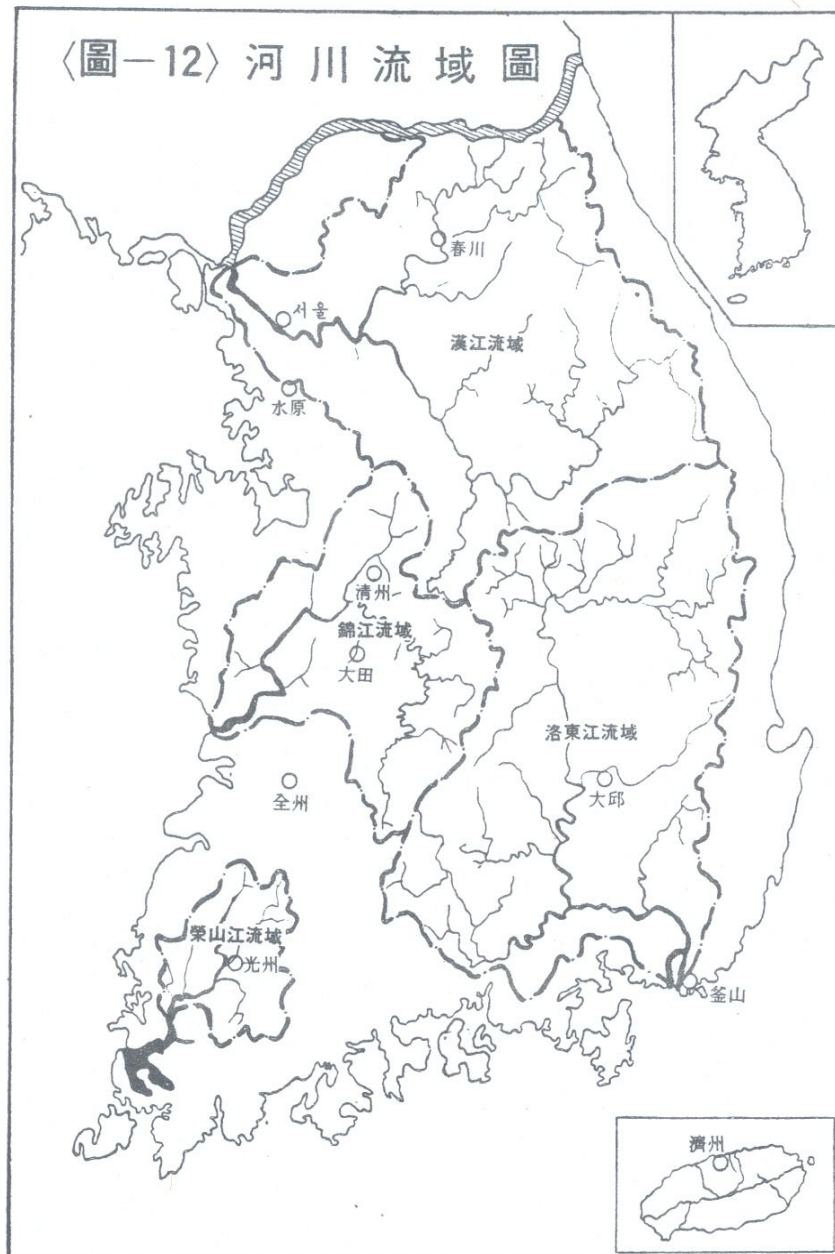
<표-54>

4대강 유역 개발계획 및 효과

	사업규모	사업효과	
하천개수	2,492.8km(859개 지구)	농토보호	1,262km ²
		인가보호	108,829호
		식량증산	126,815톤
		농토조성	87km ²
다목적댐	12개댐 건설	용수공급	68.7억 m ³
		발전	734,650kW
		홍수조절	12.2억 m ³
관개	1,232km ² (57개 지구)	식량증산	341,460톤/년
치산	사방 414km ²	토사유출방지	2,372천 m ³ /년
	야계 4,326km	임산연료생산	469,394톤/년
	조림 2,740km ²	용재생산	48,136천 m ³
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상수도 96개 도시	상수도	3,519천 m ³ /일
	공업용수도시설 14개지구	공업용수	1,435천 m ³ /일
내배수	207km ² (138개 지구)	식량증산	16,499톤
하구언 개발	1개소	용수공급	3억 m ³
		관개개선	173km ²

또한 735천kW의 발전과 약 14억m³의 홍수를 조절하여 연간 약 24억원의 수해를 절감시키며 이 밖에 인접도시의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의 30.6%에서 65%로 제고시킴과 동시에 공업용수 공급량을 현재의 약 4배로 증가시킬 것이다.

한편 황폐산지(荒廢山地)와 미입목지(未立木地)를 일소하여 2,372천m³/년의 토사유출방지와 469천m³의 용재생산을 기한다.



(2) 유역별 개발계획

(가) 한강유역 본 유역에는 현재의 발전용 댐 외에 소양강 다목적댐과 충주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연간 37.1억 m^3 의 용수를 공급하고 읍단위 이상의 도시와 주요 면등 34개 도시에 1일 184 m^3 의 용수를 증산 공급하는 상수도 시설과 전용공업용수도 4개 지구 수원~안양, 춘천, 원주 및 충주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1일 37만 m^3 를 공급하게 된다.

또한 관개시설은 여주 및 임진강 대단지지구 278 km^2 와 기타 10개지구의 41 km^2 로 총 319 km^2 를 실시하여 현재의 수리안전답 1,100 km^2 를 1,400 km^2 로 증가시킨다.

치산사업으로 한강 상류에 산재해 있는 125 km^2 의 황폐산지와 1,370 km^2 의 미입목지를 일소하여 산림을 녹화하고 산지계곡의 토석류의 범람방지와 과대한 유속으로 인한 농토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계사방 1,276 km 를 실시한다. 따라서 연간 615천 m^3 의 토사유출을 방지하여 홍수피해를 현재의 19억원에서 7.7억원으로 59%를 절감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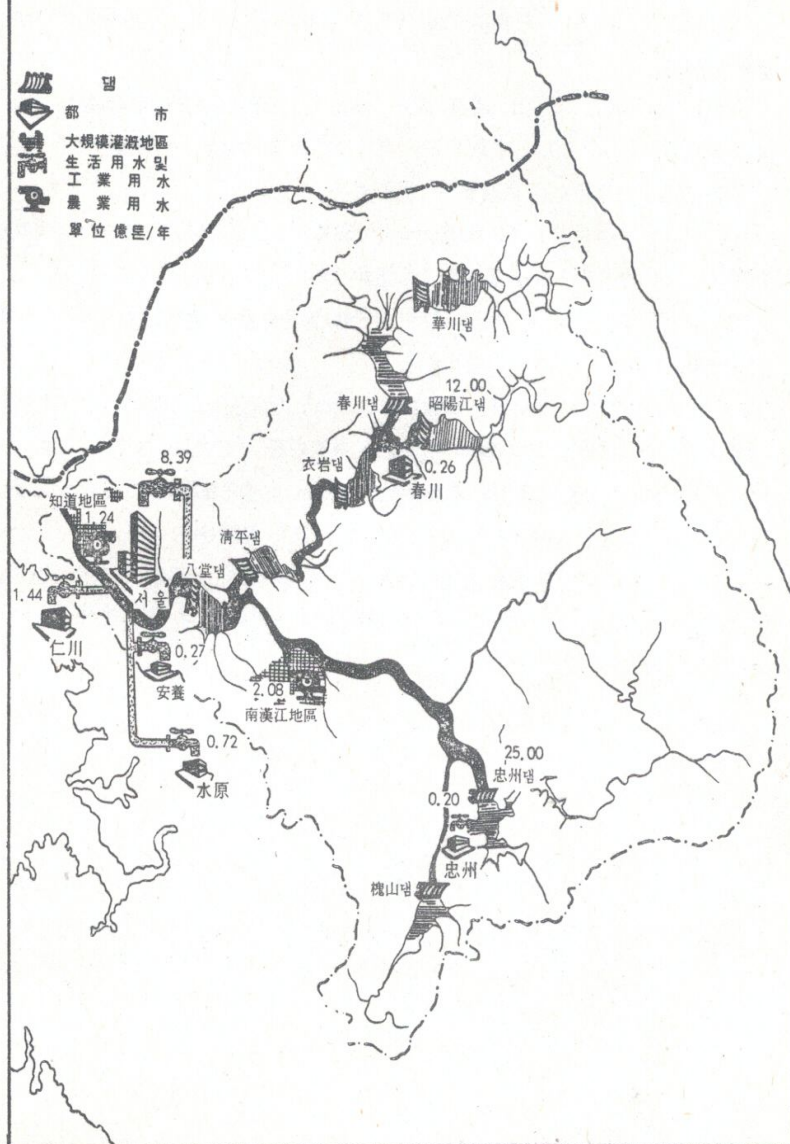
또한 잠실, 김포, 원주, 이천, 장호원, 괴산, 홍천 및 춘천지구 등 54개 지구에 달하는 수해상습지와 하천개수가 시급한 185개 지구에 515,3 km 의 하천을 개수하여 홍수범람을 방지하고 171 km^2 의 농토를 보호하는 한편, 36 km^2 의 농토를 신규조성하여 16,349톤의 식량증산과 26천호의 인가를 보호한다.

한편 배수불량으로 수해를 입는 36.8 km^2 의 지역에 기계배수시설을 완성하여 지도지구의 대단지에서 2,880톤의 식량을 증산한다.

<표-55> 한강유역 개발계획

	세부사업명	사업규모	사업효과
하천개수	직할하천	515.3km(185개지구)	농토보호 171km ²
	지방하천	35.9km(17개지구)	식량증산 16,349톤
	준용하천	50.1km(17개지구)	인가보호 26,029호
		429.3km(151개지구)	농토조성 36km ²
다목적댐			용수공급 발전 홍수조절
	2개소	높이 총저수량	37.13억m ³ 513천kW 6.5억m ³
	소양강댐	123m 29억m ³	12.13억m ³ 200천kW 3.5억m ³
	충주댐	91m 30억m ³	25.00억m ³ 255천kW 3.0억m ³
	팔당수력	80,000kW	8천kW -
관개	12개지구	몽리면적 319km ²	식량증산 46,721톤
	대단지 2개지구	몽리면적 278km ²	
	기타 10개지구	몽리면적 41km ²	
치산		1,495km ²	
	산지사방	125km ²	토사유출방지 615천m ³ /년
	야계사방	1,276km	임산연료 125천톤/년
	조립	1,370km ²	용재생산 24,093천m ³
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상수도	34개 도시시설	상수도 1,835천m ³ /일
	공업용수도	4개지구 시설	공업용수 370천m ³ /일
내배수	1개지구	몽리면적 3,679ha	식량증산 2,880톤

〈圖—13〉 漢江流域 需給圖



(나) 낙동강 유역 본 유역에는 5개의 다목적 댐을 건설하여 3.4억 m^3 의 홍수조절과 20.58억 m^3 의 용수를 공급하게 된다. 이를 댐별로 보면 안동 및 임하댐, 합천댐의 용수는 본류연안 및 남해연안에 공급하고, 대천댐의 용수는 밀양강 연안에 공급하여 용수부족난을 해소시킨다.

따라서 유역의 지구인 울산, 포항, 마산, 진해 및 삼천포 등지의 용수공급과 부산 상수도의 수질개선 및 금호강의 수질오염을 희석시키고 감조(感潮)지구로서 염해피해를 입고 있는 김해평야의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상수도 용수공급은 1일 52만 m^3 에서 158만 m^3 로, 공업용수는 현재 1일 39만 m^3 에서 159만 m^3 로 증산하여 35개 도시의 상수도와 5개 지구에 공업용수도 시설을 한다.

일면 물리면적 232 km^2 에 달하는 27개 지구에 수리시설을 실시하여 현재의 수리안전답 2,328 km^2 를 2,560 km^2 로 증가시킨다.

한편 치산 치수사업에 있어서는 산지사방 221 km^2 , 야계사방 1,686 km^2 , 조림 1,011 km^2 를 실시하여 토사유출 연간 103만 m^3 의 방지와 임산연료 약 20만톤, 용재 1,772만 m^3 를 생산하고 1,112 km^2 (422개 지구)의 하천 개수로 606 km^2 의 농토보호와 약 14 km^2 의 농토를 조성하여 60,119톤의 식량증산과 약 3만여호의 인가를 보호한다.

또한 106 km^2 의 지역에 내배수 처리시설을 하여 중하류부의 저습지 내배수 피해를 감소시킴으로서 이모작을 가능케 하고 본 유역의 홍수피해를 19.5억원에서 10.7억원으로 절감시킨다.

<표-56> 낙동강 유역 개발계획

	세부사업명	사업규모		사업효과
하천개수	직할하천	1,111.5km(422개 지구)		농토보호 606km ²
	지방하천	94.5km(36개 지구)		식량증산 60,119톤
	준용하천	103.7km(46개 지구)		인가보호 30,237호
		913.3km(340개 지구)		농토조성 14km ²
다목적댐				용수공급 발전 홍수조절
		높이	총저수량	2,066백만m ³ 145.6천kW 3.4억m ³
	안동댐	72m	12.4억m ³	730백만m ³ 48천kW 1.1억m ³
	합천댐	111m	10.7억m ³	450백만m ³ 80천kW 0.8억m ³
	임하댐	68m	6.2억m ³	538백만m ³ 안동댐과 연결 0.3억m ³
	영산댐	42m	6.9억m ³	90백만m ³ - 0.1억m ³
	대천댐	42m	1.5억m ³	150백만m ³ 5천kW 0.2억m ³
	남강댐	21m	1.36억m ³	108백만m ³ 12.6천kW 0.9억m ³
관개	27개지구	몽리면적	232km ²	식량증산 36,439톤
치산			1,233km ²	
	산지사방		221km ²	토사유출방지 1,034천m ³ /년
	야계사방		1,684km	임산연료 196.244톤/년
	조림		1,011km ²	용재생산 17,721천m ³
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상수도	35개 도시시설		상수도 1,057천m ³ /일
	공업용수도	5개지구 시설		공업용수 880천m ³ /일
내배수		111개지구 106km ²		식량증산 12,163톤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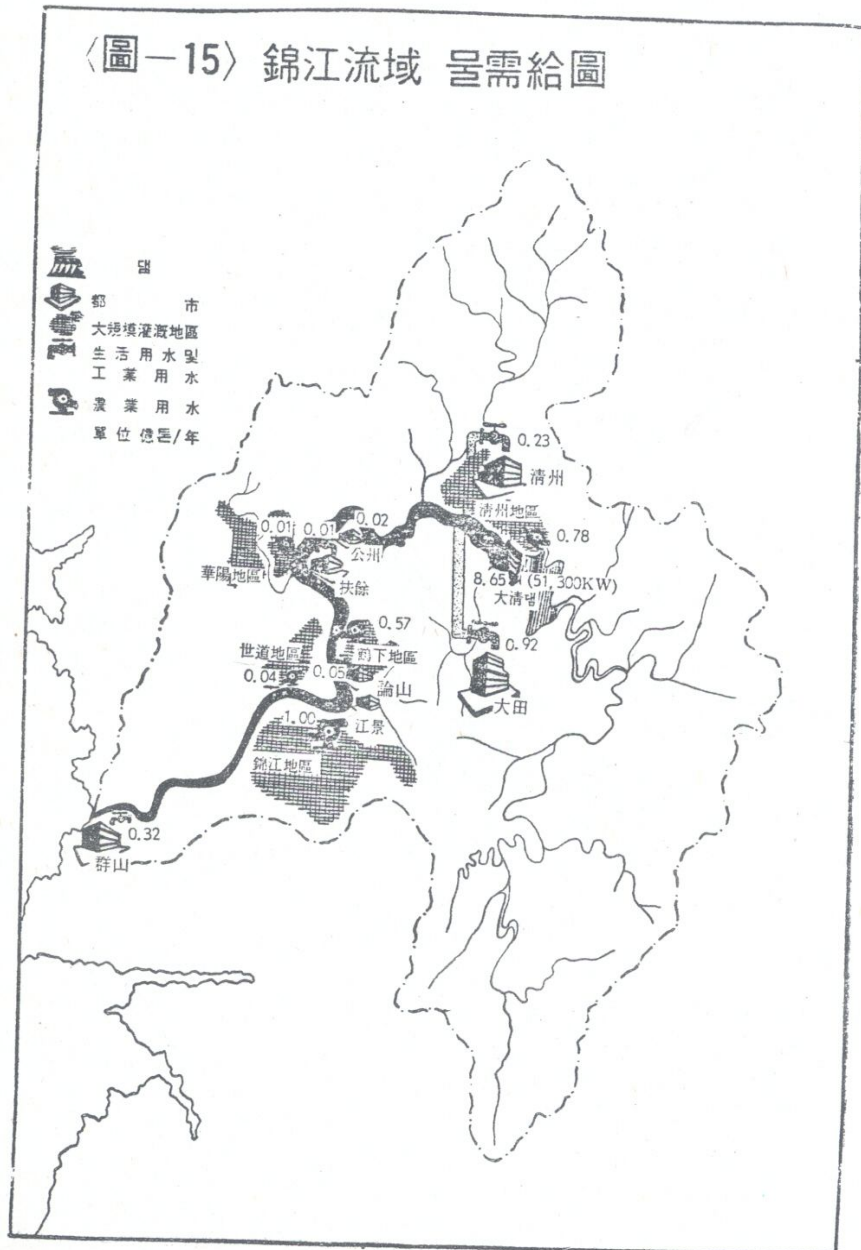
(다) 금강 유역 본 유역에는 저수용량 15억㎥의 대청댐을 건설하여 홍수조절 2억㎥와 용수공급 8.65억㎥ 그리고 51,300kW의 발전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금강 본류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는 청주, 논산 및 강경지구에 용수를 공급토록 하며 상수도 용수 1일 10만㎥를 368천㎥로, 공업용수 1일 27천㎥를 236천㎥로 증산하여 22개 도시의 상수도와 3개지구의 공업용수도 시설을 한다.

치산 치수사업으로는 산지사방 53.4km², 야계사방 1,218km, 조림 239km²를 실시하여 연간 654천㎥의 토사유출방지와 134천톤의 임산연료생산 및 422만㎥의 용재를 하여 연간 654천㎥의 토사유출방지와 134천톤의 임산연료생산 및 422만㎥의 용재를 생산한다.

<표-57>

금강유역 개발계획

	세부사업명	사업규모	사업효과
하천개수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423km(116개지구) 20km(12개지구) 57.7km(19개지구) 345.3km(85개지구)	농토보호 606km ² 식량증산 60,119톤 인가보호 30,237호 농토조성 14km ²
다목적댐	대청댐	높이 61m 총저수량 1,550백만㎥	용수공급 8.65억㎥ 발전 51,300kW 홍수조절 2억㎥
관개	15개지구 대단지 2개지구 기타 13개지구	몽리면적 232km ² 몽리면적 196km ² 몽리면적 36km ²	식량증산 51,570톤
치산	산지사방 야계사방 조림	293km ² 53.4km ² 1,218km 239km ²	토사유출방지 1,034천㎥/년 임산연료 134,000톤/년 용재생산 4,222천㎥
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상수도 공업용수도	22개 도시시설 3개지구 시설	상수도 265천㎥/일 공업용수 105천㎥/일
내배수		23개지구 50.97km ²	식량증산 1,124톤



또한 423km(116개 지구)의 하천개수를 실시하여 농토보호 203km²와 농지 29km²를 신규조성하여 약 23천호의 인가보호와 24천톤의 식량을 증산한다.

내배수 시설은 약 23개지구 50.97km²를 실시하여 1,124톤의 식량을 증산한다.

(라) 영산강 유역 본 유역에는 장성댐, 담양댐, 대초댐 및 동북댐 등 4개댐 및 하구언을 건설하여 홍수조절 2.2억m³, 용수공급 5.35억m³와 2,750kW의 발전시설을 갖게한다.

지역적인 용수공급으로는 장성댐의 건설로 황룡강 연안의 용수부족을 해소토록 하며, 영산강 상류부 용수부족은 담양댐에서, 중류부의 용수부족은 대초댐과 섬진강의 동북댐에서 충족시키고 특히 영산강 하구언의 건설로 목포지구의 용수공급과 염수침입을 방지한다.

또한 광주, 목포, 영산포, 함평, 학교면 등 5개 도시에 상수도 시설을 하여 1일 362천m³를 증산급수하고 공업용수도는 목포와 광주 2개소에 설치하여 1일 8만m³의 용수를 공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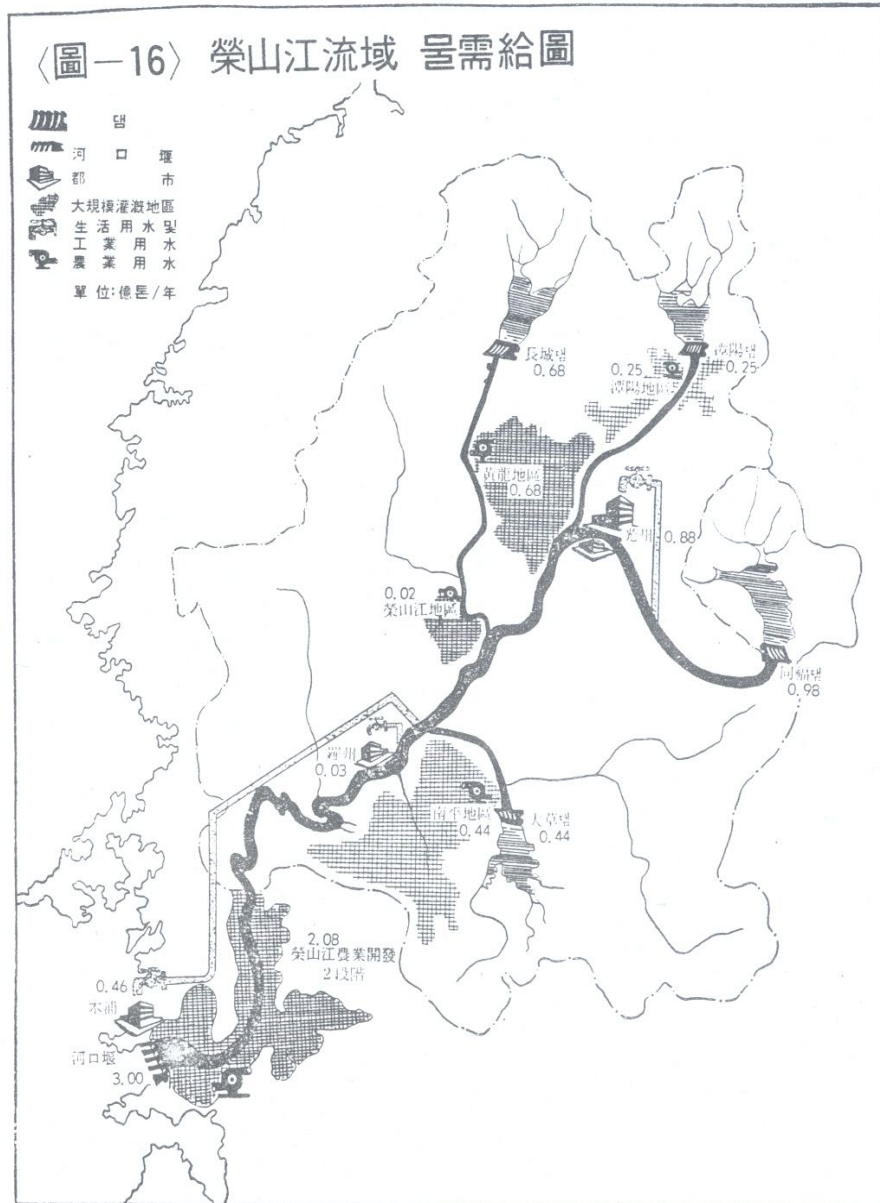
관개시설로는 현재의 수리안전담 346.56km²에서 796.45km²로 증대시킨다.

치산 치수사업으로는 산지사방 14km², 야계사방 148km, 조림 119.7km²를 실시하여 연간 69천m³의 토사유출방지와 14천톤의 임산연료, 210만m³의 용재를 생산하며, 136개소와 하천에 443km의 하천개수로 282km²의 농토보호와 8.9km²의 농토가 신규조성될 것이며 26,014톤의 식량증산과 약 29.9천호 인가를 보호하며 14km²(3개소)의 내배수 처리로 332톤의 식량을 증산한다.

따라서 본 유역에는 다목적 댐, 하구언, 하천개수 및 내배수처리로 현재의 홍수피해 2.5억원에서 56%나 감소한 1.1억원으로 피해를 절감한다.

<표-58> 영산강유역 개발계획

	세부사업명	사업규모		사업효과
하천개수	직할하천	443km(136개지구)		농토보호 282km ²
	지방하천	46km(16개지구)		식량증산 26,014톤
	준용하천	45km(14개지구)		인가보호 29,917호
		352km(106개지구)		농토조성 8.9km ²
다목적댐				용수공급 발전 홍수조절
	4개댐	높이	총저수량	234.9백만m ³ 2,750kW 31.5백만m ³
	장성댐	29m	60백만m ³	67.8백만m ³ 6.0백만m ³
	담양댐	32m	30백만m ³	25.2백만m ³ 4.0백만m ³
	대초댐	28m	60백만m ³	43.8백만m ³ 6.4백만m ³
	동북댐	50m	130백만m ³	98.1백만m ³ 2,750kW 15.1백만m ³
관개		몽리면적	449.8km ²	식량증산 206,730톤
	중앙지구	"	1.89km ²	
	대단지(1단계)	"	275km ²	
	대단지(2단계)	"	173km ²	
치산			134km ²	
	산지사방		14km ²	토사유출방지 69천m ³ /년
	야계사방		148km	임산연료 14,150톤/년
	조림		119.7km ²	용재생산 2,100천m ³
				농경지 매몰방지
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상수도	5개 도시시설		상수도 362천m ³ /일
	공업용수도	2개지구 시설		공업용수 80천m ³ /일
내배수			14km ²	식량증산 331.8톤
	나주지구		3km ²	
	영산지구		6km ²	
	왕곡지구		5km ²	
하구언개발	1개소	높이	28m	염수침입방지 용수원 확보 3억m ³
		총저수량	353백만m ³	관개개선 173km ²



6. 국토보전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치산 치수에 의한 국토보전을 강조하여 왔었으나 전국토의 68%(남한)가 산지인 데다가 그 지형이 급경사이고 임상이 불량하여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인 관계로 항례적인 태풍 및 집중 호우 등에 의한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하천 홍수 및 해일(고조)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하였다.

한편 최근 공업화 및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른 국토이용형태의 변화는 재해의 성격에도 크게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생활의 안전과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 국토에 걸쳐 토지이용 형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방재안전도를 일층 향상시키는 것이 국토보전의 기본과제이다.

특히 도시화에 따라 시가지 인구가 증대하고 많은 자산의 집적과 함께 시가지면적이 확대되므로 도시 주변 하천의 홍수유량 증가와 저지 내수에 의한 침수에 대비하여 하도의 유하능력을 대폭 확대하며 내수 배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역 하수도를 포함한 종합적인 배수계획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과도 관련시키면서 하천의 확폭 신천(新川) 굴착 및 배수기장 설치 등을 하여야 한다.

한편 시가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도시계획에 맞춰서 배수로 시설을 정비한다.

또한 임해 저지역의 고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안 및 하구부의 방파제 수문 등의 시설을 정비하여 해안침식이 심한 지역과 동남해안의 태풍상습지역에 대한 보전대책을 강구한다.

또한 태풍, 홍수, 폭설, 해일(고조) 등의 수문기상에 관한 관측예보 등의 기술개발을 혁신하여 필요한 제시설을 정비하고 재해의 정보, 대피 및 구조 등의 수방대책의 조직을 강화하고 일면 이수(利水) 및 홍수조절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다목적댐 시설과 하천개수를 촉진한다.

산지지역에는 수원의 함양 토사유출 방지 등 수계별로 일관된 계획하에 국토보전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안림을 적극적으로 정비하며 임상개량 등 보전기능의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산맥방호 토사조절 및 토석유출방지 등 방재대책을 실시한다.

농업지역에 있어서는 고생산 농업의 전개에 따라 농지 및 농촌환경정비에 대응하

여 중소하천 등의 하천개수 및 홍수조절댐이나 유수지 및 배수기장 시설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전작(田作) 농지전환에 대응하여 전지(田地) 보전을 도모한다.

또한 국토의 대규모개발을 함에 있어 자연과의 일체 조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급경사지 붕괴나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는 지대는 특수 토양지대 등 특수 재해 상습지에서는 방재적 견지에서 토지이용을 규제토록 한다.

가. 조림 및 사방

우리나라의 임야면적은 약 67,000km²로서 전 국토 면적의 68%(남한)에 해당된다.

임야면적은 개간에 의한 농경지 및 목야지와 공업용지, 도로의 확장, 댐 시설 및 주택단지의 조성 등으로 1969년 현재의 임야면적은 1960년에 비하여 약 740km²의 감소를 가져왔고 2000년대에는 약 7,500km²의 면적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림은 산악림이 대부분이고 하부의 구릉지와 일부 평지림으로 되어 있으며, 경사가 급하고 화강편마암과 같은 모암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이 파괴된 지역에는 풍화 및 강수로 인한 토사유출이 심하여 황폐화되기 쉽다.. 임목지는 전 산림면적의 86.6%에 달하나 71%는 관목지로서 산림축적은 60,000천m³에 불과하며 0.01km²당 평균축적량은 약 10m³로서 산림의 이수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임목지는 일부 오지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산촌의 연료림으로 낙엽과 잡초 등으로 지피물(地被物)이 탐취(採取)되어 있고 강수를 저류할 수 있는 면적은 임목지의 약 30%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산림의 황폐로 수원함양이 되지 않는데에 한수해(旱水害)의 원인이 있다.

따라서 과거의 산림복구계획은 행정구역별로 도시나 농경지 부근의 황폐지에 실시하였으나 이를 시정하여 수계별 산림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각 유역별 재해 비중을 감안하여 상류로부터 조림과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1969년에는 11개의 사방단지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계속적인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는 한편 1968년부터는 3대강 유역개발 사업으로 안성천 동진강 및 상주천 지역에 유역단위로 사방 및 조림사업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홍수피해가 가장 많은 6대강 즉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및 태화강 등의 유역의 산림에 집중적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황폐산지 및 임야의 적극적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기간중 9,546km²의 조림과 800km²의 산지(신규) 사방, 10km²의 해안사방, 4,000km²의 야계사방(野溪砂防)을 실시하여 요사방지(要砂防地)와 미입목지(未立木地)를 일소한다.

<표-59>

조립 및 사방계획

단위 : km²

	1970	1976	1981	기간중 증가
조립사업	15,933	21,654	26,427	9,546
산지사방	5,152	5,581	5,981	800
해안사방	6.4	12.4	17.4	10
야계사방	839km	3,089km	5,089km	4,000

나. 치수방재

최근의 이상기후에 의한 격심한 한수해의 빈발과 하천주변에 있어서의 인구 및 자산의 급증을 고려할 때 치수방재와 함께 한발에 의한 물 부족 대상은 긴급성을 더욱 제고시키고 있다. 금후 경제의 고도성장에 수반해서 산업활동 및 국민생활은 물 이용의 양적 질적면에서 현저한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토보전 및 수자원개발을 주체로 한 치수방재 사업은 산업활동과 국민생활기반의 안전도를 요구하는 선행적 필수요건이므로 장기적 전망에 입각한 시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과거 50년간(1916~1966) 연평균 한수해 피해총액이 GNP의 약 1%에 해당하는 145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라 도시의 비대화에서 오는 용지부족으로 인하여 저지대까지 공장 및 주택 등의 건물이 세워지고 있다. 이래서 저지대의 제내지는 하천수위의 상승과 함께 내수배제 불능으로 침수를 입게 되어 수해상습지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홍수피해도 질적 변화를 가져와 특히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평지하천의 연안토지 및 저지의 수방대책은 공업기반 조성 및 식량 자급자족 및 민생안정 문제와 관련되어 더욱 긴급성을 가중하고 있다.

그러므로 금후의 치수 방재대책은 종래의 하천개수 방식보다는 하천 상·중류에 다목적 댐 건설에 의한 중하류에의 홍수유출의 절감을 도모하는 댐방식과 하류주요지역을 보호하는 하천개수 방식을 수계 단위별로 병행하여 실시한다.

따라서 다목적 댐 건설계획에 의한 연간홍수 조절량은 한강유역의 소양강댐 3.5

억³, 충주댐 3.0억³와 낙동강유역의 안동댐 1.1억³, 합천댐 0.8억³, 임하댐 0.3억³, 남강댐 0.9억³, 영산댐 0.1억³, 대천댐 0.2억³와 영산강 유역의 장성댐 0.06억³, 담양댐 0.04억³, 대초댐 0.06억³, 금강유역의 대청댐 2.0억³, 섬진강 유역의 동복댐 0.15억³로 총 12.2억³의 홍수량을 조절케 한다.

또한 요하천개수(要河川改修) 연장 20,600km중 긴급성을 요하는 당면(當面) 개수 목표량 10,566km를 기간중 직할하천 301km, 지방하천 356km, 준용하천 2,577km로 총 3,234km의 하천을 개수함과 동시에 수해 상습지구 304개 지구중 직할하천지구 56개소, 지방하천지구 39개소, 준용하천지구 209개소에 대한 치수사업을 전개하브로서 수해 방지에 적극 기여한다.

<표-60>

하천개수계획

단위 : km

	개수목표		개수계획						기간중 개수
			1970		1976		1981		
계	10,566	100.0	5,072	48.0%	6,603	62.5%	8,470	80.2%	3,234
직할하천	1,500	100.0	1,130	75.3	1,421	94.7	1,476	98.4	301
지방하천	1,406	100.0	999	71.1	1,378	98.0	1,388	98.7	356
준용하천	7,660	100.0	2,943	38.4	3,804	48.7	5,606	73.2	2,577

주 : 수해상습지 304개 지구 포함

다. 자연 및 문화재 보존

경제의 고도성장에서 유발된 국민의 사회 경제활동의 터전이 자연계로 확대되어 자연이 무질서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반면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국민은 자연에의 동경은 더욱 제고되고 있다. 자연은 현대 및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보호보전되어야 할 귀중한 국민의 자산이므로 학술연구, 오락공간, 국토보전 및 용재생산 등을 위하여 보호 보전되어야 하며 특히 도시 환경에 있어서는 자연을 적극적으로 창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1) 국립공원계획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산자수명(山紫水明)한 자연의 경관을 보호 보전하고 국민의 보건휴양 및 교화에 기여코저 지정 된 지리산, 경주, 계룡산,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한려해상 등의 8개 국립공원과 그 후보지인 가야산, 북한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보호관리를 추진한다.

국립공원의 개발은 야생적 미개발의 성격을 그대로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어 공원구역을 자연보전지구, 이용시설지구, 보통지구로 구분 자연보전지역에는 보행만이 허용 될 수 있는 시설을, 보통지구에는 자연을 파괴치 않는 범위내의 시설을, 이용시설지구에는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숙박 및 교화시설을 관광적 견지에서 개발한다.

<표-61>

국립공원계획

단위 : km²

	면적		면적
계	1,514		
경주국립공원	102	지리산국립공원	439
계룡산국립공원	61	한라산국립공원	133
내장산국립공원	82	한려해상국립공원	347
설악산국립공원	174	가야산국립공원	66
속리산국립공원	60	북한산국립공원	50

(2) 오락공간개발

초지, 임지, 호반, 해안 및 하천 등의 관광에 수려한 지역은 생산의 터전 임과 동시에 국민의 자연 오락공간 지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산업개발에 있어서는 자연의 경관과 자원을 파괴함이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농어업 등의 산업활동을 포함한 자연 오락공간 지대를 형성, 관련시설을 적극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하계에 있어 대다수의 국민이 해수욕장이 운집(雲集)하나 해수욕장 및 온천장에는 관광객 및 국민의 여가지로서 그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위락공간지로서 불편을 주고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 개발과 함께 인천, 송도, 만리포, 대천, 변산, 만성리, 부산송도,

해운대, 포항, 북평, 강릉 및 제주도의 중문 등의 해수욕장을 개발 정비하여 국민의 건전한 여가지로서 선용토록 한다.

(3) 역사적 환경의 보호 보전

우리나라는 특이한 자연과 관습 및 역사적 환경으로 창조된 유형 무형의 문화재가 전국에 산재하고 있다.

한편 국민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라 생활수준과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국민생활의 대부분이 지적 활동을 추구함에 따라 문화재가 지니는 가치와 문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값있는 문화재와 역사적 환경을 보호 보전한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화재 및 역사적 환경을 광범위하게 지정하여 자연파괴를 억제하고 적극적으로 개발 보전한다.

이의 지정에 있어서는 현재로는 문화재 가치가 희박하다 할지라도 장래에 그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역사적 환경 및 문화재를 사전 지정 보전한다.

도시의 진전에 따라 역사적인 우리의 건축이 파괴되어 장래에 그 문화를 찾기 어려운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국가 보호 관리하는 적극적인 개발방식을 추진한다.

(4) 관광자원 개발

경제개발과 국토개발로서 국민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의 여가선용의 욕구는 급진적으로 증대할 것이며 이에 따라 관광여행의 대중화가 실현될 것이다.

또한 천부적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찬란한 민족문화의 유산을 가진 우리나라는 뛰어난 관광국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표-62>

관광유치계획

	단위	1970	1976	1981
국제관광객	인	173,300	392,000	663,000
외화획득예상	천불	46,800	97,700	156,000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관광자원 개발을 적극화하므로서 국제관광객의 대량유치로 외화를 획득함과 동시에 발전하는 한국을 널리 주지시키는 한편 국제적 친선과 유대강화를 도모한다.

(가) 관광 루트 개발 관광여행의 기본적인 유치대상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광루트를 형성 개발한다.

- ① 서울~경주~울산~부산~제주
- ② 서울~강릉~설악산
- ③ 서울~한려해상지구
- ④ 서울~온양~유성~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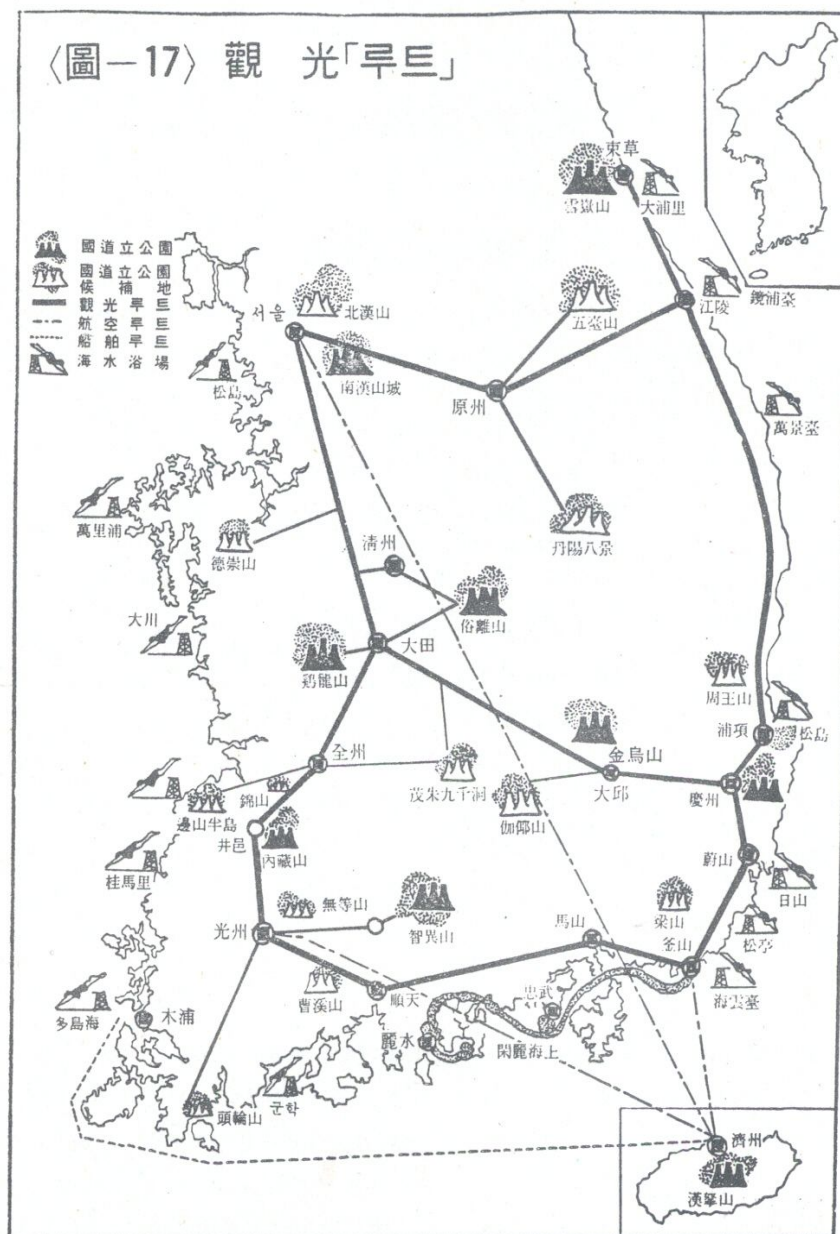
(나) 고도보전(古都保全) 및 고속도로 연변 관광개발

- ① 고도보전(古都保全)

찬란한 민족문화의 유산인 경주, 부여 등 고도의 보전으로 한국 고유의 정취를 온 세계에 알려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 ② 고속도로 연변 주요 관광지개발 정비

- ㄱ. 남한산성
- ㄴ. 온양~현충사
- ㄷ. 유성~계룡산
- ㄹ. 선산~금오산
- ㅁ. 양산~통도사



제3부 권역별 계획

1. 권역의 기본계획

가. 성 격

권역별 계획은 제2부의 전국적인 부문별 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라 각 권역별로 개발의 기본구상을 책정한 것으로 제2부의 계획을 보완 구체화하기 위한 구상이다.

제2부의 부문별 계획은 계획의 골격이 되는 부분이다. 이 골격을 토대로 각 지역의 특성과 자립성을 고려한 세부계획이 첨가되므로써 국토의 종합계획은 완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권역별 개발기본계획의 전제가 되는 여러 가지 조건에는 예측하기 곤란한 요소가 많고 지역별 기초자료도 불충분하여 구체화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본 계획에는 권역별 개발의 기본방향만을 제시한다.

또한 권역별 계획은 국민생성과 각 지역의 여러 기능이 복합체가 되어 원활한 국토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 합리적인 기능 안배의 기본 구상적 성격을 갖는다.

또 하나의 성격은 본 권역별 개발의 기본구상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도 및 군종합개발계획의 방향이기도 한 것이다.

나. 지역의 구분

국토계획 기본구상에서 설정한 우리나라의 개발권역은 자원적 측면에서 유역을 중심으로 한 4대권과 현행 도단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8개중권과 이를 다시 8~10개의 군단위가 모여 경제권형성이 가능한 배후지와 중심도시를 감안한 17개소 권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권역별 개발구상에서는 8중권을 개발단위로 한다.

이러한 권역의 구분은 계획수립의 단위로서 행정구역이나 여타의 지역적 인습 등

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권역을 구분하는 이유는 국토공간의 합리적 이용(균형 이용)을 위한 인구 및 산업의 예측, 생산공간과 소비공간간의 유통의 측정, 지역별 경제변량의 파악으로 소득수준의 측정, 국토의 특성 파악 등이며 이와 같은 요소를 계획의 지표로 하여 권역별로 조화된 국토공간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권역의 구분

- 수도권 --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역 및 강원도의 철원군
- 대백권 --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 및 충청북도의 충주시, 증원군, 단양군, 제천군
- 충청권 -- 서천군을 제외한 충청남도 및 충주시, 증원군, 단양군, 제천군을 제외한 충청북도
- 전주권 -- 남원군, 순창군을 제외한 전라북도 및 충청남도의 서천군
- 광주권 -- 전라남도 전역 및 전라북도의 남원군, 순창군
- 대구권 -- 경상북도 전역
- 부산권 -- 부산시 및 경상남도 전역
- 제주권 -- 제주도 전역

다. 권역별 인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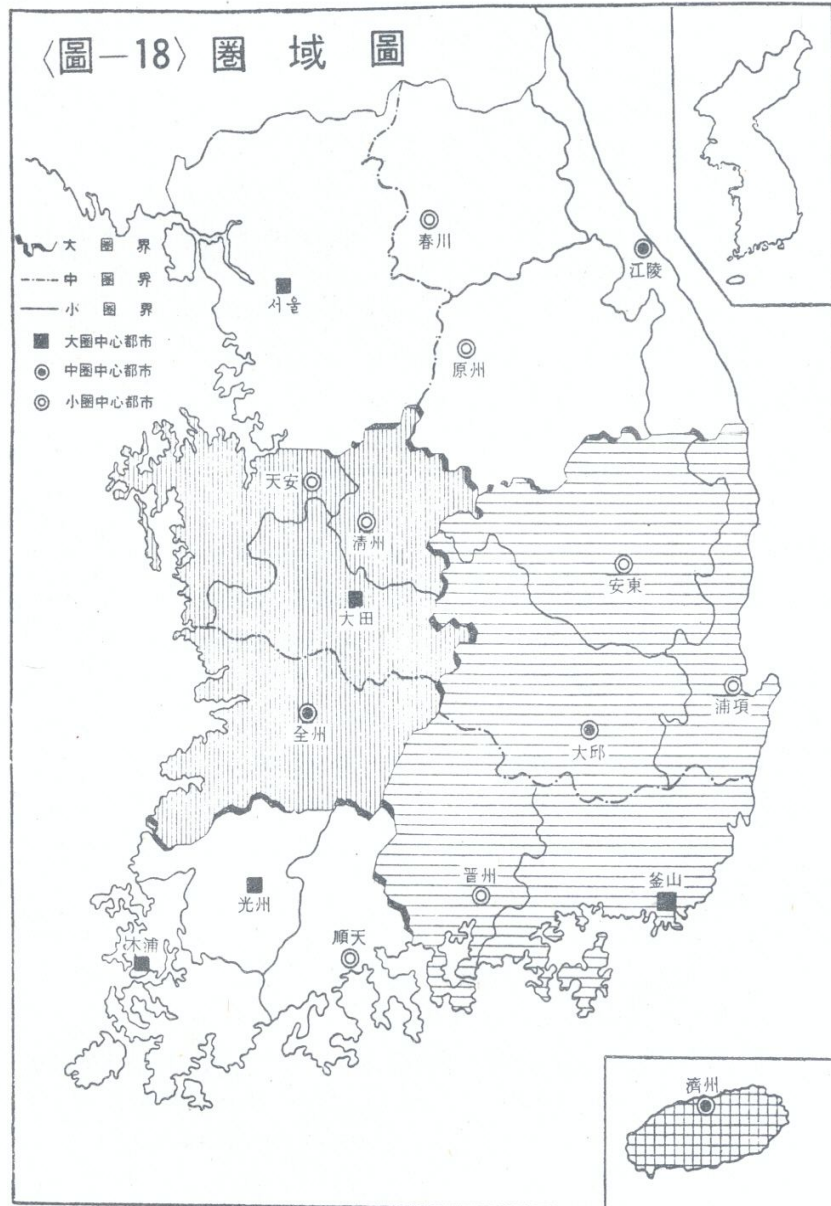
제2부의 부문별 계획이 실현되므로 각 권역의 경제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그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곤란하지만 각 권역의 기본구상을 책정함에 있어 그 전제로서 인구모형을 설정한 것이 다음 표와 같다.

<표-63>

권역별 인구계획

단위 : 천인

	1970	1976	1981	연평균증가율 (‘72~’81) (%)
전국	31,317 (100%)	34,345 (100%)	37,000 (100%)	1.5
수도(首都)	8,911 (28.4)	10,283 (29.9)	10,687 (28.9)	1.6
태백	2,273 (7.3)	2,536 (7.4)	2,731 (7.4)	1.6
충주	3,698 (11.8)	3,997 (11.6)	4,247 (11.5)	1.2
전주	2,296 (7.3)	2,533 (7.4)	2,742 (7.4)	1.7
대구	4,538 (14.5)	4,683 (13.6)	5,132 (13.9)	1.2
부산	4,976 (15.9)	5,492 (16.0)	6,184 (16.7)	2.0
광주	4,261 (13.6)	4,449 (13.0)	4,872 (13.1)	1.3
제주	364 (1.2)	372 (1.1)	405 (1.1)	1.0



2. 수도권 정비개발의 기본구상

가. 권역의 성격

수도권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이며, 전국적인 중추관리기능을 갖는 권역으로서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항공, 철도, 도로, 전신, 전화 등 각종 교통통신 정보수단이 집중되어 전국의 두뇌적 역할을 담당하며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함은 물론 국제교통의 관문으로서 지위를 높이면서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주도할 것이다.

나. 개발의 기본방향

수도권은 근년에 와서 경제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산업 및 문화시설 등의 집중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권역의 중심도시인 수도 서울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보다 현저하여 인구증가율은 연간 약 7%('66~'70)라는 높은 증가율로서 인구의 과다집중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1970년 현재 수도권내의 인구는 전국인구의 28.4%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중 약 62%가 수도 서울에 집중하고 있는 현상으로 이에 따른 시설이 뒤 따르지 못하여 주택난, 공해와 교통난, 불규칙한 시가지의 확산 등으로 시민생활과 산업활동 등 여러 분야에 수다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서울을 중심으로한 주변 도시부를 제외한 근교지역 및 농촌 지역에 있어서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아 집적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개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발이용이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내의 각 소권내 도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능을 분화 발전시키는 한편 서울에 집중하는 산업 및 문화시설을 권역 내외에 분산시켜 지역간의 유기적 상관관계를 유지시키므로써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수도 서울의 인구집중 현상을 완화시킨다.

(1) 권역간의 합리적인 기능분담

수도권은 그간 정부가 추진한 제 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자극을 받아 서울 및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접 도시지역에는 제반 산업시설이 집중 일로에 있으며 1970년에 이르러서는 수도권내에서의 공업생산액이 전국의 45.2%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타 권역과의 소득격차는 더욱 커졌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시설 등이 수도 서울에 편재하므로써 인구집중의 유인요소가 되었고 산업시설의 집중으로 인한 고용증대 직업선택의 다양화 등은 결국 사회적 인구의 유입을 불러 일으켜서 유례없는 인구증가 현상을 나타내어 1970년 수도 서울의 인구는 553만인에 달하여 전국인구의 17.6%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아무런 규제없이 방치한다면 수도권내의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또한 산업시설에 있어서도 집중현상이 계속될 것이나 전 국토의 합리적인 균형발전이란 관점에서 이를 억제하여 전국에 대한 수도권 내의 공업생산액을 29.9%선 정도로 인하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중심부에는 중추관리기능중 전국적이거나 국제적인 관리기능만을 담당케 하고 기타의 기능은 각 권역간의 보완적 관련을 가지면서 권역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기능을 분담시키는 한편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는 산업을 각 권역별로 분산 배치하고 학교시설의 평준화를 기하여 권역간의 격차를 완화시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한다.

(가) 권역내의 인구를 10,687천인 정도로 하고, 서울시의 상주인구는 약 630만인으로 하여 유입인구를 제한한다.

(나) 전국적 또는 국제적인 중추관리기능은 집적시키고 집중하려는 기타의 기능은 선택적으로 받아 드린다.

(2) 수도권내 각 지역별 기능분담체제의 확립

수도권의 담당기능을 권역내 각 지역에 그 지역특성에 알맞도록 적절히 배분하여 지역간의 유기적인 기능분담체제를 확립하고 배분된 각 기능이 상호보완적인 관련성을 가지면서 권역전체가 하나의 복합체로서 그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수도권 중심부에는 관리, 정보교환 등의 중추관리기능만을 집적시키되 앞으로의 중추관리기능은 한강 이남지역에 분산배치한다.

(나) 농업, 공업 등의 물적 생산기능 및 물자의 보관 수송 등의 물적 유통기능 및 연구교육기능은 권역내의 각 지역에 분산배치한다.

(다) 주택, 소매업, 서어비스 등의 일상생활기능은 중추관리지역, 물적생산지역 및 유통기능지역 등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그 주변에 배치한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 아래 서울을 중심으로 13개 도시지역은 물론 전 권역을 광역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도시지역을 개발의 거점으로 하고자 다음과 같은 주기능을 부여하여 개발한다.

- | | | |
|-------------------|-------|-----------------------------------------|
| ① 기성 시가지 중심부 | ----- | 중추관리기능 |
| ② 서울~인천축 | } | ----- 공업기능 |
| 서울~수원축 | | |
| 수원~인천축 | | |
| ③ 서울~춘천축 | } | ----- 경제작물, 목축 및 특별한 입지
조건이 필요 없는 공업 |
| 수원~원주축 | | |
| ④ 서울~의정부 및 서울~문산축 | ----- | 군사기능 |
| ⑤ 한강유역연혁 | ----- | 주택지 및 휴양지 개발 |
| ⑥ 기 타 | ----- | 근교 농업개발 |

(3) 인구 및 공업분산의 촉진

수도권이 차지하는 인구와 공업의 높은 비중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인구와 공업의 과밀로 인한 공해 등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방적 견지에서 재검토하여야 할 단계에 도달하였으므로 서울에 대한 인구 및 산업시설의 과감한 분산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인구 및 공업의 분산은 단순히 현 인구와 산업시설의 분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유입하려는 인구 및 산업시설을 통제하는 데에 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산업시설의 조속한 분산을 조장하여 각 권역과 주변지역을 균형발전시켜 소득 격차를 완화시키므로써 서울로의 인구집중을 방지한다.

(가) 서울의 광화문을 중심으로 반경 약 10km이내의 기존 시가지지역내에는 특정 시설 제한구역 설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중앙 도매시장, 정류장, 백화점, 공장,

학교(고등학교, 대학)의 신설은 물론 확장을 금지하는 한편 부적격 공업을 적극 이전한다.

(나) 서울시 지역내에는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도시형 공업 이외에는 건설하지 않으며 서울에 위치할 필요가 없는 관공서와 국영기업체는 연고지예로의 분산을 도모한다.

(다) 서울의 광화문을 중심으로 반경 약 30km밖의 지역은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인천, 수원, 안양, 의정부, 소사, 구리, 덕소, 성남 등 10개의 위성도시개발을 촉진한다.

(라) 위성도시에 조성한 단지내의 공장건설에 대하여는 지방공업장려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의 특별조치를 강구하여 분산공업을 유치한다.

(마) 교통시간의 단축으로 거리감을 해소시켜 수요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권역내 각 도시를 통근권내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서울 지하철 및 교외선 철도를 전철화하는 한편 도시 고속도로 교통망을 정비하여 주변지역을 서울의 생활권화 한다.

(4) 토지이용체제의 확립

산업발전과 더불어 도시사회의 구조는 급격히 다양화되고 있어 도시공해를 비롯한 많은 도시폐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시가지의 불규칙한 확산은 좋은 근교농업의 적지 및 녹지대를 점차 잠식하고 있다.

또한 기존 시가지내의 일부지역은 인구의 과다집중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었거나 지역성격의 변화, 시설의 노후등으로 기능이 저하되어 재개발이 불가피하게 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이용체제를 강화하여 토지의 이용을 고도화하여 도시폐해를 방지한다.

(가) 용도지역의 확립 수도권은 지형상 도시발전 추세로 보아 서울~인천, 서울~수원, 서울~의정부가 연합 도시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권역내의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지역제를 광역도시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① 일상생활기능, 물적유통기능, 생산기능 등을 분화 배치하여 토지 이용의 고도화를 기한다.

② 도시주변에는 위락 공간적인 보존녹지를 확보하여 도시민의 정서생활에 기여토록 하고 생산기능이 부여된 주변지역에는 차단녹지대(개발제한구역)를 두어 타지역과 분리시켜 공해방지를 기한다.

③ 부도심의 형성으로 중추관리기능의 일부를 분담케 한다.

④ 주거지는 상업지역, 업무지역 등의 업무위주지역과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그 주변에 배치하되 통근권인 1시간 이내의 도달거리내에 배치한다.

⑤ 한강상류 연안에는 공장을 건립할 수 없도록 하여 상수도 수원인 한강수의 오염을 방지한다.

(나) 재개발의 촉진 수도권의 중심도시인 서울은 6.25동란으로 입은 피해로 비정상적인 주택이 난립하고 있고 인구밀도도 또한 1ha당 1,000인 이상이 되는 지역도 있어 혼잡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지역은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며 시가지 중심부에는 중추관리기능의 집중으로 지역기능이 전도되어 이들 지역의 재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토지이용의 고도화와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4) 공공시설의 개발정비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시설을 단위지역을 중심으로 정비 확충시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제반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근린 지구단위별 주택건설과 연관시켜 공원, 학교, 보육원, 의료시설, 쇼펍시설 등의 사회시설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상하수도, 전기, 전신, 가스, 오물처리시설 등의 정비 및 분뇨와 공장폐수처리를 위한 지구 또는 건물 단위 정화처리시설의 설치, 지구 단위 공동 난방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 추진해야 하며 또한 통근 통학을 위한 교통시설과 주차장 보행자를 위한 전용도로 등의 교통시설을 정비해야 한다.

공공시설은 그 성격상 영구적 시설이므로 도시의 확대 및 시설활용 인구등을 감안하여 그 시설의 용량은 언제나 여유있게 시설하여야 하는 바 서울의 공공시설은 상주인구 6,300천인에 대하여 시설활용인구 8,000천인 내지 9,000천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정비하여야 한다.

(가) 교통시설 도시 특히 서울에 있어서는 시민 소득수준의 증대에 따른 증가교통량으로 점차 교통난이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통근 통학난을 완화하기 위한 대중교통 운송수단의 개발과 노

면 교통의 혼잡을 해소시키기 위한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등의 교통시설을 정비함에 있어서는 수도권의 중추적 관리기능과 타 권역 또는 인접지역 등과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광역적인 관점에서 정비하여야 한다.

① 서울에 지하철도를 건설하고 서울~인천, 서울~수원, 서울~의정부간의 철도와 교외선 철도를 전철화하여 지하철과 연결시켜 통근 통학난을 해소시키는 한편 서울의 인구분산을 도모한다.

② 차량증가에 따른 노면교통을 신속히 소통시켜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9개 방사선 도로, 4개 순환도로를 정비 개발한다.

③ 교통정비시설(신호 및 통제)을 근대화하여 교통의 안전과 신속처리를 도모한다.

④ 시외버스 터미널은 도시외곽부에 배치하여 도심교통난을 완화하는 동시 시내 공공주차장을 건설하여 노면주차를 금지시킨다.

⑤ 교통난 완화를 위한 간접방법으로서 도심부에 집중되고 있는 물적 유통기능을 교외부로 소산하여 교통량을 체계있게 분담시킨다.

⑥ 인천항은 국제항으로서 기능을 담당할 뿐 아니라 수도권의 수운의 관문으로서 배후지와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개발 정비한다.

⑦ 수도권의 교통 및 용수수요를 고려하여 서울댐 건설을 검토한다.

(나) 상·하수도 상·하수도시설은 시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되는 시설이며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용수사용량도 점차 증가될 것이므로 상수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안양과 수원, 소사와 인천의 광역수도를 계획 추진한다.

또한 서울에는 한강 상류부로 유입되는 하수도계통에 우선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여 한강 수질오염을 방지한다.

(다) 통신망의 확충 중추관리기능의 집적지인 서울과 타 지역간의 정보교환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권역내 각 도시와의 전화 통신망을 전면 자동화시키고 권역외는 즉시화 또는 자동화시키도록 통신망을 정비확충하는 한편 전자계산 조직을 중심으로 한 정보체계를 확립한다.

우편에 있어서도 산업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편물의 증대가 예상되므로 우체국의 신증설과 동시에 근대화된 시설로 정비한다.

(라) 종합경기장 국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을 위해 종합경기장 시설을 갖춘다.

(마) 휴양시설 지역내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 내부의 생활환경 조성과 필요로 하는 공한지나 도시근교부의 경관이 수려한 산지, 사적지, 왕릉, 사찰, 해수욕장, 유원지 등의 자연적 위락공간지를 정비 개발한다.

권역내의 위락공간지역으로 북한산성 및 남한산성을 국립공원 또는 시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광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정비 개발한다.

(6) 농촌지역의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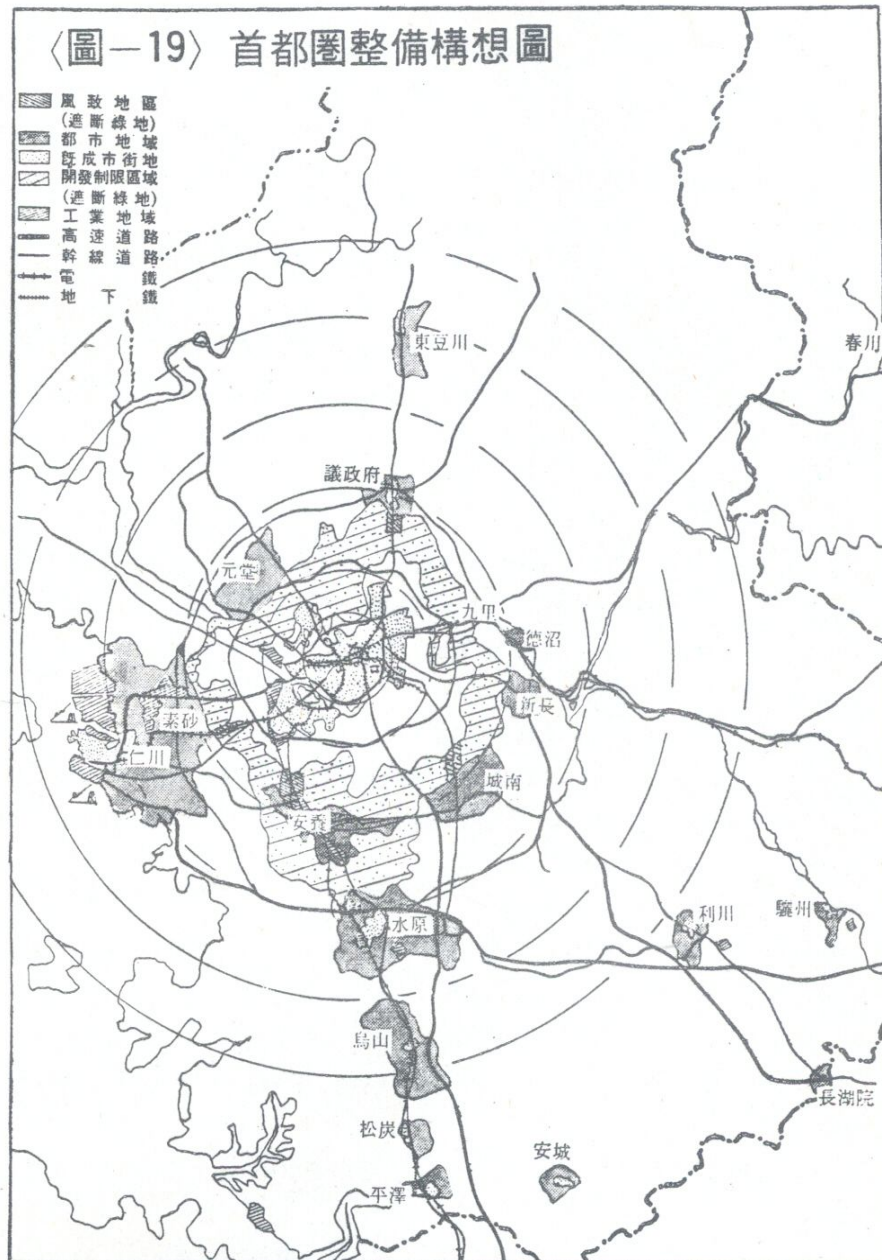
수도권내의 농촌지역은 타 권에 비하여 막대한 농산물의 수요지인 서울과 인접하고 있어 근교농업에 의한 농민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따라서 영업방법을 근대화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완화시킨다.

(가) 입지여건에 따라 고등소채(高等蔬菜), 화원, 과수, 낙농 등의 주산단지화를 촉진한다.

(나) 농촌지역은 경지정리 사업을 실시하여 기계화 영농으로 전환시킨다.

(다) 자연부락을 합리적으로 집단화시켜 생활환경을 정비 개선하여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년 전화(電化) 시키는 한편 농산물 수송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부락간 및 농장을 연결하는 농로를 건설한다.



3. 태백권 개발의 기본구상

가. 개발의 기본구상

본 권역이 포장(包藏)하고 있는 풍부한 광물과 수산, 산림 및 관광 등 자연자원을 개발하여 공업발전에 따른 권내 자원공급원으로서 기능을 강화한다.

동해안지역은 강릉을 중심으로 연결 개발하고 태백산 서부지역은 춘천 및 원주를 거점도시로 개발하여 수도권, 충청권, 대구권과 유기적인 세력관계를 형성토록 발전시킨다.

나. 개발방향

(1) 산지 이용조사를 토대로 산림지(山林地) 중 절대임지는 임산자원축적을 위하여 조림사업과 사방 등으로 이를 항구적으로 보호 보전하여 수려한 경관은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상대임지는 개가하여 경제작물 및 목야지로 개발하는 한편 고냉(高冷)지대는 조기 고등소채와 서류(薯類) 재배지역으로 개발한다.

(2) 동해안의 삼척 북평지구를 임해공업지역으로 개발하여 태백산지역의 지하자원을 원료로 한 기간산업을 발전케하고 충주지구는 기존 비료공업을 토대로 한 내륙공업지구로 육성하는 동시에 단양~제천지역은 풍부한 석탄과 석회석을 바탕으로 공업지역으로 개발할 가능성을 부여한다.

(3) 본권(本圈) 개발을 위한 교통시설로서는

첫째, 태백산맥으로 인한 동서간의 교통의 불편을 극복하고 산업지역의 교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강릉간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하여 태백 종단 및 제천~청주간과 동해안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는 외 산단지역에 산업도로를 건설한다.

둘째, 고한~황지간 철도의 신설 및 중앙선, 태백선, 영동선 등 산업철도의 전철화를 도모한다.

셋째, 묵호, 삼척, 속초항 등을 중점개발하는 한편 군소어항을 정비하여 수산개발을 촉진한다.

넷째, 전국적인 기간 통신망을 확충정비하기 위하여 강릉에 전화총괄국을 신설한다.

(4) 소양강댐을 건설하여 춘천지방의 용수를 공급하는 동시에 수도권에 대한 용수

공급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케하여 주요 하천개수 및 동해안의 해안 보전대책을 강구한다.

(5) 춘천지방의 5대호의 자연경관과 설악산 국립공원을 개발하는 한편 관광루트를 형성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한다.

4. 충청권 개발의 기본구상

가. 개발의 기본구상

우리나라 중앙부에 위치한 권역으로서 서북쪽의 예당평야와 서산평야 및 남쪽의 내포평야를 미작지대로 개발 보전하며 대전, 청주, 천안을 권역내 발전주축으로 하여 수도권을 비롯한 인접권역과 관련 개발한다.

특히 본 권역은 서울에서 분산되는 공업시설의 수용지역으로서 유망한 지역이며 수도권 정비와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개발될 것이다.

나. 개발의 방향

(1) 예당, 내포, 미호평야를 미작지대로 특화하기 위하여 경지정리에 의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한편 개간가능한 상대임지의 개발 및 서산지대의 간척가능지를 개발하여 농경지를 확대한다.

(2) 태안반도의 염전개발 및 아산만지역과 대천, 광천 연안의 대규모 백합양식단지를 개발 보전한다.

(3) 수도권의 공업분산 수용을 위하여 대전, 청주 등 기존공업단지의 육성을 도모한다.

(4) 금강과 삼교천의 홍수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하천개수를 강화하고 대청댐을 건설하여 지역내의 농업용수 및 대전시의 생활용수를 공급토록 한다.

(5) 천안~군산간 고속도로와 서울~김천간 및 제천~청주간 고속도로의 건설로서 권역내의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동시 전국 각 지역간의 유통기능을 강화한다.

(6)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계룡산, 속리산 국립공원을 개발하는 한편 온양, 유성, 덕산 등의 온천과 만리포, 대천 등의 해수욕장 및 수덕사, 현충사 등의 자연경

관 및 문화재 보전지를 상호 연결하는 광역 관광루트를 조성한다.

5. 전주권 개발의 기본구상

가. 개발의 기본구상

호남평야를 대식량(大食糧) 기지로 개발하고 전주, 이리, 군산, 비인을 공업지대로 개발하여 이출인구의 정착화를 도모한다.

나. 개발의 방향

- (1) 호남평야를 미곡생산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수리관개시설의 개선, 농로건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농업기계화를 도모한다.
- (2) 상대입지의 개간과 부창지구 간척 등으로 농경지를 확장하는 한편 경제작물 재배의 권장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
- (3) 서해안의 군산항을 중심으로 한 옥구, 부안군 등의 천해(淺海)패류 등 양식어업을 개발 보전한다.
- (4) 전주~이리와 군산~비인지구는 공업지역으로 개발하여 농수산물을 주로 한 원료자원형 공업과 임해성 중화학공업을 유치하여 고용을 증대함으로써 호남지방의 이출인구를 흡수하는 한편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한다.
- (5) 대전~이리간 호남선 철도의 복선화를 비롯하여 호남고속도로 및 금강대교의 건설과 군산항의 대대적 개발, 장항항의 정비 등으로 본 권역의 개발기반을 확충 정비한다.
- (6) 금강하류지대의 홍수조절을 위한 사방 및 하천개수를 강화한다.
- (7) 내장산 국립공원 및 변산반도 무주구천동의 관광자원을 적극개발한다.

6. 대구권 개발의 기본구상

가. 개발의 기본구상

금호평야 및 안동분지 등 낙동강 연안평야를 식량기지로 개발하고 대구, 안동, 포항을 권역내 거점도시로 육성하며 특히 대구를 권역내 중심도시로 육성하여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 광주권과 유기적 관련 개발을 도모한다.

나. 개발의 방향

(1) 낙동강 중류 연안평야와 금호평야, 안동분지의 농경지에 대한 관개시설의 확충정비와 경지정리 농로건설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동시 식량기지로서의 기반을 조성한다.

(2) 사과를 비롯한 연초, 인삼 등 주산단지의 개발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

(3) 대구, 구미, 포항을 공업지역으로 개발 육성한다. 특히 동남해안 중화학 공업 벨트지대의 기점인 포항의 제철 등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대구공업지구와 연관 개발하여 공업의 체계화를 도모한다.

(4) 영동선 철도의 전철화와 포항~속초간의 동해안 고속도로 및 경주~포항간과 태백 중단선 대구~원주, 대구~마산간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권역내 및 권역간의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대구~공주간의 국도를 조기에 확장 포장하여 광주권과의 교통기능을 강화하므로서 유기적인 개발을 도모하여 포항 신항의 대규모 개발과 수산개발을 위한 군소 어항을 정비한다.

(5) 안동댐, 임하댐, 영산댐 및 대천댐을 건설하여 낙동강의 홍수를 조절하는 동시 연안평야의 농업용수 공급과 각 도시의 생활용수 및 대구 구미공업지구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특히 영산댐은 유역 변경식 개발로 포항공업지의 공업용수를 공급한다.

(6) 하천 개수와 조림사업 및 내배수시설을 중점 실시하여 수자원 함양과 농토보호 및 농경지 확장을 도모한다.

(7) 경주 국립공원 및 동해안 일대의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 보전한다.

7. 부산권 개발의 기본구상

가. 개발의 기본구상

김해평야와 낙동강 및 남강연안 유역평야를 식량기지로 개발하고 울산, 부산, 진해, 마산, 삼천포를 공업대상(工業帶狀) 지역으로 개발 육성하여 국제진출의 기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나. 개발의 방향

(1) 농업적 토지자원이 풍부한 낙동강 중하류 연안 및 남강 연안의 평야와 김해평야를 식량기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관개시설의 개선 경지정리 농로건설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한다.

(2) 김해 금남지구의 간척으로 농경지를 확장하며 경제작물의 재배와 주산단지의 개발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

(3) 남해안의 어개류 및 양식장을 개발 보전하기 위한 동남해안 공업지역에서 유출되는 수질오염 방지책을 강구한다.

(4) 부산, 울산, 마산, 삼천포를 대규모 임해공업지로 개발 육성하여 정유, 석유화학, 제강, 기계, 비료 등 중화학공업을 유치하는 동시 사천, 진주 등 내륙으로 공업의 계열화를 도모하는 한편 C.T.S. 개발로 이 지역이 국제진출의 기지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5) 산청, 하동지구의 고령토와 물금지구의 광물을 개발한다.

(6) 남해안 고속도로와 마산~대구간 고속도로의 건설 및 부산 경주간의 산업철도의 전철화를 도모하는 동시 부산항의 대대적인 개발과 울산, 마산, 삼천포항을 개발 정비하여 임해공업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김해 국제공항을 건설하여 부산항과 더불어 국제간 교통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한다.

(7) 합천댐 건설과 낙동강 및 그 지류의 하천 개수와 조립사업을 강화하여 홍수조절과 농토를 보호하는 동시 이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과 부산 마산 등 주요 도시

에 대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한다.

특히 울산공업단지의 부족용수를 낙동강 물금지구에서 유역변경식에 의하여 공급한다.

(8) 한려해상 국립공원 개발을 적극 촉진하고 가야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해인사, 통도사 등 주요 문화재 보전에 역점을 두어 관광자원을 개발한다.

8. 광주권 개발의 기본구상

가. 개발의 기본구상

영산강 유역 및 해안지대 평야를 식량기지로 개발하고 광주~나주~목포를 대상(帶狀)으로 개발하여 지역발전 주축으로 하는 동시에 여수지구를 공업지역을 개발한다.

나. 개발의 방향

(1) 영산강 유역 및 서남해안 평야를 식량기지로 개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용수 개발 경지정리 및 농로건설 등 농업생산기반을 확충 정비한다.

(2) 영산강 유역 종합개발 및 진도 등 서해안지역의 간척으로 농경지를 확대한다.

(3) 서남해안의 낙도 개발을 위하여 통신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대규모 양식어업 개발과 군소어항을 정비한다.

(4) 여수 광양을 공업지역으로 개발하여 임해 중화학공업지로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광주를 내륙공업지로 계속 개발육성하며 목포지구는 인근지구에 포장된 토석원료로서 유리공업을 개발하는 동시에 수산가공공업을 육성한다.

(5) 광주~순천을 잇는 호남고속도로와 목포~순천간 및 나주~강진간 고속도로 건설 및 주요국도의 확장 및 포장의 조기 달성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여수항 및 삼일항과 목포항의 중점개발로 해운을 강화한다.

(6) 영산강 유역 종합개발을 위하여 영산강 하구언 건설과 장성댐, 담양댐, 대초댐의 건설로서 이 지역의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동시에 섬진강유역의 동북댐을 건설하여 유역변경식에 의한 광주시의 생활용수를 공급한다.

또한 하천개수와 조림 및 사방사업을 강화하여 수자원 함양에 역점을 둔다.

(7) 지리산 국립공원 개발과 백양사, 대흥사, 송광사 등의 주요 문화재를 보전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동시 이 지역의 풍부한 임산자원개발도 촉진한다.

9. 제주권 개발의 기본구상

가. 개발의 기본구상

한라산의 수려한 관광자원과 어업전진기지로서의 지리적 특수여건을 살려 제주시와 서귀포를 관련개발하여 국제적 관광지로 적극 개발한다.

나. 개발의 방향

- (1)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감귤 등 과수단지의 개발과 목축업을 육성한다.
- (2) 수산자원 개발을 위한 어장개발과 수산물 가공을 중심으로 한 공업개발을 촉진한다.
- (3) 유류 및 공업원자재 비축기지((C.T.S.)를 개발을 검토한다.
- (4) 국제공항을 건설하여 국제항공터미날로 발전 육성한다.
- (5) 한라산 국립공원을 적극 개발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한다.
- (6) 대륙붕 개발조사 등 해저광물 자원개발을 촉진한다.

제4부 계획의 관리와 집행

1. 집행수단의 설정방향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수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과제를 기본적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 ① 종합적 토지이용
- ② 개발효과를 크게 증진시키는 제도와 정책의 개선
- ③ 국토계획에 관련되는 관계법률의 정비와 제정

2. 종합적 토지 대책

국토계획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부분은 국토개발에 따르는 토지문제이다. 토지가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① 자연적 부존상태에서 보다 적합한 용도의 제공 ② 용도지정으로 투자에 대한 경제성의 확보 ③ 임의사용시의 공익성 저하 ④ 토지수요의 외곽적 확대에서 오는 공급의 상대적 감소 ⑤ 공공적 목적을 위한 토지이용시의 돌연변이적 지가 폭등 등이다.

특히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몇가지 현상은 행정권에 의한 규제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익의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집행수단을 확보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토지의 공공이용을 위한 제반대책이 가장 앞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대책의 확보도 법에 의한 규제와 정책에 의한 조정이라는 두가지 기조위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가. 토지이용의 법제화

국가의 공권력으로 토지 원 이용상의 용도를 설정해 놓고 설정된 용도이외에는 이용을 규제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의 근본과제이다. 이는 토지자체가 지니고 있는 가치의 극대화와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의 능률화 권리설정자의 편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권의 제한에서 오는 문제점이 없지 않으므로 재산가치의 보관전환에 불과한 보상제도 금지행위중 상대적 행위를 따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이용가능성을 유보하는 개발허가제도 등을 아울러 시행토록 한다.

나. 지가의 공시제

개발에 따르는 반사적 효과로서 ① 가격의 이상상승 ② 가수요의 조작 ③ 부동산 투기 등 거래질서에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가의 특징이다. 특히, 토지에 대한 공공수요가 높으면 높을수록 돌연변이적인 폭등현상을 가져 오는 것이 지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책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당위성의 과제는 개발효과와 지가와 의 함수관계에 있어서 더욱 심각하게 작용한다. 즉 보상비의 구성비가 시설비의 구성비를 압축함에 따라 투자효과를 감소시키는 반비례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실된 지가의 공정거래질서를 회복하고 개발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도로써 확보되어야 할 것이 지가의 공시제도이다.

즉 지가에 공정력과 공신력을 부여해서 거래가격을 표준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 상호간의 편익을 향유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존립의의라 할 수 있다.

다. 개발이익의 환수제

수익자 부담금의 원칙에 따라 공공투자로 인한 이익의 발생을 그 원인행위자인 공공투자기관에 환수시키므로써 개발기금의 회전에선 오는 재투자의 재원화를 기하고 개발몽리를 개발지역의 인근자에게만 불로소득과 부당이득을 독점시키던 몽리불균형의 부조리를 배제하는 일방 사회적 이익의 분배를 균등화하는 효능을 확보하는 것이다.

개발이익의 부과와 환수를 투자기관이 담당하고 수익자는 몽리(蒙利)의 정도와

순위에 따라 개발이익금을 부담한다.

또한 토지의 가수요를 억제하고 토지이용법제화에 따른 지정 용도를 위반한 경우 그 용도에 따르게끔 공한지세의 설정같은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3. 개발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가. 수도권정비의 촉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핵을 일정한 질서속에 받아드려야 할 서울의 도시기능은 그 적정규모를 넘어서 과밀집중이라는 이상 비대를 거듭하고 있다. 도시에 있어서의 과도기능은 생활의 편익을 침식하는 사회적 병리에 불과함으로 그 기능의 분담을 요구하게 되고 다시 그 요구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정한 단위 지역에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즉 도시기능의 합리적 분배속에서 질서있는 발전을 기하도록 개발하자는 필지(必至)의 명제(命題)가 수도권 정비의 촉진이기도 한다.

(1) 수도권정비의 방향

수도권에는 국가라는 행정주체 이외에 복합된 지방공공단체가 있다. 따라서 수도권을 정비하는 경우 행정주체 상호간의 업무관할이 문제된다. 수도권 정비가 수개의 지방행정구역을 하나의 단위로 광역적인 권역에서 이룩되는 이상 국가는 계획과 집행에 직접 참여 안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범위는 기간적이고 권역외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국한되어야 하므로 ① 정비의 기본계획 ② 개발의 기본이 되는 중요사업의 집행으로 압축되어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① 정비의 시행계획 ② 개발세부사업의 집행을 분담하되 국가의 조정을 받도록 해서 업무관할의 배분을 이룩한다.

(2) 수도권정비에 따르는 제도의 확보

다수의 공공단체가 공동으로 참가하게 되는 수도권의 정비는 사업의 다목적성에 기인되는 광범위화 때문에 따로 확보되어야 할 몇 가지 제도가 필요하다. 시행상의

주체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구역도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성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즉 복합된 것 상호간에

① 동일하게 준수되어야 할 원칙 ② 동일하게 행사되어야 할 방식 ③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할 통제 등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것을 수도권정비의 목적을 위해 집약한 것이 제도의 확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도권정비법의 제정 수도권을 형성하는 대상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동일 권역내에는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고 있다. 이로 인한 지역적인 기능과 구조의 부조리는 고도집중에서 오는 비능률과 지역적 불균형에서 오는 갖가지 사회적 악현상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다기한 지역환경을 정비하는데 있어서는 도시계획법의 준용이나 기존법의 보완에 의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즉 광역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고유의 법규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도권의 인구규모, 토지이용, 정비의 기본방향 등을 합리적으로 재편성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설치 수도권정비에 있어서는 사업계속의 장구성과 사업구조의 복잡성 때문에 정비사업을 관장할 기구가 문제된다. 현행의 다원적인 기존기구로 하여금 업무를 분할 관장하느냐 또는 단일기관으로 하여금 업무를 전담하느냐의 문제는 사업추진의 효과에 크게 관계된다.

사업착수의 초반기까지는 현행의 기존 기구에서 정비업무를 관장한다 해도 별다른 지장이 없을지 몰라도 사업이 본격화하는 중반기 이후부터는 단일기구에 의한 사업의 전담에 의하지 않고는 분야별로 전문화되고 구조별로 다양화되는 정비기능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에 설치되는 수도권정비기구에 부여될 수 있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의 작성 ② 정비계획의 집행에 관계되는 각급 행정관서 상호간의 업무조정 ③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의 집행

나. 광역국토개발협의회 구성

행정기구의 관할구역과 계획단위인 권역과의 불일치로 인한 행정기관 상호간에 관련된 계획수행상의 문제점을 조정하기 위한 광역국토개발협의회를 구성토록 한

다. 이러한 협의회는

가) 생활의 광역화의 진전에 따라 광역생활권내에 제 시설을 적정배치하는데 필요하며

(나) 도 및 정부직할시의 구역을 초월하는 광역적인 개발에 있어서 개발방향을 협의 조정하게 되며 수익 및 비용분담의 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4. 도 및 군 계획수립의 촉진

국토종합개발은 도 및 군건설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며 도 및 군계획은 본 계획을 구체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계획은 하위계획인 도 및 군 계획에 대하여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도는 본 계획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방향에 의거 본 계획을 보다 더 구체화되고 분화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 및 군계획의 수립없이는 본 계획이 목적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도군계획에 필요한 제 계획지표를 제시하는 한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한 계획수립을 촉진하여야 한다. 또한 도 군은 그 지역적 특성과 발전여건을 최대한으로 감안한 각급 계획을 조속히 완성하여야 할 것이다.

5. 법령 정비

이 과제는 두가지 측면에서 고찰되지 않으면 안된다.

하나는 법규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의 여건변화에 따라 마땅히 보완되어야 하는 경우의 「법령의 개정」이며 또 다른 하나는 생활관계의 확충에 따라 법규정의 새로운 수요의 자연증가에 따른 「법령의 제정」이다.

가. 관계법령의 개정

국토개발에 관한 최상위법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정점으로 부문별계획에 관련된 다수의 법령들이 있다. 이들의 복합된 다수법규들은 국토개발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능 분담의 범규이면서도 상위목적인 국토개발의 기본취지와 일치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계획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하위의 규정은 상위의 규정에 일치되도록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 계획의 진행에 따라 보완되어야 할 분야도 많다. 이것은 모순을 수정하는 것과는 달리 여건의 변화나 방법의 개선등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개발의 목적이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시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는 그 순위가 있어야 한다. 개정을 요하는 많은 범규 가운데 우선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법률은 다음과 같다.

대상법령	개정의 요점
지방공업개발법	개발장려지구의 특혜범위를 확대한다.
지방세법	수도권에 집중하는 시설 등에는 지방세부과를 가중시킨다.

나. 관계법령의 제정

법제정 수요가 가장 높은 것은 토지의 공익이용을 위한 법률이다. 토지의 공익이용을 위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의 법제화」에서 구상한 대로이나 이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적어도 아래와 같은 사항이 그 규제대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 ① 토지조사
- ② 토지의 공공이익 이용
- ③ 토지의 용도규제
- ④ 토지세제에 대한 특례

이 법률은 제정수요가 크다는 것 이외에 제정의 긴급성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국토개발에 작용하는 토지의 기능을 생각 할 때 법령제정상의 상당한 우선순위를 지니고 있다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은 수도권정비법이다.

- ① 인구 및 산업시설의 분산 ② 도심권의 재개발 ③ 공해문제의 해결 등 도시환

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수도권의 기능을 재편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성시가지와 근교지대와는 환경시설의 격차에서 오는 괴리현상이 없도록 ① 기본계획 ② 정비계획 ③ 사업계획을 통해서 적정히 규제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광역계획을 요하는 용수공급체계와 교통통신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도 아울러 규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토개발과 관련시켜 장치 제정되어야 할 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토지이용기본법
- ② 수도권정비법

6. 국토계획의 관리

가. 투자심사제에 의한 계획의 합리적 조정

국토계획의 관리면에 있어서 확보되어야 할 수단은 투자심사제이다. 이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 포함하고 있는 단위사업계획을 실제적인 집행과정에서 상호 연결 조정하여 계획의 체계화를 이루고 시행착오 없는 투자를 하는데 있다.

그 내용은 경제적 및 기술적 타당성과 재무상 건전성의 분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부문별 선정기준과 이에 따른 각종 기준자료를 정비하여야 한다.

나. 기관별 계획집행의 확인

다원적 집행체계와 진도 분석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집행의 성과에 대한 평가의 곤란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원화된 기관별 계획집행을 확인 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한다.

이러한 확인제도가 확립됨으로써 계획의 강력한 집행을 보장하고 집행장애 요인을 합리적으로 제거하여 계획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